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Analysis of main points of budget
proposals of public institution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민석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오지은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지원 | 박혜림 행정실무원
심의영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분석시리즈 Ⅲ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2023년도 보조, 출자, 출연 등 정부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건·복지·고용, 교육, R&D 분야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4조원(5.2%)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은 112.4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은 2019년 15.8%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등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수입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350개 공공기관 전체의 정부지원 예산안을 개관하고 공공기관 예산안의 주요 현안을 분석한 「중점 분석」과 위원회별로 개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한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예산안, 16개 전문기관의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제도 현황 등 시의성이 높은 현안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산출 근거의 정확성 제고, 사업계획 미흡, 사업 성과분석 필요성,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안 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중 점

1. 202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3
2.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분석 41
3.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81
4.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제도 현황 분석 128

중점



가. 공공기관의 현황

(1) 공공기관의 개념과 연혁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자·투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요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동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²⁾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및 변동 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동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세부적인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

구분	내용	예시
1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일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2호	정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할 것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 등
3호	정부지분 $\geq 50\%$ 또는 $30\% \leq$ 정부지분 $\leq 50\%$ 이면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 보유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호	정부 및 1~3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분 $\geq 50\%$ 또는 $30\% \leq$ 정부지분 $\leq 50\%$ 이면서 사실상 지배력 보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호	1~4호 기관 지분 $\geq 50\%$ 또는 $30\% \leq$ 지분 $\leq 50\%$ 이면서 사실상 지배력 보유	강원랜드 등
6호	1~4호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 지정

(이하 생략)

다음으로 공공기관 법제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적극적인 공기업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정부기업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및 독립채산제를 확립하고자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³⁾. 따라서 당시의 공공기관 법제는 주로 정부기업⁴⁾과 정부투자기관⁵⁾을 중심으로, 공공요금의 결정,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회계와 결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80년대 들어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1983년)하여 관련 법률을 일원화 하였다⁶⁾.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는, 이미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조직을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집행기능을 전문화하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⁷⁾

3) 최용진, 「공기업법제의 변천과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3권제4호, 2012.11., 371면.

4) 「기업예산회계법」(법률 제928호, 1961. 12. 31., 제정)
제2조(정부기업의 정의) 본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교통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 사업을 말한다.

5)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법률 제1119호, 1962. 8. 13., 제정)
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의 5할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중 그 재산의 5할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3. 한국은행
②전항제1호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귀속기업체는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법률 제3690호, 1983. 12. 31., 제정)
부칙 제2조 (법률의 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7) 제11대 국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안(의안번호 110516, 정부 제출) 제안이유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강화,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 구조의 개선 및 효율화 등 공공기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⁸⁾까지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기업의 분류(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의 분류(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의 개념,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및 경영 공시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졌으며, 이후 13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 관련 법제 연혁]

구분	내용
1960년대	「예산회계법」(1961), 「기업예산회계법」(1961),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
1970년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1980년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폐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2000년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폐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주: ()은 제정연도

8)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법률 제7057호, 2003. 12. 31.,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주무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유형과 지정 현황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및 자체수입액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의 관리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된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및 구분 기준]

유형		구분기준	기관 예시	운영방향
공기업	시장형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민간기업 수준 자율보장 ·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준시장형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 자율성을 확대하되, 공공성을 감안하여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위탁집행형	·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 주무부처 정책과 연계성 확보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교병원	· 성과관리, 업무효율성 중시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이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이다. 2021년도에 비하여 기관의 신설, 지정요건 충족 등으로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개이고, 기관해산 또는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은 총 2개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구분	'21년	'22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 시장형	15	15	-			-
■ 준시장형	21	21	-			-
② 준정부기관	95	94	△1		△1	
■ 기금관리형	13	13	-			
■ 위탁집행형	82	81	△1		△1	
③ 기타공공기관	218	220	+2	+3	△1	
계	349	350	+1	+3	△2	-

주: 2021년의 경우 연초에는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었으나,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조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수는 349개로 변동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기관 목록]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해제 사유
신규 (+3)	복지부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
	산업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기타공공기관)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기타공공기관)	21년 설립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해제 (△2)	문체부	아시아문화원	기관 해산(22.1.17.)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요건 미달 (정부지원액 비중 50% 미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

나. 202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1) 총계

공공기관은 교통, 에너지, 보건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출연, 보조, 출자 등의 예산 지원을 하거나 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 또는 법령상 독점적 사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순지원수입(정부지원 예산)⁹⁾이란,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출연금¹⁰⁾, 출자금¹¹⁾, 보조금¹²⁾, 부담금¹³⁾, 이전수입¹⁴⁾, 위탁수입¹⁵⁾, 기타수입¹⁶⁾으로 구분하여 집계되고 있다.

9) 정부순지원수입은 국가 재정(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직접 지원되는 금액으로 수입 지출 총괄표의 정부 직접지원, 간접지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사업수입(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수입)일지라도 정부 재정부로부터의 수입이면 정부순지원수입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 지침」).

10) 출연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출자금은 정부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출자하는 금액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출자 등이 있다.

12)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보조금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13)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이 있다.

14) 이전수입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으로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이전수입을 통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15) 위탁수입은 법령에 해당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으로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운송사업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사업 수입,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국가어항관리 수입 등이 있다.

16)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의 이자 등 운용수익

정부순지원수입은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공공기관의 수입이므로, 보조 또는 기금 전입 자금의 단순 전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자금과 민간으로부터의 전입액 등 정부 외 주체가 지출하는 수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정부순지원수입은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고 공공기관이 순수하게 집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파악·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순지원수입의 유형별 구분]

구분	내용
출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수입액
출자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자금 수입액
보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수입액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수입액
이전수입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위탁수입	정부와 직접 체결한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액
기타수입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의 이자, 부대수입 등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¹⁷⁾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총 298개로 집계되었으며,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총 112.4조원으로 조사되었다.

17)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또는 예산안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 중 수입 및 지출 현황(24번)의 정부순지원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350개 공공기관(2022년 10월 기준, 부설기관 제외)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정리하였다.

- ① 정부 세출예산안 또는 기금 지출계획안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취합하였다.
- ② 공공기관이 지원받는 위탁사업 지원 등 현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일부 수입은 추정금액을 제출받아 작성하였다. 따라서 2023년도에 실제 집행되는 예산 내역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정부순지원수입과 정부세출세부사업명이 각각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일반회계, 다른 기금 등)로부터 기금에 지원(전출)되는 세출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④ 정부순지원수입 중 기타수입은 정부가 직접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정부의 2023년도 전체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2022년도 예산(607.7조원) 대비 5.2%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또한 2022년도 예산 대비 3.5%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2022년도(17.9%)와 유사한 상황이다.

[2023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비중]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기관 정부지원 총 예산(안)(a)	116.8	108.7	112.4	3.8	3.5
정부 총지출(b)	600.9	607.7	639.0	31.4	5.2
비중(a/b)	19.4	17.9	17.6	△0.3	△1.7

주: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2022.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예산안 주요내용'(2022.8.30.),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규모 및 증감 현황

① 예산안 총 규모 상위 20개 기관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의 총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37조 1,30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 8,543억원), 공무원연금공단(5조 6,491억원), 국가철도공단(5조 6,256억원), 한국장학재단(5조 736억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제도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주요 지원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7조 16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9조 1,494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로부터의 전입금(5조 6,491억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출연금(5조 5,713억원),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4조 5,664억원)이다.

정부지원 예산안 상위 20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90조 6,568억 원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합계(112조 4,358억원)의 80.6%에 달한다.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상위 20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99,693	314,701	371,30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17,351	130,589	138,543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42,375	47,906	56,491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57,143	56,618	56,256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44,638	52,144	50,736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38,101	53,382	43,37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33,665	35,657	35,068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25,492	28,982	31,353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565	23,963	16,440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9,819	10,954	12,64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7,998	12,566	12,18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407	9,877	10,90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684	9,827	10,40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7,829	8,836	9,949
환경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8,786	10,048	9,35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2,670	2,391	8,95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9,836	30,363	8,545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과학기술정보 통신부/행정안전부 공동관리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9,846	14,599	8,47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7,152	8,595	7,97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6,493	8,551	7,799
20개 기관 계(a)		928,543	870,549	906,742
전체 공공기관 합계(b)		1,167,990	1,086,767	1,124,358
비중(a/b) ¹⁾		79.5	80.1	80.6

주1: 표에 따른 상위 20개 기관의 비중은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상위 20개 기관에 해당하는 값으로, 2021 결산 및 2022 본예산 기준 각각의 상위 20개 기관은 표에 따른 기관과 일치하지 않음.
2021 결산 및 2022 본예산 기준 상위 20개 기관의 비중은 각각 82.2%(21) 및 80.5%(22)로 2023년의 비중과 유사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예산안 증액 규모 상위 5개 기관

2022년 예산과 비교하여 증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조 6,605억 원 증가), 공무원연금공단(8,585억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7,954억원 증가), 서민금융진흥원(6,562억원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2,884억원 증가)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5조 6,201억원 증가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국가로부터의 전입금이 8,585억원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에서 4,65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 2,350억원의 보전금이 증가하였다. 그 외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3,126억원 증) 및 청년도약계좌(3,526억원 신규) 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800억원 증) 등이 주요한 증가 내역이다.

[정부지원 예산안 증액 규모 상위 5개 공공기관 예산안]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99,693	314,701	371,305	56,605	18.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42,375	47,906	56,491	8,585	17.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17,351	130,589	138,543	7,954	6.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2,670	2,391	8,953	6,562	274.5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360	276	3,160	2,884	1045.2
계		462,449	495,863	578,452	82,590	16.7

주: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예산안 감액 규모 상위 5개 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의 감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은행이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사업에서 2조 2,402억원이 감액(사업 종료)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출자 사업(다가구매입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총 9,82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공사 일정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등의 사업에서 총 7,523억원이 감액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경우 행정공공기관노후장비통합및클라우드전환 사업(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물량 감소)과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사업(데이터구축 종수 감축)에서 총 5,051억원이 감액되었고,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뉴딜펀드 출자 사업의 조성규모 및 재정지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3,800억원이 감액되었다.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 규모 상위 5개 공공기관 예산안]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9,836	30,363	8,545	△21,818	△71.8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¹⁾	38,101	53,194	43,371	△9,823	△18.5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565	23,963	16,440	△7,523	△31.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9,846	14,599	8,470	△6,129	△42.0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31,875	7,300	3,500	△3,800	△52.1
계		260,223	129,419	80,326	△49,093	△37.9

주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상의 2022년도 정부순지원수입은 3조 9,49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022년도 (본예산) 순지원수입은 5조 3,194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는 실제 편성된 예산이 아닌 예상 소요액을 기재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기관유형별·지원유형별 현황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을 기관 및 정부지원의 유형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 및 지원 유형별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보조금	부담금	위탁수입	이전수입	출연금	출자금	계
공기업 (시장형)	155 (12.1)	-	133 (10.4)	-	-	994 (77.6)	1,281 (100)
공기업 (준시장형)	8,680 (11.4)	-	2,385 (3.1)	-	920 (1.2)	64,011 (84.2)	75,996 (10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046 (0.7)	-	678 (0.1)	440,505 (94.3)	18,568 (4.0)	4,100 (0.9)	466,897 (100)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171,174 (37.7)	18,262 (4.0)	27,013 (6.0)	39,913 (8.8)	197,448 (43.5)	180 (0.04)	453,990 (100)
기타공공기관	22,491 (17.8)	1,080 (0.9)	6,865 (5.4)	3,749 (3.0)	88,509 (70.1)	3,500 (2.8)	126,194 (100)
계	205,546 (18.3)	19,342 (1.7)	37,074 (3.3)	484,167 (43.1)	305,445 (27.2)	72,785 (6.5)	1,124,358 (100)

주: 1.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괄호 안은 기관유형에서 지원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행 합계에 대한 비중)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시장형 공기업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가 가장 적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예산안의 대부분은 출자금(77.6%)이다. 출자금 예산 994억원은 한국석유공사에 전액 출자될 예정이며, 유전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업에 974억원,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에 20억원이 출자될 예정이다.

② 준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또한 정부지원 예산안 중 출자금의 비중이 전체의 84.2%로 가장 높았다. 출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통합공공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등 4조 1,973억원), 한국도로공사(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건

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건설 등 1조 6,440억원),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지원, 광역상수도 안정화 등 4,285억원), 한국철도공사(수송차량 구입, 도시철도 노후차량 구입 등 704억원) 등 6개 기관에 편성되어 있다.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수입이 정부지원 예산의 거의 대부분(94.3%)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 또는 기금의 전입금 형식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37조 265억원), 공무원연금공단(5조 6,491억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1조 900억원), 근로복지공단(1,26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789억원) 등 7개 기관이 전입금 형식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주로 출연금(43.5%)과 보조금(37.7%)으로 정부지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출연금은 국가철도공단(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등 5조 6,256억원),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지원 등 5조 657억원), 한국국제협력단(ODA 사업 등 1조 20억원),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9,949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등 8,470억원) 등 총 46개 기관에 19조 7,44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등 11조 6,412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시장경영혁신지원 등 7,922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등 6,733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등 4,697억원) 등 총 44개 기관에 17조 1,17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⑤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또한 주로 출연금(70.1%)과 보조금(17.8%)으로 정부지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출연금은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사업정책지원 등 3조 1,353억원), 학교법인한국폴리

텍(대학운영 지원 등 3,470억원),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 등 2,669억원),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 등 2,281억원) 등 총 118개 기관에 8조 8,509억원이 편성되었다.

보조금은 대한체육회(3,932억원), 중소기업유통센터(1,170억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80억원) 등 총 73개 기관에 2조 2,491억원이 편성되었다

(4)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안의 비중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정부지원수입(직접지원수입, 간접지원수입) 외에도 부대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순지원수입(정부지원 예산)은 공공기관 총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공공기관의 총수입구조]

구분		수입명
정부지원수입	직접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간접지원	사업수입, 독점수입, 부대수입
정부지원 외 수입		기타사업수입, 기타부대수입, 차입금, 기타

주: 정부지원 외 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기타부대수입은 기타사업수입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 총지출에 대응되기 때문에 총수입액은 해당 공공기관의 연도별 사업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지원 예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총수입을 비교하면 각 공공기관의 총수입에서 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 예산이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예산 기준 13.8%로, 2021년 결산 기준치인 15.4%에 비하여 약 1.6%p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13~15% 정도를 정부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전년 대비 1.6%p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 비중 현황(2021~2022)]

(단위: 억원, %, %p)

공공기관 유형	2021년 결산			2022년 본예산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변화 (F-C)
	정부지원 예산(A)	총수입 (B)	비중 (C=A/B)	정부지원 예산(D)	총수입 (E)	비중 (F=D/E)	
공기업 (시장형)	1,324	1,708,246	0.1	1,259	2,049,296	0.1	-
공기업 (준시장형)	72,694	888,738	8.2	92,572	1,058,605	8.7	0.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91,873	1,823,611	21.5	401,040	1,871,770	21.4	△0.1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558,350	1,791,326	31.2	465,563	1,646,390	28.3	△2.9
기타공공기관	143,749	1,364,470	10.5	126,334	1,274,705	9.9	△0.6
계	1,167,990	7,576,392	15.4	1,086,767	7,900,766	13.8	△1.6

주: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자체사업수입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¹⁸⁾하게 되므로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고, 그에 따라 총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이 주요 사업임에 따라 총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총계의 측면에서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대부분 유형의 공공기관에서 총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한 후 2022년도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8) 공기업 지정요건

- 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다. 202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총괄 분석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첫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규모는 총 112.4조원으로 2022년 예산 108.7조원 대비 3.8조원(3.5%)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규모가 70조 내외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 95.7조, 2021년에 116.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4131-317)의 2021년도 계획액은 601억 4,6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13조 7,911억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4131-325)의 경우에도 2021년도 계획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2조 4,263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이후 2022년 및 202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각각 108.7조원 및 112.4조원으로, 2021년도 정부지원 예산 116.8조원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2016~2023)]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	2023 예산안
공공기관 정부지원 총 예산(안)(a)	67.7	69.6	69.8	76.6	95.7	116.8	108.7	112.4
정부 총지출(b)	384.9	406.6	434.1	485.1	549.9	600.9	607.7	639.0
비중(a/b)	17.6	17.1	16.1	15.8	17.4	19.4	17.9	17.6

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과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탁수입 등 추가적인 증가 요인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도 위탁수입 등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있어, 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추가적인 수탁계약 체결, 보조금 교부 등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사업시행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예산안 확정 후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산림청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에 2021년 당초 예산으로 40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추가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평가시험’, ‘산림복지통계실태조사’ 사업 등을 수탁하였고, 이에 정부로부터 23억 4,7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다.

[202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부지원 사업 추가 수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당초 2021년 예산 반영 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40,883
	소계(a)	40,883
추가 수탁사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평가시험	251
	산림복지통계 실태조사	362
	산림복지 민간분야 장애인 신규 직무개발	19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 개발(세부연구)	326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90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교육(숲체험과정)	319
	2021년 교정공무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50
	2021년 해양경찰 산림치유 프로그램(위탁교육)	7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산림교육 위탁	48
	2021년 국립하늘숲추모원 운영·관리 위탁	511
	2021년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 위·수탁	200
	소계(b)	2,347
총합계(a+b)		43,230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즉,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있으므로,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예산안의 분야별 재정투입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동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분야별 재정투입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2023년 예산의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마련으로 국정과제 이행¹⁹⁾,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19) 정부 국정과제: ① 병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 ②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도입(월 70만원) ③ 청

강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핵심 정책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 예산안의 분야별 지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교육 분야’, ‘R&D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²⁰⁾에서 지출 증가가 나타난 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SOC 분야’에서 지출 감소가 나타났다.

[2022년 및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총 지출	607.7	639.0	31.4	5.2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8.9	4.1
2. 교육	84.2	96.1	12.0	14.2
3. 문화·체육·관광	9.1	8.5	△0.6	△6.5
4. 환경	11.9	12.4	0.5	3.9
5. R&D	29.8	30.7	0.9	3.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5.6	△18.0
7. SOC	28.0	25.1	△2.8	△10.2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0.6	2.4
9. 국방	54.6	57.1	2.5	4.6
10. 외교·통일	6.0	6.4	0.4	7.3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0.5	2.4
12.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3.6	13.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2022.8.30.)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정부의 2023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에 따라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도 2022년 대비 증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급, ④ 청년도약계좌 도입(청년 월 40~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상공인 부실 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한 출자) ⑥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저장버스 확대 등)

20) 다만,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는 재원이 중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측면에서 다른 분야를 검토하였다.

[분야별 정부지원 예산안 변동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분야	기관명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출 증가	보건· 복지· 고용	국민연금공단	314,701	371,305	56,605	18.0
		국민건강보험공단	130,589	138,543	7,954	6.1
		공무원연금공단	47,906	56,491	8,585	17.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877	10,900	1,023	10.4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8,836	9,949	1,113	12.6
	교육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4,226	5,013	787	18.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3,223	3,470	247	7.7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917	1,006	89	9.7
	R&D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2,019	2,228	209	10.3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242	1,377	135	10.8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1,526	1,686	159	10.4
	농림· 수산· 식품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3,297	4,118	820	24.9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1,473	1,725	252	17.1
지출 감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30,363	8,545	△21,818	△71.8
		한국산업은행	7,300	3,500	△3,800	△52.1
	SOC	한국도로공사	23,963	16,440	△7,523	△31.4
		국가철도공단	56,618	56,256	△363	△0.6
		한국산업단지 공단	5,063	4,098	△965	△19.1
	문화· 체육· 관광	한국관광공사	4,299	4,108	△191	△4.4
		국제방송교류재단	483	382	△102	△21.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지출이 증가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의 공공기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착²¹⁾을 위한 영세·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강화 등에 따라 국민연금공단²²⁾,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예산 대비 787억원 증가 하였는데, 이는 교육정보보호사업의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한 대학운영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 예산안도 247억원 증가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지원 예산안이 89억원 증가하였다.

R&D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관련 정부지원 예산안에 신규 과제가 다수 추가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 ‘공존지능형 메타봇 기술 개발 사업’ 등의 신규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안이 209억원 증가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는 ‘청정수소 생산-저장 및 탄소저감 모니터링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스마트 센싱 및 디지털 의료공정 핵심기술 개발’ 등의 신규 과제가 추가되면서 135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안이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대비 82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식품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확산 사업의 확대 및 쌀가루산업화지원 사업의 신설 등에 기인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도 252억원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정부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대비 2조 1,818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사업이 종료된 것에 기인한다. 한국산업은행 또한 뉴딜펀드 출자 및 녹색금융 출자 사업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2022년 예산 대

2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4.1월부터 50인 이상 →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22)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정부순지원수입(정부지원 예산)으로 인식한다.

비 3,800억원 감액되었다.

SOC 분야 또한 정부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감액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대비 7,523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도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안이 363억원 감액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또한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등의 예산안이 감액됨에 따라 965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안이 감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예산 대비 191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4264-319)의 내역사업인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의 조성 기간(1년→2년) 및 연차별 지원 금액 변경에 기인하고 있다.

2023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분야별 분석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고용 분야

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사업’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생산세포주(백신의 기초소재)의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GMP기반의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은 공사비(31억원) 및 장비비(30억원)로 편성되었는데, 설계 전 절차의 지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도 공사비 예산안 또한 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동 사업의 진행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23년 배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²³⁾

2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②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 공동훈련센터의 신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 투자 비율 확대 필요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은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이 설립한 공동훈련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공동훈련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공동훈련센터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인건비 및 운영비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고, 시설·장비비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에 사용되는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차가 오래된 공동훈련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이 주로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고, 신규 장비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할 경우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사업목적의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신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⁴⁾

③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 예산 보증료 수입의 적절한 추계를 통한 편성 필요

근로복지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의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사업은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많은 경우, 해당 차액을 중소기업계정에서 보전하는 예산으로 2023년도에 237억 1,600만원(= 37,720백만원(총지출) - 14,004백만원(자체수입))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자체수입 계획(140억 4백만원)의 세부 내역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보증료 수입) 계상을 위해 추정한 용자 계획안과 실제 2023년도 계획안으로 편성된 용자 계획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제보다 보증료 수입이 과소 추정되어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편성된 용자계획안을 반영하여 보증료 수입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이에 따라 조정되는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또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²⁵⁾

p.96~101 참조

24)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41~147 참조

25)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33~136 참조

2. 교육 분야

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의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은 해산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운영비, 채무 변제)을 용자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학교법인 청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의 세부 산출근거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산된 학교법인 중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 3개교를 대상²⁶⁾으로, 각 학교에 대해 ① 청산절차 운영비 1억 5천만원과 ② '2022년 3개 폐교대학의 평균 채무액'인 34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 지원대상인 청산이 미완료된 3개 학교는 모두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담보가액이 될 자산 및 변제해야 할 채무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교육부의 해산명령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2023년 지원 대상 학교 중 일부는 소송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학 역시 청산절차 진행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2023년 예산안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3년 청산 절차를 진행할 폐교 대학의 용자수요를 좀 더 면밀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현재 지원대상 학교의 청산절차 진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⁷⁾

②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관리 철저 필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은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 해소,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설계비 10.4억원, 공사비 34.2억원 등 총 5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 건립 사업의 2022년 10월까지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37.5%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26) 교육부는 동 사업비를 활용하여 향후 발생하는 신규 폐교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7)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p.109~117 참조

과정에서 공사발주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 총사업비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의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현재 ① 부처 간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② 2022년 내 기본계획 확정·고시 완료, ③ 2023년 1월부터 6개월 내 설계·공사업체 입찰공고, 기본설계 진행 및 심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단계를 마무리하여야 우선시공 분 공사 착수 및 17.5%의 기성률을 진행하여 143억원의 공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동 사업이 지연되어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2023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²⁸⁾

3. 문화·체육·관광 분야

①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에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19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사업이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3,150백만원)은 관광단지 내 하수처리장 건립사업(1단계)에 대한 2차년도 공사비(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 공사) 내역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공사비 예산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2023년도 예산안 또한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⁹⁾

28)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2022. 10., p.103~108 참조

29)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5~8 참조

②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의 전제 조건인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조속한 마련 필요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현재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를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함으로써, 청와대 권역 관광 안내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해 청와대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마련하려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와대 사랑채 개편(안)에 따라 산출된 2023년도 예산(안) 7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현 시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개편(안)에 따라 추정한 예산이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기간, 소요액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은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에 따라 청와대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공간성격,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과 이에 대한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수립이 지연될 경우 동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동 사업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을 국회 심의기간 동안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⁰⁾

4. 환경 분야

① 입찰 담합 조정결정금 수익을 고려한 4대강 사업 부채상환계획 마련 검토 필요

수자원공사지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7조 9,780억원)에 소요된 채권 발행에 따른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 15.4조원 중 국가재정으로 7.4조원을 부담하고, 8.0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채무 원금(7조 9,780억원)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70% 수준(5조 5,48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30%(2조 4,300억원)를 부담하며, 관련 발생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0)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4~18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참여 17개 건설사 간 입찰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확인됨에 따라, 2014년 3월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건설사로부터 2,364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납부 받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입 2,364억원의 활용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여,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¹⁾

② 환경부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재검토 필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녹색경제활동 확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의 주 내용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경제활동 관련 회사채(이하 “녹색채권”)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신용도가 낮고 녹색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금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녹색채권 발행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수요조사조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 대비 발행조건이 까다롭고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채권 발행체계를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도입 시,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많지 않거나 공모 신청 기업 수가 계획에 미달함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안 규모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녹색채권 발행규모 추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²⁾

31)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07~113 참조

32)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14~123 참조

5. R&D 분야

①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안 검토 필요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 이하 “RAON”)를 건설·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동 사업은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와는 달리 RAON의 구축 과정에서 사업 기본계획이 4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이 순연되었고, 2022년도 예산 또한 시험시설 용량과 전문인력 부족, 세부 추진계획 미확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 체결 지연에 따라 2022년 9월 기준 실행행률이 0%인 상황이다.

따라서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³⁾

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의 기업 매칭 계획 및 협의 구체화 필요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이하 “개방형 R&D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민간·대학·출연(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양자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양자기술 산업화의 초석이 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 R&D 사업에서의 기업 매칭에 대해서 특정 기업의 참여와 매칭 부담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고,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 또한 미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방형 R&D 사업에서의 기업 매칭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업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⁴⁾

3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54~159 참조

34)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60~163 참조

6. 농림·수산·식품 분야

①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필요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은 쌀가루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활용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산출내역에 따르면 15개 제품에 대하여 쌀가루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2억원의 8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10월~11월 중에 관련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출단가, 지원 업체 수,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는 설명인데, 이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운영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자격, 지원 요건, 지원제품의 종류, 산출단가 등에 대한 상세자료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선행 조건인 개발 수요조사 및 분질미의 공급 계획 등에 대한 상세 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구체적인 운영방향 등이 담긴 세부계획을 예산심의 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³⁵⁾

② 농식품시설현대화 및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시설자금 사업, 사업 성격의 유사점을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의 품질향상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이고, 시설자금 사업은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이다.

2개의 사업은 지원 자격과 용자한도에서만 다소 차이날 뿐 농식품 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고,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35)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45~47 참조

2개의 사업 모두 실행이 저조한 사유는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사업 신청이 감소하거나 기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더 낮은 금리로 실시하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행이 저조하고, 사업내용도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없는 시설자금 예산(48억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2개의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⁶⁾

③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목적 달성을 고려한 적정 이익금 활용방안 마련 고려 필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를 보면 2020년 및 2021년도에 금융상품 평가이익(투자 영업수익)이 급등하면서 각각 2조 5,825억원과 4조 1,80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18년 말 대비 6조 6,109억원 증가한 6조 3,726억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 발생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여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이익이 당기순 이익에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대규모의 평가이익(미실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당 이익금 활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상의 주주 이익 배당과 관련한 기준 마련 등 동 기관에서 발생된 이익금의 적정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⁷⁾

36)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Ⅱ」, 2022. 10., p.39~44 참조

37)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Ⅱ」, 2022. 10., p.59~66 참조

7. 국방 분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의 운영 보완 필요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은 국군 병사 및 전역예정자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SW·AI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자기개발과 전역 이후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병사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SW, AI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하 “맞춤형 온라인 교육”이라 한다)과 ② 장병들이 데이터분석, 정보처리기사 등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맞춤형 온라인 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과정을 듣고자 하는 군 장병이 나라사랑포털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레벨테스트를 거쳐 입문·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방식인데, 동 교육과정과 사업시행기업에 따라 수료율의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성과 평가 및 면밀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³⁸⁾

(3) 실집행이 저조한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관리 필요

실제 집행기관인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실집행 제고를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액을 공공기관으로 교부하는 부분을 집행이라 하고, 해당 교부액을 수령하여 공공기관에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을 실집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 집행실적은 예산 중 공공기관으로 교부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38)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p.138~142 참조

그러나 정부 예산이 공공기관으로 교부되어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실집행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예산 사업의 경우 정부의 집행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추진된 정도인 공공기관의 실집행을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실집행률을 조사하고, 집행이 저조한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며, 사업기간과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에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 중 사업비(2022년도 예산 기준) 10억원 이상이면서 2022년 8월말 기준 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은 30개 기관, 52개 사업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 중 사업비 10억원 이상,
집행률 1% 미만인 사업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 8. 기준			2023 예산안	집행부진사유
		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강원대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3,730	3,730	0	4,197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 의 등 관련 절차 지연
경북대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2,619	2,619	0	5,005	교육용 기자재 구입 검 토 지연
국가 철도공단	강릉-제진 철도건설	115,800	115,800	0	282,822	설계 진행 중에 따른 공사 미착수
	남부내륙철도	54,100	54,100	0	168,600	23년 설계 완료 후 용지비 집행 예정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43,800	43,800	0	157,600	설계용역 및 터키 발 주 일정 조정
	도담-영천 복선전철	290,400	178,500	0	233,833	복선화 결정('21.12) 에 따른 보완설계 및 공사 발주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40,500	40,500	7	6,000	2023년 계약 체결 예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000	3,000	0	127,559	감사원 감사 진행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 8. 기준			2023 예산안	집행부진사유
		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GTX-C)					따른 실시협약 체결 지연
	포항-삼척 철도건설	179,400	179,400	0	23,156	민원(지장물 이설 등) 등으로 인한 후속공종 지연
	대전-옥천 광역철도	3,000	3,000	0	2,000	선행사업 수요예측 재 조사로 인한 일정 지 연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3,488	3,488	20	4,430	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 중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 료공공성확보 및 환자중 심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7,800	7,800	0	1,855	기본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부진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0,390	10,390	55	19,744	자격심사 등 업무처리 절차 지연에 따른 집 행 부진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킨텍스 3단계 건립	14,500	14,500	0	14,500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상위부처에서 전액 미 교부
부산항만공사	물류기업유치지원	1,142	1,142	0	1,030	10월 설계 착수금 집 행 예정
서민금융 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 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0	48,000	0	0	2022년 9월 말 상품 출시 후 집행 예정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7,992	7,992	0	5,215	사업 일정변경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지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1,663	1,663	0	2,147	서울대학교와의 부지 선정 협의 지연
인천항만공사	물류기업유치지원	1,500	1,500	0	2,500	4분기 설계준공 후 준공금 지급 및 공사계약 추진 예정
전북대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8,281	8,281	0	6,383	4분기 집행 예정
제주대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4,260	4,260	0	0	입찰 진행 중
한국가스공사	KOGAS인재개발원 투자보조금	3,300	3,300	0	0	사업 연기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 8. 기준			2023 예산안	집행부진사유
		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한국가스 안전공사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	4,246	4,246	2	1,694	건축일정 조정에 따른 사업 지연
한국관광공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2,966	2,966	0	805	몽골: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단, 설계도서 변경 및 인허가 지연 으로 '20, '21년 예산 우선 사용 스리랑카: 국가부도사 태에 따른 합의서 체 결 지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식량작물소비기반구축	0	1,600	0	2,000	예산 미교부로 인한 집 행 부진(연말 집행 예 정)
한국농어촌 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 원[용자]	6,870	6,870	0	8,000	용자기업 심사결과 적 격자 없음
한국도로공사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	1,000	1,000	0	0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한국산업 단지공단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1,200	1,200	0	2,000	사업비 교부 전 단계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130,000	130,000	0	50,000	4분기 금융약정 체결 예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민임대출자	212,360	112,360	0	176,702	유형변경 등 사업취소 분 정산으로 전액 상 계처리
한국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2,655	3,935	10	0	9월 준공금 집행 예정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14,250	14,250	6	24,250	대출실행에 따른 이차 보전 집행시기에 따라 하반기 집행예정

주: 실집행은 2022년 8월말 기준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례적인 수시연구사업비 이월액 발생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는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비 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각 기관별로 기본연구비의 10~30% 범위에서 수시연구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회 소관 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면 일부 기관에서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시연구사업비의 총액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수시연구사업비의 편성비율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⁹⁾

②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PIS펀드 투자실적 제고 필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이하 “PIS펀드”) 조성 사업은 대규모 자금 소요 및 투자회수의 장기화로 민간에서의 자발적 자금조성이 어려운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성격의 자금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예산안은 PIS펀드의 모태펀드(6,000억원)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출자 약정 금액 1,500억원 중, 2022년 예산까지 출자되고 남은 미출자금액 50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19년 정부 예산 출자를 통해 6,000억원의 모태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총 1.5조원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에 따라 2022년 7월말 현재 4,000억원의 미 결성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동 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 출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부적인 투자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⁰⁾

39)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2022. 10., p.17~23 참조

40)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86~190 참조

③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공구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강릉에서 제진 간 111.7km의 단선 전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공사비 2,250억원, 용지비 200억원, 부대비 37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설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1년 실집행률은 36.5%에 불과하고, 2022년 또한 9월 기준 실집행률은 12.9%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절차의 소요 일정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¹⁾

④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공사 지연 일정을 감안한 공사비 예산 조정 필요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경기남부 지역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공사비 157억 5,900만원과 시설부대경비 6억 4,600만원을 합한 16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도 공사비는 전액 2022년도로 이월되었고, 2022년도 예산 또한 8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5%, 공정률은 11.4%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중 일정부분은 2023년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3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예산은 2023년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²⁾

41)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67~172 참조

42)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48~151 참조

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의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은 민간 소형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18억원(설계비, 감리비 및 부대비) 중 7억 5,700만원만을 집행하여 10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2년 현재 예산현액 147억 4,300만원 중 약 1백만원 만을 집행하여 실효집행률은 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발사장 구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행위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기타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어 예산의 이월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3년 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인·허가 결과 및 보완사항, 적정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³⁾

4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75~180 참조

가. 현 황

(1) 39개 공공기관이 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¹⁾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²⁾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³⁾에 따른 것으로, 2022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1개 공기업과 16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자산 2조원 미만 기관 중 정부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총 39개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아래 표[「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현황] 참조). 전년도 대상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올해 대상기관에는 한국마사회가 제외되어 있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현황]

요 건	개 수	공공기관
자산 2조원 이상	총 37개	- 공기업: 21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준정부기관: 1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정부 손실보전	총 2개	대한석탄공사(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별첨)”, 2022.8.31.

(2)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이 반영된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재무위험기관 현황]

요 건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9)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5)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가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재무 위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재무위험기관 탈피,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2022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22 ~ '26년 재정건전화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개요]

개요
① '22 ~ '26년 재정건전화계획(14개 기관) (재정건전화목표) 수익성 악화기관: 5년 내 재무위험기관 탈피*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 * 부채비율 등 6개 재무지표 점수 12점 이상 + 부채비율 200% 미만 (수립 기본방향) 경영환경 변화·정책지원 영향 배제 → 기관 자구노력만 발굴 -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5개 영역별 자구노력 발굴 ② '22 ~ '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39개 기관) (대상)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근거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공공기관장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기재부장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주요내용) 향후 5년간 사업계획, 자산·부채비율 등 재무 전망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2022.8.31.

14개 재무위험기관이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반영한 「재정건전화계획」⁴⁾의 주 내용은 향후 5년 동안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함으

4) 재무위험기관의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기존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22~'26년)에 재정 건전화계획(개선치)을 반영한 것이다.

로써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개선하는 것이다. 동 「재정건전화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체 계획 중 38.3%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조정’은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 조정, 비핵심사업 투자 철회 등을 통해 13조원의 재무개선을 이를 예정이며, ② 29.6%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확충’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유형자산 재평가 등을 통하여 10.1조원의 부채 감축 및 자본확충이 계획되어 있다. ③ ‘경영 효율화’로 사업비 절감, 사업 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출연 축소 등 5.4조원(15.8%) 부채감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④ ‘자산매각’ 방안으로는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의 매각을 통해 4.3조원의 재무개선을 달성할 예정이다. 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 개선 및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수송능력 확충과 같은 수익확대 방안을 통해서 1.2조원의 재무재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재무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공사(14조 2,501억원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9조 451억원 개선)이다.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인한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효과]

(단위: 억원, %)

구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계
금액	42,756	130,397	53,765	12,686	100,998	340,602
비율	(12.6)	(38.3)	(15.8)	(3.7)	(29.6)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2022.8.31.

「재정건전화계획」이 반영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전망’을 살펴보면, 재무위험기관의 2022년 부채규모는 2021년(372.1조원) 대비 58.8조원 증가한 430.9조원으로 전망되며, 부채비율은 2021년 264.9% 대비 71.5%p 증가한 336.4%로 전망된다. 2021년 대비 2022년 부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30.9조원 증가), 한국가스공사(11.3조원 증가), 한국지역난방공사(0.9조원 증가) 등의 기관에서 발

생하고 있는데 주로 2021~2022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증가에 기인한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규모는 2021년 이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2021년 264.9%에서 2022년 336.4%로 급증한 후, 2023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전망('22~'26)]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실적)	2022 (전망)(A)	2023	2024	2025	2026 (B)
부채 규모	당초 전망(A)	372.1	434.2	445.3	457.0	471.1	478.6
	건전화 반영(B)	372.1	430.9	435.6	441.7	451.9	453.9
	개선(B-A)	-	△3.3	△9.7	△15.3	△19.2	△24.7
부채 비율	당초 전망(A)	264.9	345.8	328.3	316.7	309.9	299.0
	건전화 반영(B)	264.9	336.4	316.7	288.4	278.8	265.0
	개선(B-A)	-	△9.4	△11.6	△28.3	△31.1	△34.0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8.31.

(3)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공공기관 재무전망

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39개) 총 재무전망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2022~2026년 중장기 자산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2022년 970.1조원에서 2026년 1,120.7조원으로 동 기간 동안 150.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자산 증가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자산 증가 86.7조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지원(안심전환대출 등)으로 인한 대출채권 등이 47.0조원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22~'26년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분야별 자산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1년 (실적)	'22년 (A)	'23년	'24년	'25년	'26년 (B)	증감 (B-A)
총 합	890.9	970.1	1,020.5	1,056.7	1,088.0	1,120.7	150.6
- SOC(10개)	373.3	400.4	421.2	445.7	469.1	487.1	86.7
- 에너지(12개)	285.7	312.9	314.9	319.4	321.6	322.9	10.0
- 금융(13개)	209.1	232.4	258	263.5	268.1	279.7	47.3
- 기타(4개)	22.7	24.4	26.4	28.1	29.2	31.0	6.6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2022.8.31.

39개 공공기관의 2022년 부채 규모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21년(550.6조원) 대비 82.2조원 증가한 632.8조원으로 전망되며, 부채비율도 187.6%로 전년(161.8%) 대비 25.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통해 39개 공공기관의 2026년 부채규모는 2022년 대비 71.8조원 증가한 704.6조원, 2026년 부채비율은 2022년 대비 18.2%p 하락한 169.4%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2022년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4.3조원으로, 2021년의 5.8조원 대비하여 △20.1조원 감소하였으나⁵⁾ 2023년 흑자로 전환(10.8조원)하여 연평균 8.5조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26년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1 (실적) (A)	'22 (B)	증감 (B-A)	'23	'24	'25	'26 (C)	증감 (C-B)
자산	890.9	970.1	79.2	1,020.5	1,056.7	1,088.0	1,120.7	150.6
부채	550.6	632.8	82.2	664.3	677.1	692.4	704.6	71.8
(부채비율)	(161.8)	(187.6)	(25.8)	(186.5)	(178.4)	(175.0)	(169.4)	(△18.2)
당기순이익	5.8	△14.3	△20.1	10.8	8.1	7.2	8.0	22.3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8.31. 바탕으로 재작성

5) 2022년 당기순이익 감소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등에 주로 기인한다.

② 분야별 중장기 재무전망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전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2~2026년 동안 대상 기관 전체(39개)의 부채 증가분(71.8조원)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SOC분야(52.0조원 증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24.7조원 증가) 등의 금융분야(25.5조원 증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SOC분야의 부채규모 증가(52조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공공주택 공급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22~202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7.1조원 부채 증가는 정책사업 수행 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이자부부채 31조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등 발행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6년 부채가 9.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6년 금융분야의 부채증가(25.5조원)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고유계정)의 부채 증가(24.7조원)에 기인하는데, 정부정책사업(안심전환대출⁶⁾)을 위해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발행 확대에 따른 유동화부채 잔액 증가(7조원) 및 채권매입·신탁유동성 지원 등을 위한 차입부채 증가(17조원) 등에 의한 것이다.

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안심전환대출(45조원) 사업은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금융부담 가중 등 취약계층 부실화를 우려하여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여 금리상승기 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2~2026년 분야별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실적)	2022 (A)	2023	2024	2025	2026 (B)	증감 (B-A)
전체(39개)	부채	550.6	632.8	664.3	677.1	692.4	704.6	71.8
	부채비율	(161.8)	(187.6)	(186.5)	(178.4)	(175.0)	(169.4)	(△18.2)
SOC (10개)	부채	236.5	254	266.2	282.6	298.1	306	52.0
	부채비율	(172.9)	(173.6)	(171.7)	(173.2)	(174.3)	(169.0)	(△4.6)
에너지 (12개)	부채	214.5	261.1	259.3	253.7	252.7	251.3	△9.8
	부채비율	(301.3)	(503.5)	(466.5)	(386.2)	(366.9)	(351.1)	(△152.4)
금융 (13개)	부채	86.7	103.9	123.5	124.6	124.8	129.4	25.5
	부채비율	(70.9)	(80.8)	(91.8)	(89.7)	(87.1)	(86.1)	(5.4)
기타 (4개)	부채	12.9	13.8	15.3	16.2	16.8	17.9	4.1
	부채비율	(128.3)	(131.6)	(136.9)	(136.6)	(134.8)	(136.4)	(4.8)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2022.8.31.

③ 금융부채 및 이자보상배출 전망

39개⁷⁾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금융부채 전망’을 살펴보면, 2022년 금융부채는 499.2조원으로 2021년 420.8조원 대비 78.4조원 증가할 전망이며, 2022년 이후 2026년까지는 51.9조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융부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기준 127조 559억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116조 545억원)이다. 이후 2022~2026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6.6조원의 금융부채 증가를 예상한데 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9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2026년 금융부채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45조 9,998억원, 총금융부채의 26.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총자산 및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2026년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 중 평균 50.8%로 나타나고, 총부채 중 금융부채 비중은 평균 79.1%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2022~2026년에도 인프라 확충, 시설투자 등 자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부채는 자산의 50%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총부채 중 80%는 금융부채로

7) 39개 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2~’26 금융부채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내부거래 제거) 기준의 금융부채로 작성되었다.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향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각 기관별 재무건전성 및 현금흐름 관리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2026년 금융부채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실적)(A)	2022 (B)	2023	2024	2025	2026 (C)	증감 (B-A)	증감 (C-B)	평균 (‘22~’26)
금융부채	420.8	499.2	530.4	538.8	546.4	551.1	78.4	51.9	533.2
(총자산대비)	47.2	51.4	52.0	51.0	50.2	49.2	4.2	△2.2	50.8
(총부채 대비)	76.4	78.9	79.8	79.6	78.9	78.2	2.5	△0.7	79.1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8.31.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이자보상배율 전망’을 살펴보면, 앞선 금융부채의 추이와 유사하게 이자비용은 2021년 6조원부터 2026년 9.9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 14.9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2.05배까지 하락⁸⁾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부터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2026년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원, 배)

구 분	2021 (실적)	2022	2023	2024	2025	2026
영업이익(a)	8.7	△14.9	20.7	19.0	18.1	18.1
이자비용(b)	6.0	7.3	8.5	9.0	9.3	9.9
이자보상배율(a/b)	1.44	△2.05	2.44	2.1	1.95	1.82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8.31.를 바탕으로 재작성

8) 이자보상배율은 기관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영업이익/이자비용)을 비교한 지표로써,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자부채 관련 이자비용의 현금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비교하는 개념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 그 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관의 이자비용 상환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1) 연도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재무전망(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악화가 예상되는 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바, 2022년에 추진 예정인 공공기관 혁신계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재무건전성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첫 번째 그림에서는 급증 추세였던 공공기관 부채 등이 미래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최초로 확정된 시기(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작성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채비율 전망치 변동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연도별로 추정된 향후 5년간의 부채비율(전망치)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⁹⁾ 실시 이후인 2014년도 추정치(‘14~’18)부터는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¹⁰⁾되고 있다. 이러한 부채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실제 부채비율(두 번째 그림)은 2011년 207.1%에서 2013년 232.4%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 167%, 2018년 167%, 2019년 167.1%, 2020년 161.1%, 2021년 161.8%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첫 번째 그림과 같이 ‘22~’26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부채비율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2~2023년 186~187%대로 급증한 후, 2024~2025년 175~178%, 2026년에는 지금과 유사한 수준인 169.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16~’2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6년 전망치 184%) 이후로 각 연도별 부채비율 전망은 180%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180%를 초과하는 부채비율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 상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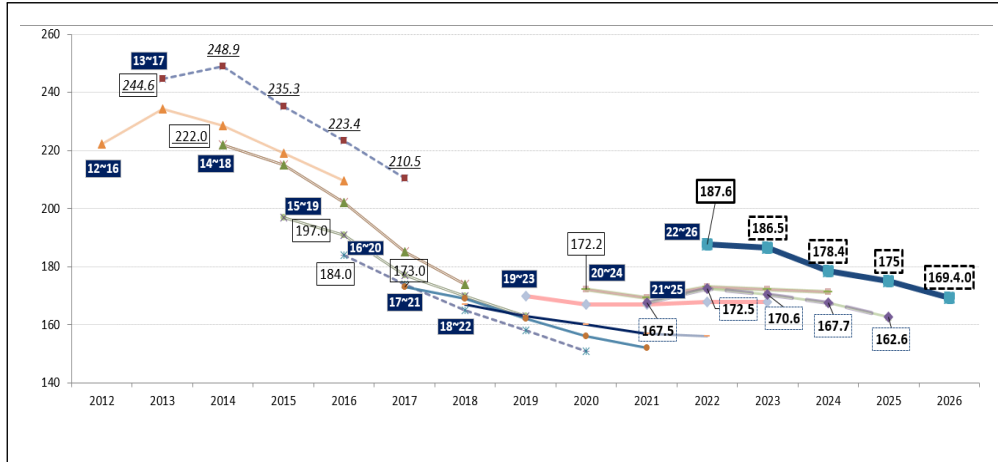
9) 2012년 당시 급증 추세였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여 2012년 220% 이상이었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부채관리를 수행하였다.

10)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부채비율이 2011년 207.1%에서 2013년에 234.4%까지 증가 후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부채비율이 2012년 220.6%에서 2014년 248.9%까지 증가한 후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원인을 파악하고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부채비율(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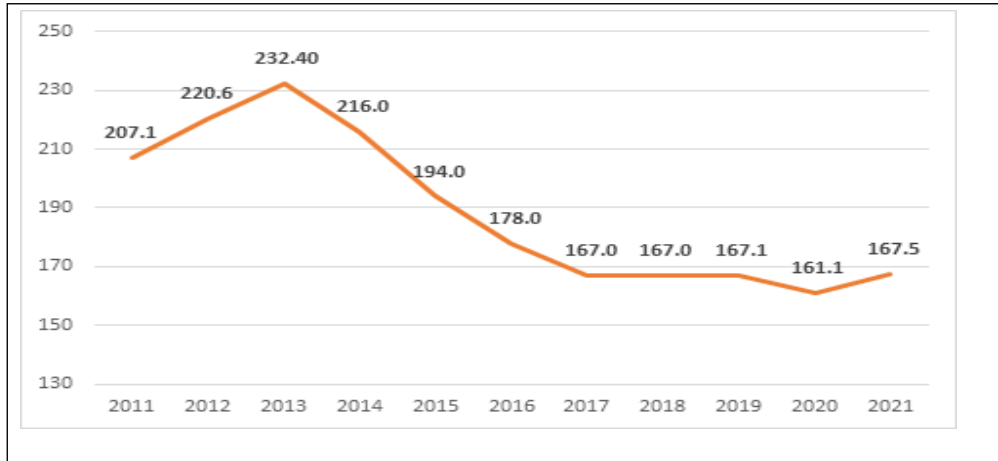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각 연도별(2012~2022) 기획재정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부채비율(실적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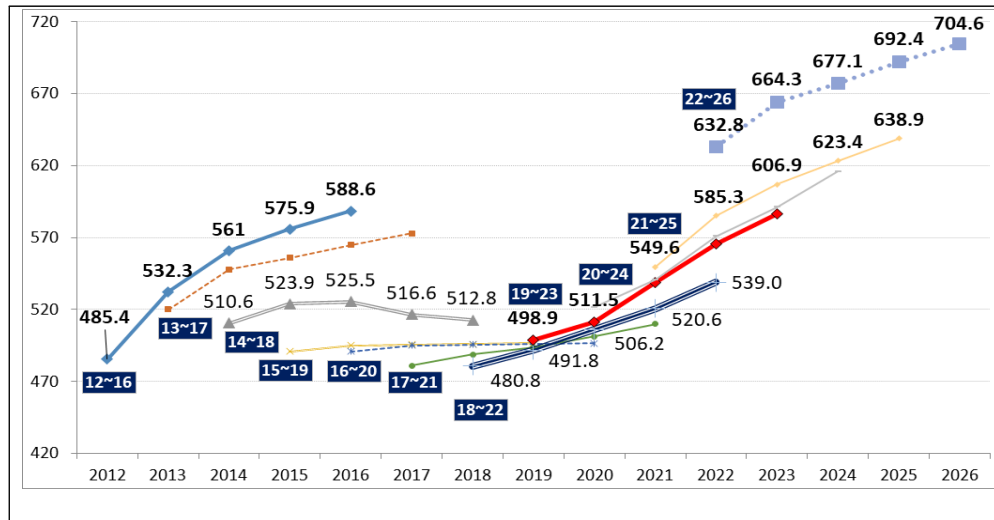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별(2012~2022) 기획재정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언급한 부채비율의 변동추세와 유사하게, 2013년 정부의 부채 관리로 인해 2014년 이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들의 부채규모 전망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7~'21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부터 공공기관 부채규모 전망치가 향후 5년간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2년 제출된 전망치에서는 부채규모가 2022년 632.8조원에서 2026년 704.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채규모 전망]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별(2012~2022) 기획재정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전망치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제출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전망치를 '21~25년 전망치와 비교해보았다. 2022~2025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전망치를 전년도 재무전망치와 비교하였을 때 2022년 제출된 재무전망치 상 부채규모가 47.5~57.4조원 가량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0.7~15.9%p 상승 전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전망은 2021년 연료비 증가 등에 기인한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전망('21~'25, '22~'26)]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예측치 (실적치)	전망치				
			2022	2023	2024	2025	2026
'21~'25 중장기(A)	부채규모	549.6	585.3	606.9	623.4	638.9	
	부채비율	167.5	172.5	170.6	167.7	162.6	
'22~'26 중장기(B)	부채규모	(550.6) ¹⁾	632.8	664.3	677.1	692.4	704.6
	부채비율	(161.8) ¹⁾	187.6	186.5	178.4	175.0	169.4
차이(B-A)	부채규모	1.0	47.5	57.4	53.7	53.5	
	부채비율	Δ5.7	15.1	15.9	10.7	12.4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21년 결산 기준의 실적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1년 제출 및 2022년 제출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6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후 20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동 계획을 반영토록 하였다. 동 계획은 자산매각 4.3조원, 사업조정 13.0조원, 경영효율화 5.4조원, 수익확대 1.2조원, 자본확충 10.1조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재무 개선(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달성하도록 목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첫번째 과제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추진¹¹⁾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350개 공공기관의 기능점검, 조직·인력효율화, 예산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청사 활용도 제고 포함), 과도한 복리후생정비 등 5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¹²⁾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계획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동 혁

11) 기획재정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7.29.

(공공기관) 각 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 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혁신계획 수립 후 주무부처에 제출

(주무부처) 주무부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협의·조정 후 기재부에 제출

(공운위) 기재부 혁신T/F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12)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신계획은 350개 공공기관의 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 포괄적인 부분의 경영혁신계획을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관련 보도 자료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0월 현재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정부 내 논의 중이다.

[2022년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비교]

구분	재정건전화계획(2022.8.31.)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추진 배경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2022.6.30)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대 혁신과제*를 추진함 * ①생산성 제고, ②관리체계 개편, ③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대상 기관	14개 재무위험기관	350개 공공기관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목표) ①수익성 악화기관: 5년내 재무위험기관 탈피 ②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	‘생산성 제고’와 관련,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2022.6.30.) 및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29.) 발표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3조원, 사업조정 13.0조원, 경영효율화 5.4조원, 수익확대 1.2조원, 자본확충 10.1조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추진 -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조정 및 철회	(기능) 민간 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 감소 기능의 축소·조정 (조직·인력)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구분	재정건전화계획(2022.8.31.)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노력	
추진 전략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자구노력 지속 발굴	*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부처가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 공공기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인센티브 부여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9개 기관의 부채규모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이 전망되는 바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계획과 타 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일관된 정책과 계획 하에 재무개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재무위험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포함) 실효성 제고 필요

재무위험기관(14개) 중 일부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포함)은 수익성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확충,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추정, 정부정책 사업의 이연 등에 기반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있게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한국전력공사의 토지재평가이익(미실현)을 통한 자본 확충 계획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22~'26년)을 살펴보면 필수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자산규모가 2021년 115.6조원에서 2026년 143.1조원까지 증가(27.5조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2022년 당기순손실은 20조 1,784억원으로 예측되며, 2023년 이후 연료비연동제 운영 등을 통해 영업흑자가 발생할 것을 전망한다. 이와 같은 설비 투자 및 영업적자에 따라 부채규모는 2021년 68.5조원에서 2022년 99.4조원으로 30.9조원 증가한 후, 2026년 105.6조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1년 이후 2022년 369.1%으로 상승(223.4%p ↑)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6년 282.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규모는 2022년 이후 2026년까지 6조 2,58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2022년 369.1%에서 2026년 282.4%로 86.7%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부채의 증가폭보다 자본의 증가폭(10조 4,831억원 ↑)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별도) '22~'26 재무전망]

(단위: 억원, %, %p)

구 분	'21(실적)	'22	'23	'24	'25	'26	증감 ('26-'22)
자산	1,155,785	1,263,153	1,295,464	1,381,251	1,404,786	1,430,569	167,416
부채	685,319	993,868	1,013,280	1,036,496	1,045,438	1,056,453	62,585
자본	470,466	269,285	282,184	344,755	359,348	374,116	104,831
부채비율	145.7	369.1	359.1	300.6	290.9	282.4	△86.7
당기순손익	△56,077	△201,784	12,898	11,526	14,593	14,768	216,552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한 재정건전화계획('22~'26년)을 살펴 보면, 총 14조 2,501억원 중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개선효과가 7조원으로, 이는 총 재무개선 계획 중 49.4%를 차지한다. 그런데 동 계획상 토지 자산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자본 증가는 실질적인 현금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전력공사 재정건전화계획 방안별 효과]

(단위: 억원, %)

구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계
금액	15,447	24,765	22,321	9,561	70,407	142,501
비중	10.8	17.4	15.7	6.7	49.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별첨)", 보도자료, 2022.8.31.

한국전력공사(별도재무제표 기준)는 2024년 보유 토지(2022년 9월 기준 20,402,713㎡)의 재평가이익이 7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3년 대비 2024년의 부채비율은 58.5%p 감소(359.1%→300.6%)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9.9조원이다. 그런데 2023년 동 공시지가는 현재 시세 대비 74.7% 수준¹³⁾이며, 2024년 토지 재평가시 시세의 100% 수준으로 평가될 것임에 따라 보유토지의 공정가치는 총 13.3조원으로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사업 관련 부지로, 경기도(382만㎡), 경상북도(217만㎡), 전라북도(181만㎡), 전라남도(166만㎡), 강원도(162만㎡), 경상남도(159만㎡) 등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될 자산인 ‘유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매각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님에 따라 관련 재평가이익은 현금유입 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13) 국토교통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얼마나 시세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지표)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본확충 관련 재평가이익 추정 근거]

- (추정)보유토지 공시지가(A) = 99,039억원
- 추정 공정가치(B, A/현실화율) = 99,039/74.7% = 132,582억원
- 장부가액 (C) = 62,175억원
- 재평가이익(B-C) = 70,407억원

'현실화율'이란?

시세대비 공시지가의 비율로,

공시지가가 시세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20.11.3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토지(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보도자료 16pg)에 근거하여

'23년 예상 평균 현실화율 74.7%를 적용하였음.

☐ 토지(표준지)

- (현실화율)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8년 내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할 전망

< 표준지 용도별 현실화율 추이 (단위 : %) >

시세/연도	'20	'21	'22	'23	'24	'25	'26	'27	'28
평균	65.5	68.6	71.6	74.7	77.8	80.8	83.9	86.9	90.0
주거용	64.8	68.0	71.1	74.3	77.4	80.6	83.7	86.9	90.0
상업용	67.0	69.9	72.8	75.7	78.5	81.4	84.3	87.1	90.0
공업용	65.9	68.9	71.9	74.9	77.9	80.9	84.0	87.0	90.0
농경지	62.9	66.3	69.7	73.1	76.5	79.8	83.2	86.6	90.0
임야	62.7	66.1	69.5	72.9	76.3	79.8	83.2	86.6	90.0
기타	66.8	69.7	72.6	75.5	78.4	81.3	84.2	87.1	90.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① 유형자산의 구성요소인 토지, ② 투자부동산의 구성요소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본확충' 분야에서 재평가대상인 토지는 유형자산(토지)이며 2021년 장부가액은 6.2조원¹⁴⁾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 토지 측정 방법을 재평가모형(현재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원가모형)으로 변경하여 재평가이익(7조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동 재평가이익은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고 자본의 증가(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에만 영향을 끼치게 된다.

14) 참고로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유형자산(토지) 회계처리 시 원가모형을 선택(취득 이후 공정가치 평가 반영하지 않음)하였는데, 2024년에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은 토지 재평가이익이 자본(기타포괄손익)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토지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현금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미실현 이익이다. 또한 동 토지는 주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부지임에 따라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재평가이익의 실현(현금유입 및 매각이익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자본확충 계획은 유동성 확보를 수반한 재무개선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토지 관련 장부가액 및 회계처리]

(단위: 백만원)

구분	토지(유형자산)	토지(투자부동산)
기말 장부가액	6,200,781	291,435
취득 후 장부가액 측정방식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재평가 및 공정가치 모형 선택 시 평가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재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 인식 자본에 가산(재평가잉여금)	공정가치 변동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자료: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 필요: 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ㄱ. 한국가스공사

2021년, 환율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LNG 구입비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상승이 가스요금에 제한적으로 반영¹⁵⁾되었다. 이에 따라 원료비(구매원가) 증가는 판매단가의 상승이 아닌 원료비 미수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3년 이후 LNG 현물가격 안정화 가정에 따른 연말 운전자금 축소 등으로 부채비율은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2026년까지 연료비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계획에 따라, 2022년 대비 2026년 부채 감소(19조 5,293억원) 및 부채비율 개선(240.4%p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15)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2022. 8., pp.37~40

[한국가스공사 '22~'26 재무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1(실적)	'22	'23	'24	'25	'26
자산	436,699	563,163	525,172	457,303	422,473	396,624
부채	345,506	458,344	412,186	333,793	294,732	263,051
부채비율	378.9	437.3	364.8	270.3	230.7	196.9
당기순손익	9,645	9,517	11,330	8,481	8,403	9,141

자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자구노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5년간 동절기 수요 감축(1.9조원), 매출채권 조기회수 및 유동화를 통한 부채감축(4.3조원), 자원개발 투자회수(5.4조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22~'26년 한국가스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자구노력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동절기 수요감축	5,681	4,616	3,363	2,865	2,411	18,936
매출채권 조기회수	3,606	3,606	3,606	3,606	3,606	18,030
매출채권 유동화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비핵심 자산 조정	-	799	387	-	-	1,186
투자비 이연 및 축소	3,235	171	1,141	1,498	2,200	8,245
자원개발 투자회수	6,107	11,777	12,790	11,292	12,028	53,994
신종자본증권 발행	8,000	-	-	-	-	8,000
유상증자 추진	-	-	5,000	-	-	5,000
인건비 절감	-	18	18	18	18	72
경비예산 절감	850	850	850	850	850	4,250
이자비용 절감	377	367	367	378	408	1,897
합 계	32,856	27,204	32,522	25,507	26,521	144,61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금액적 효과가 가장 큰 자구노력 방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회수' 부문으로, 대여금 원금(2.5조) 및 이자수익 회수(0.5조원), 유상감자(0.8조원), 배당(1.3조원) 등을 통하여 5.4조원의 부채 감축을 계획 중에 있다.

배당은 해당 사업에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여야 회수 가능하며, 대여금 및 이자수익 회수 역시 해외사업의 유동성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회수스케줄에 따른 회수가 가

능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사업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해왔던 바 있어 2020~2021년 해외사업 관련 회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해외사업에 대한 대여금 원금 회수 실적은 2020년 299억원, 2021년 1,223억원이며, 이자수익은 2020년 1,039억원, 2021년 822억원, 배당수익은 2020년 595억원, 2021년 73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그런데 투자회수 계획(2022~2026)을 살펴보면, 대여금 회수는 향후 5개년 평균 5,057억원, 배당수익은 평균 2,697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는 2021년 실적 대비 회수계획이 급증¹⁷⁾한 수치임에 따라, 실제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사업 관련하여 2022년 1~6월 동안 2,886억원이 회수(대여금 원금 상환, 감자, 배당, 이자수익 등)되었으며, 이는 해외사업 투자회수 계획 중 2022년에 회수예상액 6,107억원 대비 47.3%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투자회수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실적치		추정치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평균
대여금 회수	299	1,223	2,277	4,183	7,030	5,873	5,921	25,284	5,057
이자수익	1,039	822	1,036	982	912	1,192	1,102	5,224	1,045
감자	340	1,593	571	3,799	1,406	612	1,913	8,301	1,660
배당	595	739	1,751	2,367	3,136	3,371	2,862	13,487	2,697
기타	875	608	472	446	306	244	230	1,698	340
해외사업 총계	3,148	4,985	6,107	11,777	12,790	11,292	12,028	53,994	10,799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가 급락으로 해외사업 회수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년 해외사업 회수액 566백만불, '19년말 환율 1,157.8원 적용 시 6,556억원)

17) 2022년부터의 회수계획 급증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① 러·우 전쟁, 러시아 Nord Stream 공급 축소, 미국 Freeport LNG 화재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불안과 글로벌 국가들의 脫러시아 가스정책 등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 글로벌 거시환경의 변화로 인한 고유가 전망 반영, ('22년 6월 해외사업 회수액 실적: 236백만불) ② 향후 일부 사업의 생산 단계 전환 (모잠비크 FLNG '22년 말, LNG 캐나다 '24년) 및 현재 내전으로 가동 중지 상태인 예멘 LNG사업이 '25년부터 정상화되는 가정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출자 중인 2022년 반기기준 해외사업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해외) 중 10개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회사(해외)의 경우에도 10개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사업 투자는 2007~2020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탐사 및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비 지출이 수반되며 이후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해외사업 중 50% 이상의 사업에서 2021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몇몇 회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종속 및 관계기업투자(해외) 실적현황(2022.6)]

(단위: %, 억원)

구분	기관명	영업 소재지	지분율	자산 총액	부채 총액	매출액	당기 순손익
종속	KOGAMEX Investment Manzanillo B.V.	멕시코	100.0	1,430	955	-	37
	KOMEX-GAS, S. de R.L. de C.V.	멕시코	99.97	23	-	-	1
	KOGAS Iraq B.V.	이라크	100.0	12,713	2,064	1,779	202
	KOGAS Badra B.V.	이라크	100.0	5,789	335	1,080	460
	KOGAS Akkas B.V.	이라크	100.0	181	135	-	△5
	KOGAS Mansuriya B.V.	이라크	100.0	1	-	-	-
	KOGAS Canada Energy Ltd.	캐나다	100.0	11,907	7,413	101	△9
	KOGAS Australia Pty.Ltd.	호주	100.0	44,107	37,796	4,663	704
	KOGAS Prelude Pty. Ltd.	호주	100.0	22,492	15,969	1,523	413
	KG Timor Leste Ltd.	동티모르	100.0	-	598	-	△8
	KG Krueng Mane Ltd.	인도네시아	100.0	-	857	-	△11
	KG Mozambique Ltd.	모잠비크	100.0	12,793	1,664	-	△74
	KOGAS Mozambique Lda.	모잠비크	99.99	194	-	1	29
	KOGAS Cyprus Ltd.	사이프러스	100.0	343	-	-	2
	KG-SEAGP Company Limited	미얀마	66.9	2,003	-	-	73
	케이지미얀마주식회사	미얀마	100.0	2,475	22	-	30
	KOGAS International Pte. Ltd.	싱가포르	100.0	157	21	4,134	21

(단위: %, 억원)

구분	기관명	영업 소재지	지분율	자산 총액	부채 총액	매출액	당기 순손익
관 계	Korea Ras Laffan LNG Ltd.	카타르	60	5,479	2	1,179	1,218
	Korea LNG Ltd.	오만	24	1,820	2	472	460
	Hyundai Yemen LNG Company	예멘	49	2,171	1,174	-	△3
	Kor-Uz Gas Chemical Investment Ltd.	우즈베키스탄	45	17,709	265	-	1,086
	South-East Asia Gas Pipeline Company Limited	미얀마	4	19,472	6,210	1,901	1,013
	Sulawesi LNG Development Limited	인도네시아	25	10,472	2	-	702
	TOMORI E&P LIMITED	인도네시아	49	6,298	1,363	1,122	284
	Coral South FLNG S.A	모잠비크	10	96,008	84,150	271	171
	Coral South FLNG DMCC	UAE	10	53,360	53,358	-	-
	Rovuma LNG S.A.	모잠비크	10	20	-	-	-
	Rovuma LNG Investments (DIFC) Ltd	모잠비크	10	7	9	-	-
	(주)한우즈벡실린더투자	우즈베키스탄	40	40	-	-	-
	(주)한우즈벡씨엔지투자	우즈베키스탄	39	19	-	-	-
	TERMINAL KMS de GNL, S. De R.L. De C.V.	멕시코	25	10,587	5,075	529	213
	GLNG Operations Pty. Ltd.	호주	15	1	-	-	△0
	ENH - KOGAS, SA.	모잠비크	70	294	49	207	44
	LNG Canada Development Inc.	캐나다	5	-	-	-	-
	Manzanillo Gas Tech, S. de R.L. de C.V.	멕시코	51	59	24	51	4
	KLBV1 S.A.	네덜란드	40	833	669	19	1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해외사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2017~2021년 동안 해외사업 투자 및 출자 관련한 손상을 인식해왔다. 그런데, 2021년에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처음 손상차손 환입(순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인한 이익 회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2023~2026년 사업별 대여금 상환 스케줄, 감자 및 배당수익의 추정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¹⁸⁾

18) 한국가스공사는 각 사업별 경제성모델은 운영사로부터 받은 물량 정보, 가격 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투자계약서상 관련 정보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투자주식 및 대여금, 손상, 매도가능증권평가액(2017~2021)]

(단위: 억원)

연도	해외사업 투자주식	해외사업 대여금	해외사업 손상차손(△환입)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기타포괄손익)
2017	38,954	44,827	15,471	△1,387
2018	35,070	48,852	1,550	△1,147
2019	31,487	52,377	3,716	695
2020	27,661	51,360	4,452	△649
2021	28,540	57,196	△3,191	82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배당 및 대여금 회수는 피투자회사의 이익이 충분히 누적되고 가용자금이 발생할 때 가능하다.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한국가스공사는 연 평균 5천억원의 대여금 원금 회수 및 2,700억원의 배당수령을 계획하고 있는데, 2022년 상반기 실적으로 미루어보아 2022년 전망치(6천억원)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 이후 매연도 1조원 이상으로 회수 계획이 급증함에 따라 2023년 이후 해외사업 회수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2023~2026년의 해외개발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자원개발 실적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ㄴ. 용산개발계획을 고려하여 6.3조원의 부지매각이익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규모는 2022년 19.5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8.0조원, 2024년 15.3조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0"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 '22~'26 재무전망]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1(실적)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산	251,556	276,553	260,969	232,995	241,602	243,585
부채	186,608	195,516	180,196	153,195	161,647	151,735
부채비율	287.3	241.3	223.1	192.0	202.2	165.2
영업이익	△8,881	△3,415	384	1,136	2,166	4,864
이자보상배율	△3.01	△1.10	0.12	0.47	0.9	1.96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한편 「재정건전화계획」이 반영된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① 효율적 수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영업흑자 전환, ② 전략적 자산 운영을 통한 부채·이자비용 감축, ③ 강도 높은 경영개선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자구노력]

- ① 철도운영 효율성 증대
 - (여객운송) KTX 중심의 좌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일반철도는 중·단거리 셔틀열차 운행 등으로 운영효율성 제고 * EMU 차량 도입시 1인 승무 확대와 열차 조성업무 폐지로 효율 강화
 - (철도물류) 핵심품목 위주 재편과 고속장대화물열차 운행, 철도자산 활용한 사업범위 확대 등
 - (차량정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철도차량 정비효율성 향상
 - (유지보수) 작업자 사고예방과 열차안정성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업무는 자동화기계화 추진
- ②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비용절감)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효율적으로 집행
 - (조직인력) 안전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기존 운송사업은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③ 미래성장 및 자산개발 추진

(미래성장사업)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과 해외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 진출기반 마련

(자산개발) 용산 서울역복부 등 핵심 역세권개발을 통해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임대 등 직접개발도 확대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이 중 한국철도공사의 자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자산 매각 계획 중 매각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용산 부지¹⁹⁾로, 동 계획에서는 공사의 부지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매각대상 자산내역]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용산역세권		31,573	31,573			63,146
광운대역세권	1,991					1,991
서울역북부	2,663					2,663
대전역세권	429					429
수색역세권		972	972	972	6,809	9,725
구)포항역	1,030					1,030
금천구청역		106				106
가야역외방			357			357
용산전면1-1	81					81
기타유희부지	449					449
합계	6,643	32,651	32,902	972	6,809	79,977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2021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부터 용산부지 관련 토양정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인허가 조사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2022년 7월,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안을 발표하였는데 아직 확정된 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23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부지조성공사 착수 및 부지매각을 계획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토지 매각은 토양정화, 인허가, 개발계획 수립 및 부지조성공사 착수 단계가 이행 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19)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동 사업에 활용될 한국철도공사 부지(13만평)의 장부가액은 5.7조원이며, 동 사업으로 인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개발이익 및 토지비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에도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용산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발주하고 관련 PFV에 출자(2,500억원) 및 부지를 매각한 바 있으나, PFV의 채무불이행으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부지 매각을 취소하고, 한국철도공사의 투자지분 전액을 손상 인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나 보증으로 인한 우발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이 자산개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신중한 계획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12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는 공공(한국철도-SH공사)이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장(市場)에 토지 공급하는 사업 방식임에 따라 2007년과 같은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 '20년 8월 국토부에서 용산정비장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1만호)
-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KDI) 완료('20. 12월)
- 전문성 보완 및 투자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5월)
- (토양정화) 토양정화사업 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20.9월) 후 토양정화 진행 중
- (인허가용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포함) 수립을 위한 인·허가 조사설계 용역('21.05.26.~'23.05.25.), 제영향평가·광역교통('21.7월) 용역 등 단계적 착수
-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정비창부지) 개발구상안 발표('22. 07. 26.)

□ 향후계획

- ('22.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시행사)
- ('23.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서울시)
- ('23.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 ('23. 하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토지공급
(부지조성공사 진행에 따른 단계별 공급)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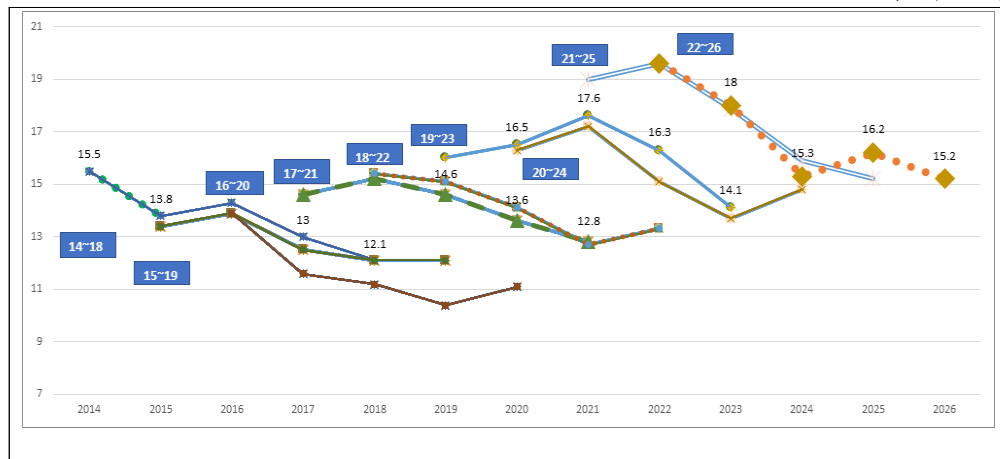
연도별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매 연도마다 향후 5개년 계획의 부채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14~'18년, '17~'21년, '19~'23년, '21~'25년의 계획상 특정 연도(2018, 2021, 2022, 2023년)에 대한 부채규모 전망치는 점

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연도에 대한 각 연도별 추정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계획 대비 부채규모 증가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송 수익의 급감(2020~2021년 연 평균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 발생)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지연(도시계획 변경, 지자체 인허가 등에 인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도별 한국철도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채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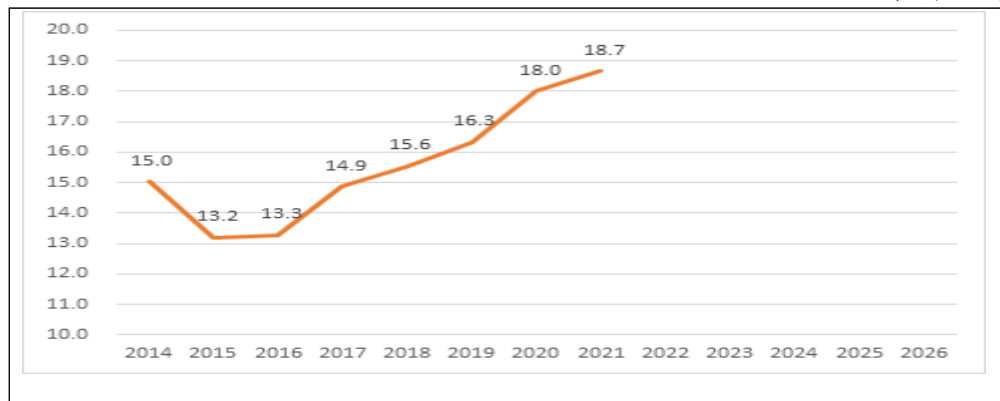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별(2012~2022) 기획재정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한국철도공사 부채규모(실적치)]

(단위: 조원)



자료: 감사보고서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2018, 2019, 2020, 2021년에 대해 전방한 부채 추정치를 살펴보면, 각각 4~5년전 계획상 추정치보다 실제치규모가 3.4~6.9조원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22년에 대한 전망 역시 '18~'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13.3조원을 계획하였으나, '22~'26년 추정치는 이보다 6.3조원 증가한 19.6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의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은 지속적으로 부채감축을 계획해 오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규모 실적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19, '20, '21에 대한 부채규모 전망치 추이]

(단위: 조원)

구분	실적치	예측치							
		15~19	16~20	17~21	18~22	19~23	20~24	21~25	22~26
2018	15.5	12.1	11.2	15.2	15.4				
실적치와의 차이		3.4	4.3	0.3	0.1				
2019	16.3	12.1	10.4	14.6	15.1	16.0			
실적치와의 차이		4.2	5.9	1.7	1.2	0.3			
2020	18.0		11.1	13.6	14.1	16.5	16.3		
실적치와의 차이			6.9	4.4	3.9	1.5	1.7		
2021년	18.7			12.8	12.7	17.6	17.2	19.0	
실적치와의 차이				5.9	6.0	1.1	1.5	△0.3	
2022년					13.3	16.3	15.1	19.6	19.6

자료: 각 연도별(2012~2022) 기획재정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2023~2024년에 계획 중인 용산개발계획이 지연될 경우, 자산 매각으로 인한 부채비율 개선 등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인허가 등 사업을 순연시키는 주요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자산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이행률을 철저히 관리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사업조정 계획에서 나타나는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7. 주택공급물량 감소를 통한 재무개선을 계획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22년 대비 2026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사업 수행관련 사업비 투입(연평균 약 37조원)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37.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라 출자금(자본)도 증가하여 '26년 부채비율은 '22년(221%) 대비 14%p 감소한 207%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2~'26 재무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2	'23	'24	'25	'26	증감 ('26-'22)
자산	2,184,583	2,322,142	2,521,581	2,681,978	2,779,449	594,866
부채	1,503,262	1,583,231	1,726,873	1,829,834	1,874,352	371,090
자본	681,321	738,911	794,708	852,144	905,097	223,776
부채비율	221	214	217	215	207	△14
당기순손익	18,482	22,566	19,209	19,802	17,824	△658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총 9조원의 순자금유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자산매각 5,198억원, 사업조정 6조 4,303억원, 비용절감 2조 95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건전화계획 방안별 효과]

(단위: 억원)

구분	상세구분	자구노력을 통한 효과					
		'22	'23	'24	'25	'26	합계
자산매각	출자지분 매각	90	33	426	-	-	549
	유형자산 매각	8	18	11	473	4,141	4,650
	소계	98	51	437	473	4,141	5,198
사업조정	사업규모 조정	-	16,111	16,096	16,055	16,042	64,303
비용절감	인건비 절감	5	5	-	-	-	10
	경비절감	84	84	81	81	81	411
	사업비 절감	500	500	500	500	500	2,500
	기타비용 절감	135	4,185	4,915	4,338	4,456	18,029
	소계	724	4,774	5,496	4,919	5,037	20,950
전 체	자금유입	98	51	437	473	4,141	5,198
	자금유출 감소	724	20,885	21,592	20,973	21,078	85,252
	합계	822	20,936	22,029	21,446	25,219	90,451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사업조정 계획은 정부정책인 매입임대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행분을 총 공급물량 대비 80% 수준으로 감소²⁰⁾함으로써 관련 사업비 6.4조원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총 매입임대 물량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공사가 수행할 물량을 정한 후 나머지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화하게 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에 과거 5년간 정부 매입물량 대비 공사 수임물량을 감안하여 총 물량의 80%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2023년 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10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수행

20) 이러한 공급물량의 배분 조정은 매입임대 정부정책 물량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평균 수임률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매입임대 전체 공급 물량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할 2023년 매입임대사업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3년 중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수행(사업비 초과 지출)하게 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조정 계획은 계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입임대 공급물량 감소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및 사회적 책임 또한 고려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매입물량 조정]

(단위: 호)

구 분	'23		'24		'25		'26	
	계획	조정	계획	조정	계획	조정	계획	조정
합 계	35,000	28,000	35,920	28,920	36,429	29,429	36,090	29,090
일반형	6,853	5,482	6,853	5,482	6,853	5,482	6,853	5,482
청년형	6,007	4,805	6,007	4,805	6,007	4,805	6,007	4,805
신혼I형	5,032	4,026	5,032	4,026	5,032	4,026	5,032	4,026
신혼II형	10,270	8,216	10,270	8,216	10,270	8,216	10,270	8,216
기숙사형	1,002	802	1,002	802	1,002	802	1,002	802
다자녀형	1,704	1,363	1,704	1,363	1,704	1,363	1,704	1,363
임대주택건설형	-	-	920	920	1,429	1,429	1,090	1,090
리모델링형	4,012	3,209	4,012	3,209	4,012	3,209	4,012	3,209
아이돌봄시설형	120	96	120	96	120	96	120	96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매입사업비 조정(매입물량×호당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23		'24		'25		'26	
	계획	조정	계획	조정	계획	조정	계획	조정
합 계	80,269	64,216	83,949	67,896	85,985	69,932	84,629	68,576
일반형 (1.82억원/호)	12,470	9,976	12,470	9,976	12,470	9,976	12,470	9,976
청년형 (1.67억원/호)	10,025	8,020	10,025	8,020	10,025	8,020	10,025	8,020
신혼형 (1.99억원/호)	10,036	8,029	10,036	8,029	10,036	8,029	10,036	8,029
신혼II형 (3.31억원/호)	33,944	27,155	33,944	27,155	33,944	27,155	33,944	27,155
기숙사형 (1.74억원/호)	1,746	1,397	1,746	1,397	1,746	1,397	1,746	1,397
다자녀형 (2.3억원/호)	3,928	3,142	3,928	3,142	3,928	3,142	3,928	3,142
임대주택건설형 (4억원/호)	-	-	3,680	3,680	5,716	5,716	4,360	4,360
리모델링형 (1.91억원/호)	7,664	6,131	7,664	6,131	7,664	6,131	7,664	6,131
아이돌봄시설형 (3.8억원/호)	457	366	457	366	457	366	457	366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ㄴ. 친환경 차량 도입의 이연 및 축소를 통해 부채 절감을 계획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한 재정건전화계획('22~'26년)을 살펴 보면, 총 3,480억원 중 '사업조정'을 통한 재무개선효과가 2,032억원이며, 이는 총 재무개선 계획 중 58.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재정건전화계획 방안별 효과]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합계
금액	2,032	104	1,344	3,480
비중	58.4	3.0	38.6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동 사업조정 부문의 부채감축(2,032억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열차차량 구입시기의 지연 및 축소, 보수품 및 보수장비 구입액 감소 등의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동 사업조정에서 향후 5년간 1,482억원의 노후기관차(디젤) 구입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노후기관차(디젤)의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의 도입 일정²¹⁾ 역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지연시키는 계획²²⁾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차량 구입이 모두 지연될 경우 기대수명(25년)을 초과한 노후기관차(디젤)가 지속적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있어 승객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²³⁾되며,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한국철도공사는 녹색채권 3천억원을 발행²⁴⁾하면서 친환경 열차(전기 동력분산식 열차(EMU-320, 260, 150) 및 전동차) 투자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런데 동 사업조정 부문에서 녹색경제활동에 속하는 친환경 열차의 도입 시기 지연이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재정건전화계획이 공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부합

21)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전기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의 도입 일정이 지연된 것은 차량 제작사의 납품지연으로 잔금 지급 일정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2)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II」, 2022. 8., p.244 참조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녹색채권 발행 시 녹색경제활동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노후기관차(디젤)를 친환경열차인 전기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로 150량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3)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기대수명(25년)을 초과한 노후기관차(디젤)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 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4)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EU는 지속 가능한 유럽수송정책 결의안을 통해 에너지효율 제고 및 녹색화 수송을 제안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29.3%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만큼, 친환경 열차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친환경 철도차량 구입대금의 차환용도로 사용될 녹색채권 3천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재정건전화계획 중 사업조정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고속·준고속차량 (EMU-320, 260) 구입	670	△176	△176	△516	△329	△527
일반철도차량(EMU-150) 구입	△1,109	1,376	-	-	-	267
광역철도차량(전동차) 구입	214	98	△166	△168	235	213
노후기관차(디젤) 구입	△600	△548	△847	△397	910	△1,482
화차 구입(251량 계약 진행중)	△119	120	-	-	-	1
철도차량 보수품 구입	△107	-	-	-	-	△107
철도차량 개량 (CCTV, 자동판매기 설치 등)	109	△95	△4	△5	-	5
건물 개량 및 보수	△7	-	-	-	-	△7
건물 신축	△470	444	-	25	-	△1
노후역사 개량	△191	191	-	-	-	-
선로·전철보수장비 구입	△204	-	-	-	-	△204
전산시스템 개발	△9	△116	△20	△5	-	△150
학자금 대여 등	△40	-	-	-	-	△40
합계	△1,863	1,294	△1,213	△1,066	816	△2,032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자구노력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당년도 전망치와 실적치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이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자구노력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자구노력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2021년 당기순손익 실적과 2022~2026년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1년 5.8조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14.3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26년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전체의 연도별 당기순손익(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1 (실적) (A)	'22 (B)	증감 (B-A)	'23	'24	'25	'26 (C)	증감 (C-B)
당기순손익	5.8	△14.3	△20.1	10.8	8.1	7.2	8.0	22.3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8.31. 바탕으로 재작성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이 제출한 '22~'26 재무전망치 중 기관별 '당기순손익²⁵⁾ 전망'을 다음과 같이 SOC, 에너지, 금융 및 기타분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2021년 대비 2022년 당기순손익 감소를 예상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별도)(14.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2.6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2.3조원) 등²⁶⁾이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 당기순손익이 1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당기순손익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1 (실적)(A)	'22 (B)	증감 (B-A)	'23	'24	'25	'26
SOC	한국토지주택공사	41,633	18,482	△23,151	22,566	19,209	19,802	17,824
	한국수자원공사	3,421	3,204	△217	1,229	1,276	1,508	1,688
	국가철도공단	174	1,021	847	3,366	1,424	1,336	2,695
	한국도로공사	336	920	584	1,418	1,521	1,561	1,622

25)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수치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한 바 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각 기관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별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상이할 수 있다.

26) 한국전력공사는 '22년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영업적자가 예상되나 '23년 이후 연료비연동제 운영 및 재무개선 등을 통해 영업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 코로나 상황 지속, 전년 대비 연말정산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부터 의료이용 단계적 회복,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고령화 등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24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1년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분양 호조와 매출이익률 증가로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잔여 전환물량 감소로 당해 '22~'26년 평균 순이익은 평균 2.0조원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위: 억원)

구 분		'21 (실적)(A)	'22 (B)	증감 (B-A)	'23	'24	'25	'26
	부산항만공사	408	582	174	754	715	876	1,008
	한국산업단지공단	685	145	△540	53	446	187	△47
	인천항만공사	△237	△125	112	△32	325	785	1,198
	한국철도공사	△11,552	△1,271	10,281	△4,210	△2,116	△1,051	7,804
	한국공항공사	△2,311	△1,963	348	△1,082	△240	577	984
	인천국제공항공사	△7,506	△5,025	2,481	3,481	5,497	1,324	1,597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9,645	9,517	△128	11,330	8,481	8,403	9,141
	한국광해광업공단	2,764	1,341	△1,423	2,920	1,487	1,354	895
	한국중부발전	720	147	△573	1,742	1,825	2,161	1,898
	한국남부발전	△1,147	△601	546	△30	348	350	296
	한국서부발전	△1,214	△692	522	△1,199	1,070	△60	2,053
	한국동서발전	390	△879	△1,269	616	453	147	196
	대한석탄공사	△1,325	△1,250	75	△1,206	△1,225	△1,201	△1,358
	한국남동발전	△45	△1,258	△1,213	297	2,263	1,959	1,254
	한국석유공사	△460	△1,904	△1,444	6,474	1,069	404	△227
	한국수력원자력(주)	2,867	△2,832	△5,699	3,780	6,123	6,763	353
	한국지역난방공사	215	△3,848	△4,063	178	487	2,878	3,025
	한국전력공사	△56,077	△201,784	△145,707	12,898	11,526	14,593	14,768
금융	예금보험공사	22,853	20,552	△2,301	21,941	22,914	24,344	25,505
	국민건강보험공단	38,123	11,779	△26,344	1,623	△12,994	△27,080	△27,955
	한국주택금융공사	6,088	2,687	△3,401	1,767	2,159	2,697	3,307
	주택도시보증공사	3,620	2,017	△1,603	4,261	4,747	5,087	5,304
	서민금융진흥원	2,972	991	△1,981	1,440	1,598	2,146	1,883
	한국자산관리공사	546	581	35	421	437	423	525
	한국장학재단	516	△29	△545	227	294	185	236
기타	(주)강원랜드	△106	1,314	1,420	2,290	2,878	2,930	3,056
	한국농어촌공사	345	135	△210	123	107	115	325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37	27	△10	44	74	76	79
	국민체육진흥공단	△1,111	6	1,117	225	247	262	278

주: 1. 금융분야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창업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회계기준 적용기관으로 당기순손익이 아닌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함에 따라 당기순손익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기관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2022년 반기순이익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기관을 대상으로 '22년 반기순손익 실적치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22년 재무전망치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이 중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반기재무제표 검토를 득하지 않음에 따라 신뢰성 있는 반기순손익 수치를 제시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2년 1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예상²⁷⁾하였으나 '22년 6월 기준 756억원의 반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별도재무제표 기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제출한 추정당기순손실²⁸⁾(A)은 각각 20.2조원, 1,271억원, 5,025억원이며, '22년 반기순손실 실적으로 단순 추정(연환산)한 당기순손실(C)은 각각 21.6조원, 6,362억원, 6,772억원으로, 각각 1.4조원, 5,091억원, 1,747억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7) '2022년~2026년 한국중부발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2.8, 한국중부발전
'신서천, 보령 3,4호기 친환경 개선 준공으로 석탄발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NDC 상향으로 석탄화력 발전량 축소, 전력판매량 및 전기판매수의 감소'에 따라 예상된 수치이다.

28)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한국전력공사는 '22년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한 영업적자 예상,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여객과 사업개발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사업은 당기순손실 발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손실악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2~'26년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전체의 연도별 당기순손익(전망)]

(단위: 억원, %, %p)

구 분		'22(중장기계획) (A)	실적치		증감 (C-A)
			'22.1~6 순이익 (B)	실적치 단순 연환산 (C=Bx2)	
SOC	한국토지주택공사	18,482	11,425	22,850	4,367
	한국수자원공사	3,204	4,302	8,604	5,400
	국가철도공단	1,021	888	1,776	755
	한국도로공사	920	111	222	△698
	부산항만공사	582	384	768	186
	한국산업단지공단	145	- 1)	- 1)	- 1)
	인천항만공사	△125	77	154	279
	한국철도공사	△1,271	△3,181	△6,362	△5,091
	한국공항공사	△1,963	△1,174	△2,348	△385
	인천국제공항공사	△5,025	△3,386	△6,772	△1,747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9,517	4,693	9,386	△131
	한국광해광업공단	1,341	825	1,650	309
	한국중부발전	147	△756	△1,512	△1,659
	한국남부발전	△601	377	754	1,355
	한국서부발전	△692	△509	△1,018	△326
	한국동서발전	△879	1,236	2,472	3,351
	대한석탄공사	△1,250	△833	△1,666	△416
	한국남동발전	△1,258	△566	△1,132	126
	한국석유공사	△1,904	1,894	3,788	5,692
	한국수력원자력(주)	△2,832	1,500	3,000	5,832
	한국지역난방공사	△3,848	△2,256	△4,512	△664
	한국전력공사	△201,784	△108,106	△216,212	△14,428
금융	예금보험공사	20,552	- 1)	- 1)	- 1)
	국민건강보험공단	11,779	- 1)	- 1)	- 1)
	한국주택금융공사	2,687	1,443	2,886	199
	주택도시보증공사	2,017	357	714	△1,303
	서민금융진흥원	991	- 1)	- 1)	- 1)
	한국자산관리공사	581	- 1)	- 1)	- 1)
	한국장학재단	△29	- 1)	- 1)	- 1)
기타	(주)강원랜드	1,314	309	618	△696
	한국농어촌공사	135	- 1)	- 1)	-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7	20	40	13
	국민체육진흥공단	6	- 1)	- 1)	- 1)

주: 1. 39개 공공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회계결산에 따른 재정운영결과를 산정하고 있으며 당기순손익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 결산 시 비교 가능성을 위해 상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재정운영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하고 있음

1) 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검토를 받지 않는 기관임에 따라 반기순이익 확인이 어려움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자산 매각 계획에 따르면, 2022년 12월 서울역북부(2,663억원) 및 광운대(1,991억원) 부지매각 관련 잔금수령이 예정²⁹⁾되어 있어 2022년 내 이를 포함하여 6,643억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경우 잔금(1,991억원) 납부 조건을 12월 15일까지로 확정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12월 말까지 건축인허가를 완료하여 잔금(2,663억원)수납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역북부 역세권 부지의 허가 절차 진행이 당해 12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2천 6백억원 가량의 현금 유입 및 이익 실현은 2022년 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전력판매량 감소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022년 8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전기예방공사 일정에 따른 발전기 정비계획에 따른 매출감소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위기로 LNG단가 급등(1,291,006천원/톤→1,339,338천원/톤)한 것 또한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 발전기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의 경우 연료가격, 전기요금, 발전소별 이용률, 전원Mix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업실적이 변동함에 따라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앞선 사례와 같이 '22년 반기 기준 실적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하반기 실적 개선을 통해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익 실현계획 지연 등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이익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22년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2022년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클 경우, 대외 경영환경 변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자구노력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바, 자구노력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점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이 실제로 기관 실적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9) 동 2건의 사업 관련하여 2021년까지 중도금 수령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가. 현 황

(1) 금융공공기관 현황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였다. 정책금융은 민간의 상업금융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민간의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정책금융은 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2022년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금융업무를 주요 업무¹⁾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은 아래의 18개 기관이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이 7개로 가장 많으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금융공공기관이 5개 기관이다.

[금융공공기관 주요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 근거 법률	설립목적
금융위원회 (7)	한국산업은행	1954년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
	중소기업은행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
	신용보증기금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용통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2018~2020년 평균 사업비 지출액의 70% 이상을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금융 업무에 사용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주무 부처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 근거 법률	설립목적
	예금보험 공사	1996년	「예금자보호법」 제3조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
	서민금융 진흥원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1962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5)	기술보증 기금	1989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 지원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2000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개인 부담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수행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1979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201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
	한국 벤처투자	2005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기획 재정부 (2)	한국수출입 은행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한국 투자공사	2005년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운용업무의 효율적 수행
산업 통상 자원부 (1)	한국무역 보험공사	1992년	「무역보험법」 제37조	무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
국토 교통부 (2)	주택도시 보증공사	2015년 ¹⁾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주택건설 보증 등 주택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2018년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지원
해양 수산업 (1)	한국해양 진흥공사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운 경쟁력 강화

주: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재 설립됨

1. 최근 10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함

자료: 각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또한, 민간의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위의 18개 금융공공기관은 각 설립 목적 및 수행 업무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중소금융(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②수출금융, ③개발금융, ④주택금융, ⑤서민금융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²⁾

[금융공공기관의 주요 지원 분야 구분]

구분	분야	해당 금융공공기관
중소금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수출금융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외 실물거래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 공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개발금융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발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 진출, 기업구조조정 등	한국산업은행
주택금융	주택금융시장에서의 주택금융보증 등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금융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금융 수요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여신, 채무감면, 신용회복 등	서민금융진흥원
기타	상기 외 금융 업무 수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자료: 각 기관 설립근거법 및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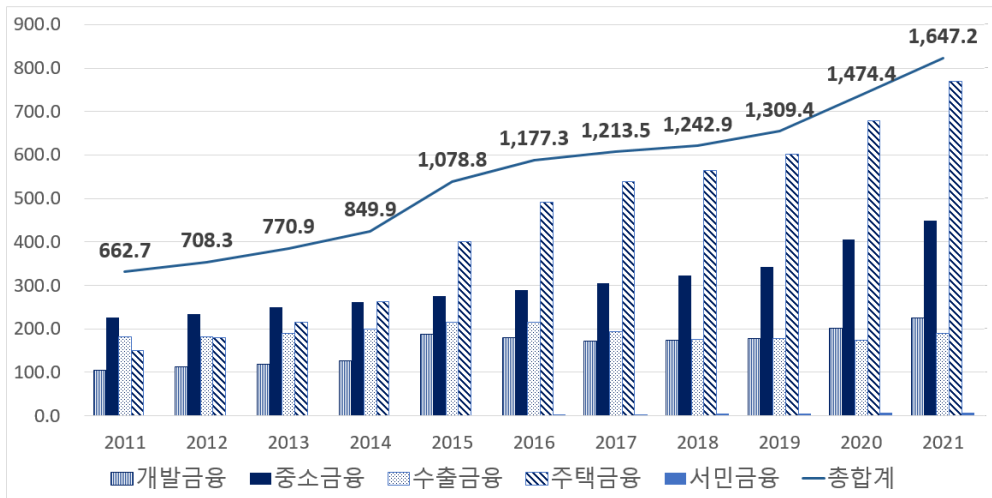
상기 정책금융 지원 분야별 기관 분류에 따라 구분된 18개 금융공공기관이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지원 방식을 통해 공급한 각 연도별, 지원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다음과 같다.³⁾ 해당 정책금융 분야별 연도

2) 실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이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업무 영역의 중복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수행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금융공공기관 별 지원 분야를 분류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현황 분석」, 2022.6., 22~35쪽)

별 잔액 산정 시, 분야별로 구분된 각 금융공공기관이 연도별로 공급한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전체를 해당 정책금융 분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⁴⁾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은 2011년 662.7조원에서 2021년 1,647.2조원으로 984.5조원(148.6%)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의 증가를 각 분야별로 볼 때 주택금융 분야 공급액의 증가가 가장 컸고(2011년 대비 2021년 620.0조원 증가, 증가율 412.2%),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 금융이 차지(2011년 대비 2021년 222.3조원 증가, 증가율 98.0%)하고 있다.⁵⁾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원분야별 정책금융 공급 잔액]

(단위: 조원)



주: 한국산업은행(개발금융)은 2014년 말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였으며, 위 graph에서 2014년 이전 data는 한국산업은행의 data만 취합된 것으로, 자료 해석에 일부 한계가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의 용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공급 잔액이다.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위탁자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는 기관으로, 국내 정책금융 공급과는 관련이 없어 금융 공급액을 제외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보 대상 예금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체 예금으로 상기 정책금융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4) 예를 들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용자(대출), 보증, 투자잔액 전체를 중소기업이 아닌 개발금융 지원 잔액으로 분류하였다.

5)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현황 분석」, 2022.6.” 참조.

(2)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현황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3년(예산기준)까지 18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액은 최근 10년간 예산 지원액의 65.7%인 27조 1,171억원이며, 2023년에는 4조 44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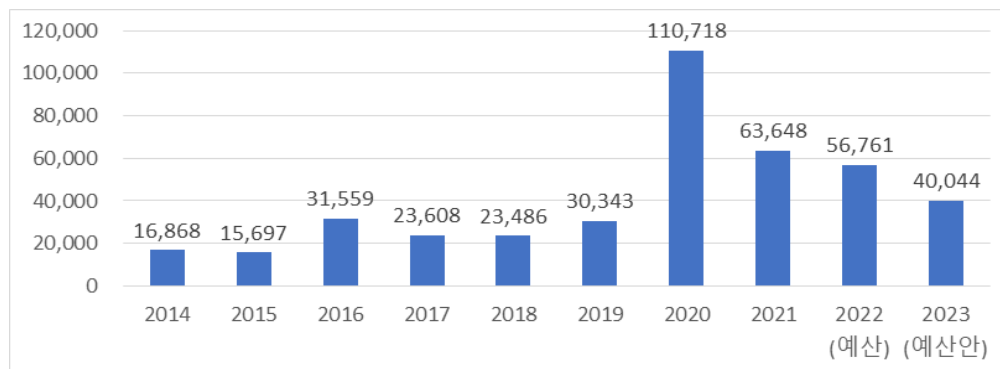
①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3년(예산기준)까지 18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액은 최근 10년간 예산 지원액의 65.7%인 27조 1,171억원임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2023년(예산안)까지 최근 10년간 편성된 연도별 18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액⁶⁾은 아래와 같다.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된 2020년 정부 예산¹¹조 718억원 등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편성된 예산(안) 금액은 27조 1,171억원으로, 과거 10년간인 2014~2023년 편성된 총 예산(안) 41조 2,731억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액은 2020년의 11조 718억원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총 4조 44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 예산 지원액]

(단위: 억원)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급인 직접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및 손실보상금 관련 정부 예산 지원액은 제외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6) 정부 현금 예산 기준이며, 현물출자는 제외한 규모이다. 2014~2023년(예산안)간 정부는 18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총 6.5조원의 현물출자를 수행하였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2014~2023년(예산안)까지 각 연도별 18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액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11조 2,021억원이며, 이는 전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액 41조 2,731억원의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주로 조선업 구조조정 및 대외경제 악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사업 확대, 벤처투자 등을 위해 지원되었다.

그 뒤를 이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금액이 5조 8,339억원으로 1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2020년 이후 정부 지원액이 4조 9,172억원으로, 2014년 이후 2023년(예산안)까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 5조 8,339억원의 84.3%인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동안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5조 5,562억원(13.5%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에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우량 회사채, CP매입 기구, 증권시장 안정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을 위해 2조 1,026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에는 상기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예산 2,296억원 및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5,100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뉴딜펀드 조성(6,000억원) 및 녹색금융(KDB 넷제로 프로그램) 사업(1,300억원)을 위해 7,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 예산안에는 해당 뉴딜펀드를 재편한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3,000억원 및 녹색금융 사업을 위해 500억원이 편성되었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연도별 정부 예산 지원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2023 (예산안)	합 계	
											금액	(비중)
한국수출입은행	1,300	1,300	10,200	0	0	562	5,783	2,988	250	0	22,383	(5.4)
한국산업은행	200	550	3,077	1,450	1,700	5,550	21,026	11,208	7,300	3,500	55,562	(13.5)
중소기업은행	98	400	400	0	0	2,250	12,688	491	0	0	16,327	(4.0)

(단위: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2023 (예산)	합 계	
											금액	(비중)
기술보증기금	500	400	800	508	600	1,030	4,883	3,500	1,770	400	14,391	(3.5)
신용보증기금	1,000	1,300	2,100	1,841	1,417	1,510	33,266	4,406	11,100	400	58,339	(14.1)
주택도시보증공사	0	0	0	0	700	0	0	3,900	0	0	4,600	(1.1)
한국주택금융공사	0	500	0	0	900	900	0	500	1,590	1,300	5,690	(1.4)
한국무역보험공사	1,400	1,450	3,900	700	800	1,350	5,731	3,500	912	500	20,243	(4.9)
예금보험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48	600	600	536	356	469	2,123	2,369	1,644	1,409	10,653	(2.6)
서민금융진흥원	0	0	1,750	1,750	1,750	1,750	1,233	2,670	3,321	8,954	23,178	(5.6)
한국해양진흥공사	0	0	0	0	1,300	700	0	300	300	0	2,600	(0.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991	6,409	5,461	13,436	10,426	8,815	14,734	17,998	12,566	12,186	112,021	(27.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32	2,788	3,271	3,388	3,526	5,006	7,551	8,899	9,508	8,545	54,314	(13.2)
한국자산관리공사	0	0	0	0	0	0	900	119	6,000	2,800	9,819	(2.4)
한국투자공사	0	0	0	0	0	0	0	0	0	0	0	0.0
한국벤처투자	0	0	0	0	0	0	0	0	0	0	0	0.0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0	0	0	0	11	451	800	800	500	50	2,612	(0.6)
합 계	16,868	15,697	31,559	23,608	23,486	30,343	110,718	63,648	56,761	40,044	412,731	(100.0)

주: 1. 2022년 정부지원 금액은 2022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기준임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급인 직접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및 손실보상금 관련 정부 예산 지원액은 제외하였음

3.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22년 및 2023년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한 예산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② 2023년 금융공공기관 예산안 상 청년지원 관련 예산안의 2022년 예산 대비 6,444억원 증가

앞서 설명한 각 금융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수행 업무를 중심으로 구분된 주요 지원 분야별로 아래에서와 같이 각 연도의 정부 예산 지원액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중소기업 및 개발금융(한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 지원액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해당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규모가 감소하면서 정부 예산안 편성액도 4조 44억원으로 2022년 예산 5조 6,761억원 대비 1조 6,716억원 감소하였는데, 다만 금융공공기관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관련 금융상품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에는 해당 청년지원 예산이 7,279억원 편성되어 2022년 관련 예산 836억원 대비 6,4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별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 예산 지원액]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 (b-a)
중소금융	16,325	19,080	75,245	37,663	36,588	22,940	△13,648
기술보증기금	600	1,030	4,883	3,500	1,770	400	△1,37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26	5,006	7,551	8,899	9,508	8,545	△963
신용보증기금	1,417	1,510	33,266	4,406	11,100	400	△10,7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56	469	2,123	2,369	1,644	1,409	△235
중소기업은행	0	2,250	12,688	491	0	0	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426	8,815	14,734	17,998	12,566	12,186	△380
수출금융	800	1,912	11,514	6,488	1,162	500	△662
한국무역보험공사	800	1,350	5,731	3,500	912	500	△412
한국수출입은행	0	562	5,783	2,988	250	0	△250
개발금융	1,700	5,550	21,026	11,208	7,300	3,500	△3,800
한국산업은행	1,700	5,550	21,026	11,208	7,300	3,500	△3,800
주택금융	1,600	900	0	4,400	1,590	1,300	△290
주택도시보증공사	700	0	0	3,900	0	0	0
한국주택금융공사	900	900	0	500	1,590	1,300	△290
서민금융	1,750	1,750	1,233	2,670	3,321	8,954	5,633
서민금융진흥원	1,750	1,750	1,233	2,670	3,321	8,954	5,633
(청년지원)	0	0	(300)	(590)	(836)	(7,279)	(6,444)
기타	1,311	1,151	1,700	1,219	6,800	2,850	△3,950
한국자산관리공사	0	0	900	119	6,000	2,800	△3,200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11	451	800	800	500	50	△450
한국해양진흥공사	1,300	700	0	300	300	0	△300
총합계	23,486	30,343	110,718	63,648	56,761	40,044	△16,716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2023년에는 11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4조 44억원의 예산안 편성

2023년 예산안 4조 44억원의 각 기관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3년에는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등 아래의 11개 기관에 대하여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기타 경상, 자본지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조 2,186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8,954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와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에서 각각 3,000억원과 5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금융위원회 일반회계(7,130억원)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1,825억원) 등으로부터 총 8,954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는 등 하나의 금융공공기관이 다부처로부터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 정부 지원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단위: 억원)

기관명	부처	사업명	2023 예산안	사업내용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3,000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신산업·전략산업 및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목적의 혁신성장펀드 조성

7) 위의 각 기관으로의 예산안 편성 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위탁 업무 중 하나인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리·운용 주체는 중소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기는 하나, 융자 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 실행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융자사업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금융공공기관으로 설정하였으나, 융자 금액은 관리운용주체가 중소기업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계획 금액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014~2023년(예산안) 간의 해당 융자 사업에 대한 연도별 결산 및 계획(안) 편성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3년에는 3조 8,545억원의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연도별 결산 및 계획(안)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결산								계획	계획안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상공인지원(융자)	10,997	20,883	20,821	25,838	24,206	27,131	53,051	64,899	44,590	38,545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위: 억원)

기관명	부처	사업명	2023 예산안	사업내용
	기획재정부 (기후 대응기금)	산업은행 출자 (녹색금융)	500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제공
		소 계	3,500	-
신용보증 기금	기획재정부 (기후 대응기금)	기후대응보증 (신보출연)	400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제품·기술 기업의 R&D, 사업화 및 생산 확대 등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지원
한국주택 금융공사	금융 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300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비용 절감 및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확대
서민금융 진흥원	금융 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3,602	청년층 저축 장려 및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저축장려금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528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운영(기여금 지원)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75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등 지원(햇살론 지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50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자금공급 지원
		소 계	8,954	-
한국자산 관리공사	금융 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 운영
기술보증 기금	기획재정부 (기후 대응기금)	기후대응보증 (기보출연)	400	기술평가 및 탄소기술평가를 적용하여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보증지원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409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30~80%)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 지원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11,397	융자사업 수행 및 경상, 자본지출 사업수행에 따른 기금 지출 대비 수입 부족분 지원

(단위: 억원)

기관명	부처	사업명	2023 예산안	사업내용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789	• 용자사업 수행 관련 비용 등을 복권기 금에서 출연
		소 계	12,186	-
한국무역 보험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 험제도의 운영 지원
한국해외 인프라도시 개발지원 공사	국토 교통부	글로벌 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50	•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성격의 자금 지원을 위한 PIS 모태펀 드 조성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¹⁾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소상공인창업지원, 시장경쟁력향상지원 등	8,545	•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전통시장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합 계	40,044	-

주: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관리운영주체가 중소기업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에 따른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예산(계획) 규모 감액 가능성 검토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이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⁸⁾

2020년 4월 시행 시 지원 대상은, ①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②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이 없는 경우, ③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이 해당 대출원금의 만기를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

8) 금융위원회, “4월 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0.3.31.

상 연장해주거나, 일시상환·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주요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 대출	2020.3.31.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 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자료: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 방안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2022.9.27.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에 최초로 시행(신청기한 ~2020. 9.) 되었으나, 이후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경제회복의 지연으로, 2020년 8월(신청기한 ~2021. 3.), 2021년 3월(신청기한 ~2021. 9.), 및 2021년 9월(신청기한 ~2022. 3.), 2022년 3월(신청기한 ~2022. 9.)의 네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또한, 2022년 9월 27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권 위기 연착륙 지원을 위해,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원금 만기연장은 향후 최대 3년간(2025년 9월까지), 대출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는 향후 최대 1년간(2023년 9월 까지) 금융권 자율협약에 의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⁹⁾10)되었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외에 차주가 원금조정·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9)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 방안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2022.9.27.

10) 따라서 최대 2025년 9월까지 대출원금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말까지 유예 가능(2023년 9월 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하다.

11) 금융위원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2022.8.29.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총 57.2만명으로, 해당 대출 잔액은 총 141.4조원이며, 이중 만기연장 대출잔액이 124.7조원(53.4만명), 원금·이자상환 유예 대출 잔액이 16.7조원(3.8만명) 수준이다. 해당 차주 중,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에 의해 최대 3년(만기연장의 경우) 또는 1년간(상환유예의 경우) 추가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새출발기금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지원 조치]

차주 구분 (2022.6.)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 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원 (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원 (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합계	141.4조원 (57.2만명)	-	-

자료: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 방안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 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2022.9.27.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¹²⁾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안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최대 3년간(2025년 9월까지) 재연장 됨을 고려하여, 해당 연장 조치가 예산안 편성시 적용된 채권 인수 규모 및 필요 출자 예산안 규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¹³⁾는 코로나19 피

12)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2. 10., pp. 124~130 참조

13) 코드: 일반회계 2432-303

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산하 새출발기금(SPC)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등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캠코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00억원 감액된 2,8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	600,000	280,000	△320,000	△53.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¹⁴⁾의 채무 조정 등을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캠코 내 기금이다. 동 기금의 자금을 통해 장기연체(3개월 이상)에 빠진 부실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즉, 부실차주의 신용대출·보증부대출(대위변제 후)에 대하여는 차주 순부채¹⁵⁾의 60~80%에 해당하는 원금조정을 포함한 금리감면·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부실차주의 담보부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감면·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4)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취약차주인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판단 기준(안)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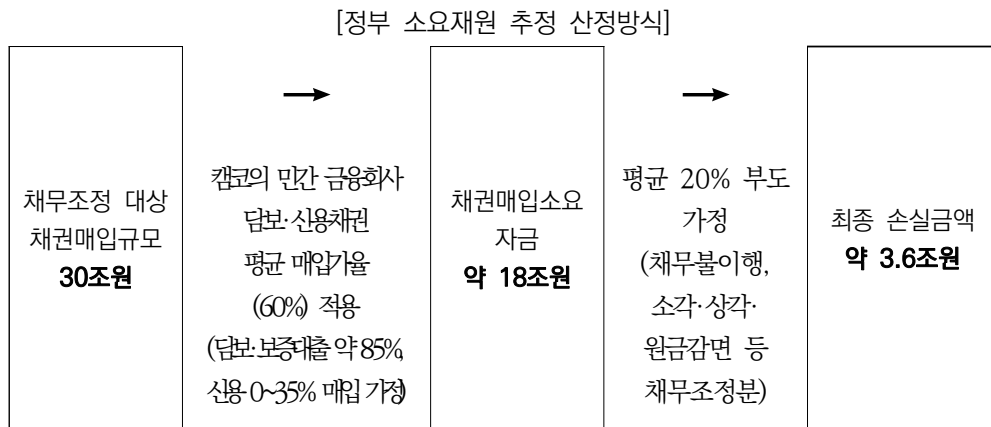
구 분	판단 기준(안)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자료: 금융위원회, “코로나로 힘든 우리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2022.8.29.를 바탕으로 재작성

15)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을 말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운용을 위해 캠프는 정부의 자본금 증자 및 캠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새출발기금(SPC)을 설립하고, SPC에서 부실(우려)채권 매입 및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여건 및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2025년 9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 총 채권매입규모를 30조원으로 산정¹⁶⁾하였다. 이 중 평균 매입가율 60%를 적용한 채권 매입액 18조원 중 부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분 3.6조원을 정부 출자로 조달하고, 14.4조원은 최대 3년간 캠프채를 분산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정부의 6,000억원 현금출자 및 5,000억원의 현물출자¹⁷⁾를 합한 1.1조원은, 최종 손실금액 3.6조원의 약 30% 수준이며, 2023년 예산안 2,8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률상 자본금 제한(3조원)¹⁸⁾으로 인해 2022년 말 기준 자본금 잔여액¹⁹⁾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총 3.6조원(추가

16)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부동산임대·매매업 제외)의 총 대출 약 666조원(= 사업자대출 441조원 + 가계대출 225조원) 중 5~10%에 해당하는 35~70조원이 잠재부실로 추정되며, 금융위원회는 잠재부실의 약 40%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7) 한국도로공사 주식이다.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

19) 현 자산관리공사 법정 자본금 3조원 - 현 납입자본금 1.6조원 - 2022년 추정 예산(현물출자 0.5조원 포함) 1.1조원 = 2,800억원이다.

2.22조원) 출자를 위해 자본금 한도 상향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2022년 및 2023년의 예산안을 통해 캄코는 총 손실 발생금액 3.6조원의 38%(2022년 30%, 2023년 8%) 수준을 정부예산으로 수령할 예정이다.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현금출자 600,000백만원 (+현물출자 500,000백만원) = · 대출채권 30조원 매입 손실금액 3.6조원의 약 30% 확보	280,000백만원 = · 대출채권 30조원 매입재원 손실금액 3.6조원의 약 8% 확보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잔여한도분을 확보 (잔여예산은 2024,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확충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예산안 규모 산정시에는 2022년 9월 말 결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고려되지 않은 바, 해당 연장 조치가 예산안 편성시 적용된 연도별 채권 인수 규모 등 필요 출자 예산안 규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 차주는 아래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 이용정보의 신용정보원 등록 등으로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거나(부실차주),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부실우려차주)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이용 시 차주 구분에 따른 신용 불이익]

구 분	신용 불이익
부실 차주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에 공유 →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부실 우려 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코로나로 힘든 우리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2022.8.29.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2022년 예산 적용 시 고려된 채권 매입액의 30% 수준을, 기금 설립 초기 채무조정 신청 집중현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 말 결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5년까지 최대 3년 연장됨에 따라,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가 예상 대비 분산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신용 거래 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기 보다는, 신용 하락을 이연할 수 있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필요 출자 예산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손실 관련 계획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에 따라, 2022년 9월 해당 조치의 종료를 가정하여 편성된 2023년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계획안 상 대위변제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의 상당 부분은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 잔액(2021.12)]

(단위: 억원, %)

구 분	각 기관의 중소기업 보증 잔액 ²⁾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 잔액
신용보증기금	679,286	368,201
기술보증기금	264,929	196,592
지역신용보증재단	425,239	123,708
한국무역보험공사	22,836	14,305
소계 (A)	1,392,290	702,806
은행의 중소기업(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합계 (조원) (B) ¹⁾	922.2	130.1
비율 (A/B)	15.1	54.0

주: 1) 922.2조원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의 2021년 말 기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총 잔액이며, 130.1조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된 은행권(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대출 총 잔액임(90.1조원 + 40.0조원)

2) 각 기관의 중소기업 보증잔액 산정 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와의 비교를 위해, 상거래 채권 보증 등은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즉,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보증 잔액은 2021년 말 기준으로 70조 2,806억원 규모이다.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신용보증기금이 36조 8,201억원, 기술보증기금이 19조 6,592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2조 3,708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조 4,305억원의 관련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70조 2,806억원의 보증 잔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130.1조원(은행 90.1조원 + 정책금융기관 40.0조원)²⁰⁾의 54.0%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의 54.0%는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비율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2021년 말 기준 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총 보증 잔액 139조 2,290억원이 전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채권 잔액 922.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15.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상당부분은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 정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2021년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보증 잔액이 각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아래 표 참조),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총 보증잔액 26.5조원의 74.2%,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총 보증잔액 59.1조원의 62.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 잔액이 각 기관 총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2021.12)]

(단위: 억원, %)

구 분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증 잔액 (a)	각 기관의 총 보증 잔액 (b)	비중 (a/b)
신용보증기금	368,201	591,461 ¹⁾	62.3
기술보증기금	196,592	264,929	74.2
지역신용보증재단	123,708	425,239	29.1
한국무역보험공사 ¹⁾	14,305	22,836	62.6

주: 1) 신용보증기금의 총 보증잔액은 일반보증 보증 잔액임

2)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보증 잔액이 총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6%로 높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외에 보험(2021년 말 잔액 78.1조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보증, 보험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2년 9월로 종료될 것으로 계획되었던 바, 위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금융공공기관은 2023년 예산(계획)안 상 보증 관련 손실 등 추정 시 해당 조치의 2022년 9월 종료를 가정하여 예산(계획)안 규모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2년 9월 말에 추가 연장이 결정되었으며, 이의 영향으로 인한 각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관련 예산(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을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2021.12.)]

(단위: 조원, %)

구 분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합 계
은행 ¹⁾	83.4	5.0	1.7	90.1
정책금융기관(a) ²⁾	32.7	5.7	1.6	40.0
(비중) (a/b)	(28.0)	(46.7)	(31.4)	(29.9)
제2금융권 ³⁾	0.4	1.5	1.7	3.6
합 계 (b)	116.6	12.2	5.1	133.8

주: 1) 상기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 그리고 농협, 수협, 특수은행을 말함

2)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임

3)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1.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2022.3.3.를 참고하여 재작성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보증 금융공공기관 별로 2023년 예산(계획)안 상 편성된 관련 보증 손실 규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 계획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대위변제²¹⁾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²²⁾ 사업은 기금이 보증한 주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도 계획안 상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대위변제 계획안 규모는 2022년 대비 1,064억 7,900만원(4.7%) 증가한 2조 3,509억 2,200만원이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에는 2022년 대비 2,224억원(17.2%) 증가한 1조 5,139억원의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	1,211,072	2,244,443	2,244,443	2,350,922	106,479	4.7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663,512	1,291,500	1,291,500	1,513,900	222,400	17.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대위변제 및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계획안의 세부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각 기금의 계획안 규모 산출 시,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에서는 3.9%의 부실률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에서는

21)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00

22) 코드: 기술보증기금 2441-300

6.0%의 부실률이 적용되었다.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 및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계획안 세부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계획안 규모	세부 산출 근거	적용 부실률															
신용 보증기금 일반보증 대위변제	2,350,922	[기초 부실잔액(6,386억원) + 당기 부실순증액(23,927억원)(*)] × 대위변제 이행률(77.55%)(**) (*) 2023년 말 예상 보증잔액(613,425억원) × 부실률 (3.9%) (**) 5개년(2018~2022년) 평균 대위변제 이행률	3.9															
기술 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위변제	1,513,900	기술보증대위변제 규모는 보증규모(26.2조원), 예상보증 사고율(부실률)(6.0%)과 대위변제보증해지경험률(78.2%) 및 종속채무이행경험률(101.4%)에 의해 결정 대위변제규모 = 대위변제보증해지(*) × (1 + 종속채 무이행경험률(**)) (*) 대위변제보증해지 = (전기사고잔액 + 당기사고순증) × 대위변제보증해지경험률 (**) 대위변제시 보증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채권회수비용 등 종속채무 추가지급 비율 [세부 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h>산출근거</th></tr><tr><td>전기보증사고 잔액(A)</td><td>339,000</td><td>'22년 사고잔액 예상액</td></tr><tr><td>당기보증사고 순증(B)</td><td>1,570,200</td><td>'23년 보증사고율 6.0%</td></tr><tr><td>대위변제보증 해지(C)</td><td>1,493,000</td><td>C = (A + B) × 78.2%(*)</td></tr><tr><td>대위변제발생 (D)</td><td>1,513,900</td><td>D = C × 101.4%(**)</td></tr></table> (*) 최근 5년간('17~'21년) 평균 대위변제보증해지경험률 78.2% (**) 최근 5년간('17~'21년) 평균 종속채무이행경험률 101.4% 적용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전기보증사고 잔액(A)	339,000	'22년 사고잔액 예상액	당기보증사고 순증(B)	1,570,200	'23년 보증사고율 6.0%	대위변제보증 해지(C)	1,493,000	C = (A + B) × 78.2%(*)	대위변제발생 (D)	1,513,900	D = C × 101.4%(**)	6.0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전기보증사고 잔액(A)	339,000	'22년 사고잔액 예상액																
당기보증사고 순증(B)	1,570,200	'23년 보증사고율 6.0%																
대위변제보증 해지(C)	1,493,000	C = (A + B) × 78.2%(*)																
대위변제발생 (D)	1,513,900	D = C × 101.4%(**)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2023년 계획안 상 부실률 산정 시에 2022년 9월로 예정되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부실률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의 경우 0.3%의 추가 부실률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대위변제의 경우 이연 잠재부실 3.1%의 1/2 수준인 1.5%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3 계획안 상 부실률 추정 세부 내역]

(단위: %)

구 분	적용 부실률	부실률 추정 세부 내역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	3.9	-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한 부실예측모형에 의해 3.3% 기본 부실률 산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영향(0.3%), 금리인상 영향(0.2%) 및 추가 버퍼(0.1%) 반영하여 +0.6% 반영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6.0	코로나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사고율 4.5%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22년 9월) 등에 따른 이연된 잠재부실(*) 3.1% 등 반영(이연부실 1/2는 자체 관리) (*) 2020년(3.4%) 및 2021년(2.5%)의 각 연도별 사고율이 평균 4.5% 대비 각각 1.1%p, 2.0%p하락 (1.1%+2.0% = 3.1%)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와 관련한 각 연도별 실제 발생 부실률 및 2022년 계획 및 2023년 계획안 상 반영된 부실률은 아래와 같다. 2023년 계획안 상 적용된 부실률 3.9% 및 6.0%는 2022년 8월까지의 연환산 부실률 1.9%, 2.4%와 비교 시 각각 2.0%p, 3.6%p 높은 수치이다.

[일반보증대위변제 및 기술보증대위변제 연도별 부실률]

(단위: %, %p)

구 분	실제						계획	계획안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¹⁾ (a)	2022	2023 (b)	차이 (b-a)
일반보증 대위변제	3.5	3.6	3.3	2.4	2.0	1.9	4.0	3.9	2.0
기술보증 대위변제	4.4	4.5	4.5	3.4	2.5	2.4	4.8	6.0	3.6

주: 1) 2022년 8월까지의 부실률은 연환산 부실률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한,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 및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은, 2020년 4월 이후 실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지속적인 연장²³⁾ 등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제 발생 부실률이 하락하여 연도별 집행률이 계속해서 크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제 부실률 차이가 2019년 0.3%p에서 2020년 1.5%p, 2021년 1.8%p, 2022년 7월까지 2.1%p 등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집행률 또한 2020년 72.0%, 2021년 62.1%, 그리고 2022년 7월까지 27.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계획 대비 실제 사고율 차이가 2019년 0.3%p에서 2020년 1.4%p, 2021년에는 2.0%p, 2022년 7월 2.4%p로 확대되면서, 해당 집행률은 2020년 80.9%에서 2021년 54.7%, 2022년 7월까지 27.7%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보증대위변제 및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 연도별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p)

구 분	연도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A-B)	부실률		
						계획(a)	실제(b)	차이 (b-a)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대위변제	2019	1,662,700	1,570,289	94.4	92,411	3.6	3.3	△0.3
	2020	1,889,500	1,360,862	72.0	528,638	3.9	2.4	△1.5
	2021	1,951,130	1,211,072	62.1	740,058	3.8	2.0	△1.8
	2022	2,244,443	608,317	27.1	-	4.0	1.9	△2.1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위변제	2019	1,008,300	965,318	95.7	42,982	4.8	4.5	△0.3
	2020	1,017,000	822,491	80.9	194,509	4.8	3.4	△1.4
	2021	1,213,000	663,512	54.7	549,488	4.5	2.5	△2.0
	2022	1,291,500	357,692	27.7	-	4.8	2.4	△2.4

주: 2022년의 수치는 2022년 7월말 현재 기준이며, 부실률은 연 환산 부실률임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창업부

23)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상기 외에 유동성 공급 및 금리인하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4월 이후 실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계획안 규모 추정시에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2020년 계획안), 또는 해당 제도가 지속적으로 향후 6개월까지(차년도 3월 말까지)만 연장되는 것으로 계획(2021, 2022년 계획안)됨에 따라 해당 조치로 인한 부실률 하락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2022년 9월, 대출원금 만기연장은 최대 3년,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바,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로 인한 2023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계획안상의 부실률 하락 가능성 및 금리 인상 등의 대내외 경제환경 등을 반영하여 대위변제와 관련한 적정 계획안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ii)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계획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²⁴⁾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30~80%)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해 안정적인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획안에는 2022년 계획안 대비 234억 9,600만원(△14.3%) 감소한 1,40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36,886	164,380	164,380	140,884	△23,496	△14.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계획안 규모는 수지차 방식을 사용²⁵⁾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24)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234-303

25)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수지차 기관은 아니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 계획안 산정 시에는 수지차 방식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즉, 지출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유동성 공급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증한 보증잔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총 보증잔액을 전년 대비 2조원 감소한 42조원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2021년 재보증비율 실적치 53.8%를 적용하였으며,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은 코로나19 직전 3개년도인 2017~2019년의 평균치 1.79%를 적용하여 손실보전금 지출액을 4,044억 6,8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총 지출액을 4,093억 800만원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재보증 잔액의 0.83%를 적용한 재보증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수입액을 2,684억 2,500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지출액에서 총 수입액을 차감한 수지차액이 1,408억 8,4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금액을 정부 출연 계획안 규모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계획안 세부 산출 근거]

(단위: 억원, %)

구분		구분		산출근거
		2023	2022	
보 증 잔 액		420,000	440,000	긴급유동성 공급으로 급증한 보증잔액을 완화 (△2조원)
재보증잔액(A)		225,960	242,000	재보증비율 '21년 실적치 적용 (보증잔액의 53.8%)
손실보전금 순지급률(B)		1.79	1.79	코로나 직전 3개년도 평균 * (17) 1.68% (18) 1.72% (19) 1.96%
지출 (C)	계	4,093.08	4,380.20	-
	■ 손실보전금	4,044.68	4,331.80	재보증잔액(A) × 손실보전금순지급률(B)
	■ 관리비용 등	48.40	48.40	전년과 동일
수입 (D)	계	2,684.25	2,736.40	-
	■ 재보증료	1,875.47	2,009.00	재보증잔액의 0.83%
	■ 금융기관출연금	568.49	510.40	'21년 실적치 대비 최근 5년간 연평균 대출증가율(5.3%) 적용
	■ 운용수익	119.50	104.00	'21년 결산수치
	■ 기타수익 ¹⁾	120.79	113.00	'21년 결산수치
수지(E) = (D-C)		△1,408.84	△1,643.80	-
정부출연금(F)		1,408.84	1,643.80	-

주: 1) 기타수익은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으로 구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의 2023년 계획안 규모 산정 시 코로나19 직전 3년(2017~2019년)간의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평균인 1.79%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된 2020년 이후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실제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을 살펴보면, 2020년 1.16%, 2021년 1.02%,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1.03%로, 각 연도별 계획 대비 0.76%p, 1.01%p, 0.76%p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추이(2012~2022.6.)]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
실적 (a)	2.78	2.52	2.15	1.68	1.57	1.68	1.72	1.96	1.16	1.02	1.03
계획 (b)	2.80	2.80	2.80	2.73	2.48	1.70	1.57	1.57	1.92	2.03	1.79
차이 (a-b)	△0.02	△0.28	△0.65	△1.05	△0.91	△0.02	0.15	0.39	△0.76	△1.01	△0.76

주: 2022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은 연환산 수치임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와 같은 2020년 이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실적치의 계획 대비 감소 등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순금융자산은 2017년 2,690억 5,700만원에서 202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1년 말에는 2017년 대비 4,933억 1,500만원 증가한 7,623억 7,2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²⁶⁾

2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의 2020년 이후 재보증잔액 급증에 따라 재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운용배수는 2020년 55.3배까지 상승하였으나, 2021년 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본재산의 증가에 따라 운용배수가 37.4배로 하락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보증잔액(A)	93,663	100,697	113,684	211,802	228,560
기본재산(B)	2,967	2,873	2,464	3,831	6,114
운용배수(A/B)	31.6	35.1	46.1	55.3	37.4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 연도별 순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A)	2018	2019	2020	2021 (B)	증감 (B-A)
예치금(a)	410,048	414,288	417,419	845,278	1,085,356	675,308
유동부채(b)	140,991	157,265	189,733	324,736	322,984	181,993
순금융자산 (a-b)	269,057	257,023	227,686	520,542	762,372	493,315

자료: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의 계획안 규모는 매년도 예상 수입에서 필요한 손실보전금 등의 지출을 차감한 수지차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근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에 따른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의 계획 대비 실적치 차이 등이 반영된 재보증회계 순금융자산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⁷⁾

(2) 청년 자산형성 관련 금융지원 예산안의 문제점

2023년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에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으로 청년희망적금 예산 3,602억원 및 청년도약계좌 예산 3,528억원 등 총 7,129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청년 자산형성 금융지원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 재산정 검토 필요²⁸⁾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3월에 가입이 이루어진 바 저축장려금 지급이 실제 2024년에 이루어지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예산의 효율

27)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준금리가 3% 이상으로 급격히 인상되어 소상공인 금융부담 증가로 부실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운용배수 추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8)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pp. 50~57 참조

적 활용을 고려하여 2023년의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의 일부를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²⁹⁾은 청년층 저축 장려 및 안정적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위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³⁰⁾으로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22년 대비 3,126억 1,800만원(657.4%) 증액된 3,601억 6,800만원의 금액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0	47,550	47,550	360,168	312,618	657.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해당 상품은 인당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으로, 만기까지 유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하여 1년차 납입액은 2%, 2년차 납입액에 대하여는 4%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³¹⁾하고,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2023년의 예산안 3,601억 6,800만원은 저축장려금 지원금액 3,600억원과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임금 1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축장려금 3,600억원의 편성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 청년층 계좌 수 등을 고려하여 38만 계좌로 추정하였던 가입 계좌 수가 2022년 2월 21일~3월 4일 간의 가입기간 동안 실제 287만 계좌로 7.5배 이상 급증하였다.³²⁾ 이에 3월 말 기준 계좌당 평균 납입액 41.1만원에

29) 코드: 일반회계 1831-880

30)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 시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31) 따라서 1인당 최대 36만원(50만원 × 12 × 2% + 50만원 × 12 × 4% =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32)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은행 제공 금리는 연 5%(우대금리 최고 연 1% 추가 가능)로,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연 9.31% 금리의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금융위원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

해지율 10% 수준을 적용한 저축장려금(1년차 2%+2년차 4%=6%) 최대 필요 추정 금액 7,640억원에서, 22년 예산 수령액 456억원을 제외한 금액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50% 수준인 3,60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의 적금 상품으로, 일부 특별중도해지자³³⁾에 대한 지급을 제외하고 저축장려금을 포함한 원금 및 이자가 가입 2년 후 만기에 일시 지급된다. 따라서 287만 계좌가 2022년 2월 21일~3월 4일 간 가입되었는 바, 만기까지 유지되는 계좌에 대한 저축장려금은 2024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2022년도 출연금 477.5억원 중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려금 지급을 위해 단기성(6개월)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어 2022년 10월 현재 연 2.95%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로부터 출연받을 저축장려금 또한 2024년 2월 실제 지급되기 전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련 여유자금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여유자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자금관리 규정」 내규에 따라 원본의 안정성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며, 주로 금융회사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보도자료, 2022.2.7.)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높은 이자율 수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 계좌 수가 최초 상품 추정 계좌 수에 비해 7.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특별중도해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가능하다. (은행 약관 참조)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 마.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22년 청년희망적금 관련 출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총 출연금	특별중도해지지급액	여유자금 운용	비 고
47,550	2	43,300	* 예치기간
(저축장려금 45,600)			: 2022.5.12.~11.22.
			* 예치금리: 2.9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정부 출연금 예산 조달금리라고 볼 수 있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최근 상승하여 2022년 5월 3.18%, 8월 3.17%으로, 청년희망적금 관련 별도계정에서 운용 중인 금리수준(2.95%)보다 높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여유자금 자산운용 수익률도 2022년 6월말 기준 1.2%에 불과하여 당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3.42% 대비 △ 2.22%p 차이가 발생하였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단위: %)

구 분	2021	202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1.79	2.95	2.61	3.15	3.18	3.42	3.40	3.17
서민금융진흥원 자산운용 수익률	1.33	-	-	-	-	1.20	-	-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실제 2024년에 이루어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지원 예산 3,600억원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³⁴⁾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2022년 3월~7월간의 각 월별 특별중도해지로 인한 저축장려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만원, 건)

구 분	'22.3월	'22.4월	'22.5월	'22.6월	'22.7월	계
저축장려금 지급액	4.1	6.2	28.4	45.1	94.1	178.0
(건수)	(4)	(4)	(15)	(17)	(25)	(65)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관련 계획 구체화 필요³⁵⁾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2032년까지 발생 가능한 최대 10년간의 중장기 소요 예산인 바,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상품 유지 기간 동안의 총 정부 부담 기여금 등 세부 내역이 국회 예산안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32년까지 지출되는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³⁶⁾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운영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가입대상 청년이 한도 내에서 본인 납입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3,527억 7,2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0	0	0	352,772	352,772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³⁷⁾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월 기여금 지급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40~70만원, 기여금 정부 매칭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6% 매칭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5년 만기의 장기 금융 상품으로, 금리수준

35)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pp. 58~65 참조

36) 코드: 일반회계 1831-882

37)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

및 월 납입방식 등 상품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10월 현재 미정이며, 향후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을 2023~2027년간 판매할 계획에 있다.

본 사업의 2023년도 예산 3,527억 7,200만원은, 아래와 같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관련 2023년 6개월분 지원 예산³⁸⁾ 3,440억원을 포함하여 인프라구축 예산 86억원,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을 위한 홍보·운영 예산 1.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도약계좌 2023년 예산안 상 기여금 지원 규모 산출 세부 내역]

구 분		내 용
기여금 지원 금액 ① 가입자 (306만명) × ② 월 지원금 (2.34만원) × ③ 예상 납입률 (80%) × ④ 6개월 = 약 3,440억원		
1.가입자	306만명	① '21년 말 기준 만 19~34세 인구수는 약 1천만명 ② 개인소득, 가구소득 자료를 '21년 말 기준으로 조정하여 추정 ③ 전체 청년 인구 중 조정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변수를 만족하는 청년 인구수 추정치를 산출(470~500만명) ④ 기존 유사상품 사례(청년희망적금 287만명), 지원비율,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인원 예상치(65%) 추정 = 470만명 × 65% = 306만명
2.월 기여금	2.34만원	정부예산안 기준 모든 소득구간별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 매칭 기여금 지원금액(본인 납입금 40~70만원, 매칭비율 3.0~6.0%)들의 가중평균
3.예상 납입률	80%	기존 청년희망적금 납입률 사례 등 고려 80%로 추정 (2022년 3월 말 기준 월 평균 납입금액 41.1만원은 납입 한도 50만원의 80% 수준임)
4.개월 수	6개월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6개월 간 정부기여금 지원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 상품으로, 2023~2027년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2023년 상품 출시 이후에는 상기 정부 기여금 지원 예산 또한 향후 5년 이상 지출될 예정³⁹⁾이다. 따라서 2032년까지의 향후 10년간 총 정부 기여금 등 정

38)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2023년 6월 가입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확한 정부 지출 규모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에서 이와 관련한 중기재정계획 상 재정투자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⁴⁰⁾

또한, 금융위원회는 위의 표에서 예를 들어 1.가입자 수 추정 시 ③ 6,000만 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변수를 만족하는 470~500만명의 청년 인구수 추정치에, 기존 청년희망적금 사례 등을 고려하여 65%를 적용하여 가입자 수를 306만명⁴¹⁾으로 추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65%의 비율은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자 대비 가입자 비율 50%⁴²⁾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월 평균 기여금 수령액이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월 평균 기여금의 1.56배⁴³⁾ 정도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50%에 대략적으로 1.3배 정도를 고려한 65%를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기 소요 예산에 대한 정교한 추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해당 추정 비율이 65%에 미달 또는 초과할 경우, 중장기 소요 지출 예산의 특성상 총 필요 정부 예산 금액이 추정치와 크게 달라져, 적정 예산 산정을 통한 재정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다.

즉, 다음의 2023년 예산안에서와 같이 65% 가정 시의 가입자 306만명 추정에 따른 2023년의 6개월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이며, 만기 5년(60개월) 간의 예산은 3조 4,401억원으로 추정되나, 100% 가정시에는 2023년 예산 5,293억원 및 만기 5년(60개월) 예산 5조 2,925억원으로 소요 예산 범위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추가

39) 만약, 금융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까지 청년도약계좌 상품 판매 시, 만기가 5년인 상품이므로 정부 지원 예산은 2032년까지 지출될 수 있다.

40)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21일자로 아래와 같은 2023~2026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부 예산금액	-	352,772	688,446	693,152	696,381
기여금 총계	-	344,037	670,420	680,126	683,355
기여금 외 총계 (전산 제외)	-	8,735	13,026	13,026	13,026

주: 전산구축비는 미반영 됨(현재 관련 ISP 진행 중으로 추후 반영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41) 470만명 × 65% = 306만명이다.

42)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50%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7만명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 584만명] 으로 산정되었다.

4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월 평균 기여금은 위의 표에서 2.34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청년희망적금의 월 평균 저축장려금 1.5만원(50만원 × 12개월 × 6%(1년차 장려금 2% + 2년차 장려금 4%) ÷ 24개월)의 1.56배 수준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여, 금융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까지의 상품 판매를 고려할 경우에는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부 기여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2024~2027년간 19세 신규 연령 해당자 등 신규 가입자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품 출시에 따른 정부 기여금 부담 규모는 보다 확대될 수 있다.

[가입인원 예상치 비율 추정 가정에 따른 기여금 2023년도 예산 및 5년(만기) 예산 추정액]

구 분	가입자 (만명)	월 지원금 (원)	예상 납입률 (%)	2023 예산 (6개월) (억원)	5년(만기) 예산 (60개월) (억원)	65% 가정시 와의 차이
55%	259.16	23,400	80%	2,911	29,109	△5,293
60%	282.72	23,400	80%	3,176	31,755	△2,646
65%	306.28	23,400	80%	3,440	34,401	0
70%	329.84	23,400	80%	3,705	37,048	2,646
75%	353.40	23,400	80%	3,969	39,694	5,293
80%	376.96	23,400	80%	4,234	42,340	7,939
85%	400.52	23,400	80%	4,499	44,986	10,585
90%	424.08	23,400	80%	4,763	47,633	13,231
95%	447.64	23,400	80%	5,028	50,279	15,878
100%	471.20	23,400	80%	5,293	52,925	18,524

주: 월 평균 지원금(2.34만원) 및 예상 납입률(80%)은 2023년 예산안에서 적용된 수치와 동일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2년 최초 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 청년층 계좌 수 등을 고려하여 계좌수를 38만 계좌로 추정하였으나, 2022년 2월~3월의 가입 기간 동안 실제 총 가입 계좌가 287만 계좌로 예상계좌 수의 7.6배⁴⁴⁾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기 2년의 해당 상품 총 정부 장려금 지급 예산 추정액 또한 2022년 예산에서는 1,368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2023년 예산안 편성시에는 7,644억원으로 5.6배 급증하게 되었다.

44)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은행 제공 금리는 연 5%(우대금리 최고 연 1% 추가 가능)로,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연 9.31% 금리의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금융위원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보도자료, 2022.2.7.)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높은 이자율 수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 계좌 수가 최초 상품 추정 계좌 수에 비해 7.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희망적금 2022,2023년 예산안에서의 계좌 수 및 총 정부 장려금 지원액 추정]

(단위: 계좌, 억원)

구 분	계좌 수	2년간 총 정부 장려금 지원액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a)	380,000	1,368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b)	2,870,000	7,644
비율 (b/a)	7.6	5.6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2032년까지 발생 가능한 최대 10년간의 중장기 소요 예산으로 향후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바,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세부 내역이 국회 예산안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32년까지 지출되는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분석⁴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융자복합금융(융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등 6개 세부사업⁴⁶⁾으로 구성된다.⁴⁷⁾ 해당 사업의 2023년 계획액으로는 전년대비 9,445억 4,500만원 감액된 4조 3,75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45)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 202~211 참조

46) 코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24-301, 1261-301, 1261-302, 1261-303, 5152-301, 5161-301

47) 세부사업 투융자복합금융(융자)는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및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에 나뉘어 통합될 예정(23년 1월)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세부사업 수는 5개이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합 계	6,010,000	5,060,000	5,440,000	4,375,455	△1,064,545	△19.6
투융자복합금융(융자)	140,000	120,000	120,000	-	△120,000	순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770,000	1,620,000	1,710,000	1,488,600	△131,400	△8.1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800,000	200,000	360,000	150,000	△50,000	△25.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500,000	400,000	530,000	103,855	△146,145	△58.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550,000	2,300,000	2,300,000	2,230,000	△70,000	△3.04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50,000	420,000	420,000	403,000	△17,000	△4.0

주: 1) 수정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조달금리 또한 인상되는 상황으로, 향후 시장금리 동향,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정책금리 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진기금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종류와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하여 산정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융자사업의 금리수준을 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누적평균 조달금리에 따라 연동되며, 기금 건전성,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융자금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중기부가 승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중진채 평균 조달금리에 변동되기보다는 일정한 기준금리를 지속하여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부터 정책자금 기준금리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분기의 증진채 평균조달금리는 4.74%,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59%로 증진채 평균조달금리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조달금리의 하락폭만큼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하락하지 아니하여 2019년 1분기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조달금리에 비해 높아졌으며, 2022년 3분기 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조달금리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경우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10분기 연속 2.1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 3분기때 2.30%로 소폭 기준금리를 상향하였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운용현황]

(단위: %)

시기 (년,분기)	조달 금리 (A)	기준 금리 (B)	차이 (B-A)	시기 (년,분기)	조달 금리 (A)	기준 금리 (B)	차이 (B-A)	시기 (년,분기)	조달 금리 (A)	기준 금리 (B)	차이 (B-A)
'13.1Q	4.74	3.59	△1.15	'16.2Q	3.24	2.52	△0.72	'19.3Q	2.20	2.30	0.10
'13.2Q	4.66	3.59	△1.07	'16.3Q	3.11	2.47	△0.64	'19.4Q	2.11	2.30	0.19
'13.3Q	4.53	3.57	△0.96	'16.4Q	2.93	2.47	△0.46	'20.1Q	2.06	2.15	0.09
'13.4Q	4.39	3.57	△0.82	'17.1Q	2.76	2.30	△0.46	'20.2Q	2.02	2.15	0.13
'14.1Q	4.25	3.29	△0.96	'17.2Q	2.67	2.30	△0.37	'20.3Q	1.89	2.15	0.26
'14.2Q	4.13	3.13	△1.00	'17.3Q	2.53	2.30	△0.23	'20.4Q	1.81	2.15	0.34
'14.3Q	4.02	3.12	△0.90	'17.4Q	2.39	2.30	△0.09	'21.1Q	1.73	2.15	0.42
'14.4Q	3.86	3.07	△0.79	'18.1Q	2.38	2.30	△0.08	'21.2Q	1.69	2.15	0.46
'15.1Q	3.73	2.86	△0.87	'18.2Q	2.36	2.30	△0.06	'21.3Q	1.68	2.15	0.47
'15.2Q	3.69	2.83	△0.86	'18.3Q	2.36	2.30	△0.06	'21.4Q	1.66	2.15	0.49
'15.3Q	3.63	2.70	△0.93	'18.4Q	2.37	2.30	△0.07	'22.1Q	1.67	2.15	0.48
'15.4Q	3.53	2.60	△0.93	'19.1Q	2.22	2.30	0.08	'22.2Q	1.70	2.15	0.45
'16.1Q	3.34	2.52	△0.82	'19.2Q	2.21	2.30	0.09	'22.3Q	1.83	2.30	0.4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큰 변동 없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누적평균 조달금리를 구성하는 증진채 잔액 중 저금리 시기 발행된 잔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누적평균 조달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지 않아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점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낮게 운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금리 동향과 중소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에 협조하여 용자사업 계획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진기금 정책자금 용자사업 대출잔액 중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제도약지원자금, 혁신창업화사업자금등 일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한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잔액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자사업 전체 대출잔액 중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8월 1.62%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461억 4,500만원에서 2,557억 7,7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한계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전체 대출잔액(A)	10,133,421	10,736,188	12,945,764	14,600,945	15,784,179
한계기업 대출잔액(B)	146,145	141,419	125,596	166,587	255,777
비중(B/A)	1.44	1.32	0.97	1.14	1.62

주: 한계기업은 잔액기업 중 직전 3개년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부실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비해 2021년 부실률은 3.64%에서 3.5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출공급 규모를 급격하게 증대시킨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부실금액은 2018년 3,685억 1,200만원에서 5,224억 4,400만원으로 4년간 41.8%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부실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대출잔액(A)	10,133,421	10,736,188	12,945,764	14,600,945
부실금액(B)	368,512	422,731	501,568	522,440
비중(B/A)	3.64	3.94	3.87	3.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중진기금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실금액 및 한계 기업에 대한 대출액 또한 증가하여 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부실위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의 부실 최소화를 유도하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상환계획을 재설계하는 등 손실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2023년 예산안 편성 관련 계획 미비

①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의 세부 사업계획 마련을 통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필요⁴⁸⁾

혁신성장펀드는 기존의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이나, 지원 분야 및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액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⁴⁹⁾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신산업·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목적의 혁신성장펀드⁵⁰⁾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따른 혁신산업 등 지원을 위해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⁵¹⁾를 재편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48)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p. 66~72 참조

49) 코드: 일반회계 2414-318

50)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집합투자기구)를 말하며,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51) 관계부처 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보도자료, 2020.9.3.

2023년 예산안에는 2022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6,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50.0%)한 3,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510,000	600,000	600,000	300,000	△300,000	△5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펀드는 2023~2027년의 5년간 연간 3조원씩 15조원의 펀드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의 예산안 3,000억원은 2023년 펀드 조성 규모인 3조원 중, 정부 재정투입 비율을 10%로 하여 산정되었다. 2022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6,000억원의 예산에서는 정부 재정투입 비율이 15%(펀드 조성 규모 4조원)로 반영된 바 있다.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산정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600,000	○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 펀드 조성규모 4조원 x 정부재정 비율 15% = 600,000백만원	300,000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 펀드 조성규모 3조원 x 정부재정 비율 10% = 300,00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성장펀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및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2020.9.3.)」 등에 따라 조성된 정책형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2025년에 걸쳐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예산으로 3조원, 한국산업은행이 3조원, 성장사다리 펀드(운용사: 한국성장금융⁵²⁾)가 1조원 출자할 것을 계획하는 등, 정책자금으

52) 한국성장금융은 2013.8. '성장사다리 펀드'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출자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성장사다리 펀드 사무국'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6.2.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식회사'로 확대, 설립되었으며, 주주는 증권유관기관 출자회사인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 재단으로

로 총 7조원 투자를 계획하였으며, 민간자금으로 13조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연도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2021~2025)]

(단위: 억원)

사업년도	정책자금				민간 자금	조성목표
	재 정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소 계		
2021	6,000 ¹⁾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2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3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4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2025	6,000	6,000	2,000	14,000	26,000	40,000
합 계	30,000	30,000	10,000	70,000	130,000	200,000

주: 1) 당초 계획 대비 900억원 감소한 5,100억원 예산 확정

자료: 한국산업은행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분야는 2020년 9월 발표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⁵³⁾과 2020년 12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⁵⁴⁾에서 확정된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른 디지털 및 그린뉴딜의 총 40개 분야로 구체화 되어 있다.⁵⁵⁾

구성되어 있다.

53)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9.28.

54) 혁신성장을 담당하는 4개 정부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다.

55) 상기 뉴딜펀드 투자분야는 기 운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하여 선정된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별첨2〉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보도자료, 2020.9.28.)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산업 분야별 전문가 리서치 등을 거쳐 정책금융의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을 위해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별한 공동매뉴얼이다. 현재 투자 운용사의 혁신성장분야 자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혁신성장 분야는 9개 테마, 46개 분야, 296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분야]

구 분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세부분야
디지털 뉴딜 (31개)	로봇, 항공·우주, <u>바이오소재</u> , <u>에너지효율향상</u> , <u>스마트팜</u> , <u>친환경소비재</u> ,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u>실감형콘텐츠</u> ,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u>차세대반도체</u> ,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그린 뉴딜 (17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u>바이오소재</u>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u>에너지효율향상</u> , <u>스마트팜</u> , 환경개선, 환경보호, <u>친환경소비재</u> , 차세대치료, <u>실감형콘텐츠</u> , <u>차세대반도체</u> ,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주: 중복(밀줄) 8개 제외 시 40개 분야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기존의 뉴딜펀드 재편을 통해 조성되는 혁신성장펀드의 지원 분야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6.16.)⁵⁶⁾ 및 국정과제⁵⁷⁾ 등을 반영하여 ① 혁신산업 및 ② 성장지원 분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해당 분야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① ‘혁신산업’ 지원 분야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반도체, AI 등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의 신산업·전략산업을, ② ‘성장지원’ 분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분야로 대략적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성장펀드 지원 분야]

구 분	국정과제	내 용
혁신산업	18. (1)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2) 미래핵심기술/탄소중립/ESG 분야 지원 확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신산업·전략산업(반도체, AI 등의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중소벤처·중견기업 지원
성장지원	31. 재정 및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혁신 스케일업 펀드를 신규 조성	역량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중견·유니콘(기업가치 10억불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56)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발표”, 보도자료, 2022.6.16.

57)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7.

또한, 혁신성장펀드의 조성 규모 및 출자기관 등과 관련하여서도 2023~2027년의 5년간 연간 3조원씩 총 15조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뉴딜펀드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 등의 출자 규모, 비중 등에 대하여도 현재 협의 중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지원 분야 및 타 정책금융기관 출자 규모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의 지원 분야 및 타 금융기관 출자금액 등을 구체화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계획 과다 편성 가능성 검토 필요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⁵⁸⁾

2022년 8월까지의 정책모기지 공급액 11.2조원이 계획 19.0조원 대비 58.9%에 불과하는 등 최근의 정책모기지 공급 감소 추세 등 감안 시 2023년 계획안 상 반영된 정책모기지 공급이 계획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규모 적정성 평가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⁵⁹⁾은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비용 절감 및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 등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유동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는 2022년 추가경정 예산 1,590억원 대비 290억원(△18.2%) 감소한 1,300억원이 편성되었다.

58)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2022. 10., pp. 41~49 참조

59) 코드: 일반회계 2632-301

[2023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50,000	50,000	159,000	130,000	△29,000	△18.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은 최근의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대환⁶⁰⁾해 주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을 반영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에 31.7조원 규모로 1차로 진행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소득기준을 적용⁶¹⁾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공급되었다.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2022~2023년에 걸쳐 총 45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⁶²⁾에 따라 정책모기지 유동화증권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잔액 ÷ 자기자본)는 5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19년 2월 자체 용역을 통해 산정한 적정지급보증배수는 40.7배 수준⁶³⁾이다.

2023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예산 1,300억원은 2023년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44조원[(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포함) 24조원 및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이에 따른 2023년 말 41.9배의 지급보증배수를 적정지급보증

60) 5년 이상 만기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대상 대출에서 제외되며,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2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9.15일부터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22.9.15.)

61) 2015년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별도의 소득요건이 없었으나, 2019년 실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단,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다.

6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63) 2019년 2월 자체용역을 통해 산정한 적정 지급보증배수는 39.4~40.7배 수준이다.

배수 수준인 40.7배⁶⁴⁾로 낮추기 위한 자본 규모로 산정되었다.

[2023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예산 소요 상세 근거]

(단위: 조원, 억원, 배)

구 분	결 산	추 정	
	2021	2022 (예산)	2023 (예산안)
정책모기지(기초자산) 공급액	31.8조원	44.0조원	44.0조원
유동화증권 지급보증잔액(a)	1,492,524	1,669,444	1,893,382
자기자본(b)	37,604	41,044 ¹⁾	45,220 ²⁾
지급보증배수(a/b)	39.7	40.7	41.9
2023년 정부 출자 예산안 반영	-	-	1,300
지급보증배수(출자 후)	39.7	40.7	40.7

주: 1) 2022년 정부 출자예산(1,590억원) 및 한국은행 출자(1,200억원) 반영

2) 2023년 한국은행 출자액(3,300억원 수준, 현재 협의 중)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예산안 1,300억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정책모기지 공급액 24조원과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합한 총 44조원의 정책 모기지 공급을 위한 것이다. 또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기존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19조원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을 25조원으로 하여 총 44조원의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를 산정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상 정책모기지 공급액 반영(2022,2023)]

(단위: 조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기존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19.0	24.0
안심전환대출	25.0	20.0
합 계	44.0	44.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1년 1월~2022년 8월간의 월별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살펴보면, 최근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정책모기지 대출금리 상승⁶⁵⁾, 주택구입 수

64) 2023년 말 자기자본 추정액 4조 5,220억원은 현재 출자 협의 중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출자금액 3,30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제외할 경우 자기자본 추정액은 4조 1,920억원으로, 1,300억원의 2023년 정부 출자 예산안을 반영한 지급보증배수는 40.7배에서 43.8배로 상승하게 된다.

요 감소 등에 따라 월별 공급액이 2021년 1월 3조 2,458억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 8월에는 1조 1,901억원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2022년 8월까지의 2022년 총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 2,075억원으로, 최근의 감소 규모 확대를 별도로 감안하지 않고 단순 12개월로 환산하더라도 연간 16.8조원 수준의 정책모기지 공급이 예상되는 바, 이는 2022년 예산 상의 공급액 19조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2023년 예산안 상의 안심전환대출 외 기존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2022년 19조원 대비 5조원 증가한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존 정책모기지 공급 추정 규모인 2022년 19조원과 2023년 24조원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이를 2023년 예산안 적정 규모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65)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의 2021년 1월 ~ 2022년 8월간의 각 월별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28%, 적격대출의 경우 4.83%로, 2021년 1월 대비 각각 2.0%p, 2.23%p 상승하였으며, 2022년 1월과 비교 시 각각 1.12%p, 1.35%p 상승하는 등 2021년 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의 가중평균 대출금리 (2021~2022.8.)

(단위: %, %p)

구 분	2021년											
	1월 (a)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금자리론	2.28	2.39	2.45	2.48	2.58	2.69	2.76	2.80	2.82	2.85	2.95	3.08
적격대출	2.60	2.60	2.70	2.97	2.99	3.06	3.05	3.03	3.16	3.43	3.63	3.43
구 분	2022년											
	1월 (b)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c)	차 이			
									(c-a)	(c-b)		
보금자리론	3.16	3.16	3.21	3.37	3.61	3.81	4.13	4.28	2.00	1.12	-	
적격대출	3.48	3.60	3.90	3.99	4.42	4.74	4.97	4.83	2.23	1.35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별 정책모기지 공급액(2021.1~2022.8)]

(단위: 억원)

구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합계
2021	1월	24,174	3,188	5,096	32,458
	2월	25,506	4,129	9,805	39,440
	3월	25,077	4,287	7,894	37,259
	4월	22,930	3,843	3,685	30,458
	5월	20,491	3,728	2,276	26,495
	6월	16,413	3,593	1,887	21,893
	7월	16,692	4,390	2,498	23,580
	8월	17,141	4,542	3,960	25,643
	9월	16,892	4,318	3,515	24,726
	10월	18,122	2,889	2,858	23,869
	11월	16,830	888	1,033	18,752
	12월	13,139	22	181	13,342
	합계	233,409	39,817	44,689	317,915
2022	1월	10,354	1,272	1,477	13,104
	2월	11,089	2,562	1,971	15,623
	3월	10,631	3,189	1,218	15,038
	4월	9,605	3,338	2,425	15,368
	5월	8,929	4,111	1,464	14,503
	6월	10,637	4,801	493	15,930
	7월	6,772	3,556	281	10,610
	8월	6,693	4,844	365	11,901
	합계	74,709	27,673	9,693	112,075
	12개월 전환	112,064	41,510	14,540	168,113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제도 개요

기획평가관리비(이하 “기평비”라 한다)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 평가, 성과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평비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의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서의 과제 공모(제9조), 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제10조), 과제의 협약(제11조), 과제 수행 및 관리(제1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제13조), 과제의 평가(제14조), R&D 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16조), R&D 성과의 활용(제17조)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조 제3항은 이러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 이것이 전문기관에 대한 기평비 지원의 법률상 근거로 보인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에 대하여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여기서 말하는 ‘사용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 「연구관리 전문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기획평가비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동 문건에는 기평비 지급에 대한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기평비란 법령상 근거에 따라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³⁾에서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평비는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이 집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⁴⁾

기평비에는 통상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간접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인건비 및 간접비는 엄밀히 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획·평가·관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 간접비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기평비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법령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일부분 관행적으로 정립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실제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등 실무에서는 그 범위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기평비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2020년 부처별·분야별 현황 파악 및 총량 관리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360-06) 비목을 신설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기획·평가·관리 활동의 목적별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15개 전문기관의 기평비를 기관별·회계별로 통합 편성하여 일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였다(이를 약칭하여 “통합 기획평가관리비(기평비) 제도”라 한다). 따라서 2022년은 통합 기평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차연도라고 볼 수 있으며, 202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추가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기평비가 통합 편성되어 총 16개의 전문기관 기평비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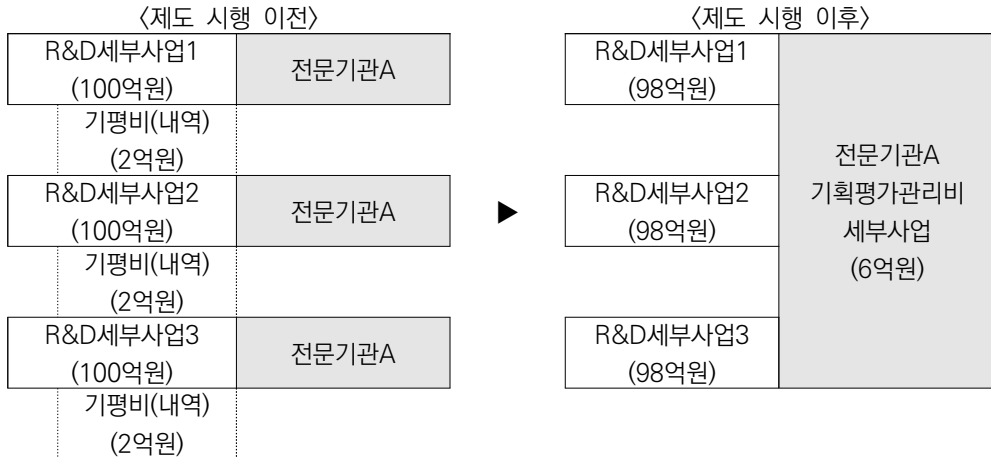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예외적으로 연구개발사업단 등 전문기관 외에도 기평비를 사용하는 주체가 있다. 다부처 사업에서의 사업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 기평비 제도 개요]



주: 1) 사업비 수치는 예시적으로 작성된 것임

2) 같은 전문기관이라도 재원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로 통합 기평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표에서는 단순화를 위하여 동일한 재원이라고 가정

나. 2022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에서의 통합 기평비 현황

통합 기평비 제도는 이전의 기평비 제도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종전 기평비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이 사용하는 기평비가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분산되어 존재하였다. 전문기관은 기획·평가·관리에 사용하게 되는 재원을 ①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 등으로) 존재하는 기평비, ②별도로 존재하는 기평비 사업, ③기관 운영출연금 등으로 충당하여 왔다.⁵⁾

통합 기평비 제도의 실시에 따라 각 주요 R&D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던 기평비가 전문기관과 회계별로 1~2개의 기평비 세부사업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기평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⁶⁾ 먼저 일반원칙은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에 소요된 기존의 편성예산 대비 실집행 예산을 근거로 경직성 경비(인건비·간접비), 비경직성 경비(기획·평가·성과관리비)를 구분하여 차년도 기획평가

5)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경우,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2031-403) 사업에서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를 충당하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1501-403) 사업에서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를 지원받았다.

6) 이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은 2020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기획평가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8면 이하).

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지금기준에서는 전문기관의 전년도 인건비와 경상비의 합을 기본(base)으로 적용 하되, 공공기관의 인건비 공통인상분과 기관운영계획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경직성 경비를 배분하고, 비경직성 경비의 경우 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유형(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역사업, 국제협력 등)과 세부과제의 수 등을 고려, 소관부처가 마련한 표준요율 등에 따라 기획비·평가비·관리비를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예산부터 통합 기평비가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12개 부처·청 소관 16개 전문기관의 통합 기평비가 편성된 정부제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6개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기관과 그 밖의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4개의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그 부설기관⁷⁾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지정의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합 기평비 대상 전문기관 목록]

전문기관명		기관 설치 근거	전문기관 지정 근거
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제1항제1호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제1항제2호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제1항제3호
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제1항제4호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제1항제5호

7)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 해당한다.

전문기관명		기관 설치 근거	전문기관 지정 근거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6호
7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7호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8호
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9호
10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0호
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1호
12	한국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2호
1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2호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2호
1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2호
16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민법」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제2항제2호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통합 기평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7개 전문기관의 경우 회계별로 2개 이상의 기평비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9개 전문기관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재원에 따라 1개의 통합 기평비 세부사업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기관별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목록]

전문기관명	기평비 사업		소관부처
	회계	세부사업명	
한국연구재단	일반회계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기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일반회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일반회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방발기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정진기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일반회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평가관리비	산업통상자원부
	소득회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평가관리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반회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균특회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소득회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예특회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중소벤처기업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중소벤처기업부
	소득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일반회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국토교통부
	균특회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반회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보건복지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일반회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해양수산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특회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특회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평가관리비	환경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일반회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획평가관리비	기상청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반회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일반회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일반회계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산림청

자료: 부처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통합 기평비가 편성된 2022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은 15개 전문기관에서 총 3,621억 5,400만원의 통합 기평비가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16개 전문기관에서 3,656억 6,500만원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기평비의 사용 목적이 되는 관리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평비는 연구개발비에서 평균 2.2~2.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전문기관명	2022예산			2023예산안		
	기평비	관리 연구개발비	비중	기평비	관리 연구개발비	비중
한국연구재단	54,817	5,137,501	1.1	55,594	5,270,513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8,423	2,847,199	2.7	79,336	3,034,789	2.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2,163	1,671,052	3.1	52,168	1,759,010	3.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647	606,321	3.4	19,816	579,768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338	712,114	1.7	13,297	689,410	1.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6,721	493,061	3.4	16,822	541,494	3.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404	224,075	2.9	6,363	210,175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707	301,765	3.2	8,881	296,346	3.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317	27,081	4.9	795	28,368	2.8
한국콘텐츠진흥원	5,111	121,259	4.2	5,133	122,359	4.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780	58,005	1.3	777	52,216	1.5
한국임업진흥원	1,873	52,733	3.6	1,858	50,986	3.6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2,679	1,332,000	2.5	33,284	1,392,196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7,281	1,411,520	2.6	36,205	1,360,493	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1,893	1,076,186	3.0	30,253	1,098,696	2.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5,083	163,023	3.1
합계	362,154	16,071,872	2.3	365,665	16,649,842	2.2

주. 비중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다. 통합 기평비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평비 총액 현황 비교

통합 기평비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총액 수준에서의 기평비 예산안 편성 및 심사가 가능해졌다. 여러 R&D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흩어져 있던 기평비를 전문기관과 재원에 따라 통합함으로써 부처·

재정당국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평비의 현황과 체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평비의 내역사업별 예·결산 분석이 용이하게 되었다. 통합된 총액 규모의 기평비를 기획비, 평가비, 관리비의 비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간접비의 정상적 경비로 구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평비를 내역사업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재정 효율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R&D사업에 기평비가 나뉘어 있어 전문기관이 사용하는 각 내역에 대해서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기평비의 5가지 내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내역별 편성의 타당성, 결산 심사 시 내역 간 전용 여부 등에 대해서 합계를 근거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 기평비 제도가 적용되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2020~2022년 기평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까지 4년간의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대상은 2023년도 예산에서 통합 기평비가 편성된 16개 전문기관이다. 2020~2021년의 경우 통합 기평비가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통합 기평비 이전의 전문기관 기평비 총액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2020년의 경우 16개 전문기관의 기평비 예산은 3,416억 700만원이었고, 2021년 예산에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22년과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13억 8,700만원 감액된 3,656억 6,500만원이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 총액은 2020년 13조 318억 2,000만 원에서 2023년 16조 6,498억 4,200만원으로 27.8%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기평비는 7% 증가하여 연구개발비 대비 기평비의 비중은 2020년 2.6%에서 2023년 2.2%로 감소하게 되었다.

[2020~2023년도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전문기관명	2020예산		2021예산		2022예산		2023예산안	
	기평비	비중	기평비	비중	기평비	비중	기평비	비중
한국연구재단	49,963	1.1	53,382	1.1	54,817	1.1	55,594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2,226	3.3	81,126	3.3	78,423	2.7	79,336	2.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7,536	4.1	51,165	3.8	52,163	3.1	52,168	3.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092	4.0	21,554	3.8	20,647	3.4	19,816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050	1.9	12,515	1.8	12,338	1.7	13,297	1.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2,700	3.6	14,289	3.3	16,721	3.4	16,822	3.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646	3.2	7,493	3.5	6,404	2.9	6,363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399	3.7	9,130	3.4	9,707	3.2	8,881	3.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37	3.2	813	3.1	1,317	4.9	795	2.8
한국콘텐츠진흥원	3,373	4.9	2,672	3.5	5,111	4.2	5,133	4.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701	2.1	701	1.1	780	1.3	777	1.5
한국임업진흥원	820	3.0	1,113	2.4	1,873	3.6	1,858	3.6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2,805	3.2	33,371	2.9	32,679	2.5	33,284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036	3.3	47,196	3.1	37,281	2.6	36,205	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089	3.3	33,027	3.3	31,893	3.0	30,253	2.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134	3.1	3,805	4.2	4,898	3.3	5,083	3.1
합계	341,607	2.6	373,352	2.5	367,052	2.3	365,665	2.2

주: 1) 비중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비중은 관리대상 연구개발사업비 대비 기평비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2021년에 전년 대비 관리대상 연구개발사업비가 14.2% 증가할 때 기평비 총액은 9.2% 증가하였으며, 통합 기평비가 편성된 2022년의 경우 연구개발사업비는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는데 기평비 총액은 1.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기평비 총액과 연구개발사업비 대비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기평비 총액의 변동은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증감만을 살펴본 것으로, 실제 각 전문기관별로 기평비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2020~2023년도 관리 대상 연구개발사업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0예산	2021예산	2022예산	2023예산안
한국연구재단	4,429,481	4,894,453	5,137,501	5,270,5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46,728	2,448,904	2,847,199	3,034,78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61,119	1,360,489	1,671,052	1,759,0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76,369	571,652	606,321	579,76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36,507	682,924	712,114	689,4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56,728	428,927	493,061	541,49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74,923	213,012	224,075	210,1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51,571	272,261	301,765	296,34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2,757	26,329	27,081	28,368
한국콘텐츠진흥원	69,457	76,684	121,259	122,359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3,549	65,582	58,005	52,216
한국임업진흥원	27,520	46,016	52,733	50,986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027,534	1,162,024	1,332,000	1,392,1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59,128	1,539,860	1,411,520	1,360,49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47,898	1,005,115	1,076,186	1,098,696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00,551	91,041	146,457	163,023
합계	13,031,820	14,885,273	16,218,329	16,649,842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라.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내역사업별 현황

(1) 기획비

기획비란,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예측, 기술수요조사, 특허 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사업 및 과제 기획업무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획의 유형은 중장기전략기획, 사업기획(예타), 사업기획(비예타), 과제기획, 사업개선기획의 5개로 분류되고⁸⁾, 기획의 유형별에 따라 기획규모(건수), 평균단가(월별) 및 소요기간(개

8) 이하에서 기평비의 각 항목과 유형에 대해서는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월)을 세부 산출한 후 기획비의 총 규모를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획의 유형과 개념]

기획유형	의미
중장기전략기획	분야별 로드맵 수립, 사전 기술수준조사, 기술동향조사 등 사업 방향성 확보를 위한 기획
사업기획(예타)	R&D 예타 사업, 신규·후속 세부사업을 기획
사업기획(비예타)	R&D 비예타 사업, 신규·후속 세부사업을 기획
과제기획	해당사업에서 수행하게 될 과제를 기획
사업개선기획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종합계획, 시행계획(연도별)의 수립 및 기획

자료: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

2022년 및 2023년도 예산(안)의 전문기관⁹⁾ 기획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은 2022년 495억 6,8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는 494억 4,700만원의 기획비를 편성하였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기획 활동에 따라 투입되는 기획 단가 및 기획 기관이 기관에 따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2023년도 기획 단가가 2,152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가장 낮은 400만원 수준이었다. 각각의 기획활동별로 기획기간과 기획단가를 곱하여 합하게 되면 기획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기획비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154개의 기획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 기간은 7.7개월, 기획단가는 1,220만원으로 총 기획비는 159억 2,3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9) 이하에서 ‘전문기관’이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통합 기평비가 편성된 전문기관을 의미하며, 2022년에는 15개 기관, 2023년도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포함하여 16개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도 2022년 기획, 평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통합 기평비가 편성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일부 항목에서는 누락되었다.

[전문기관별 기획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건, 개월,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예산				2023예산안			
	기획 활동수	기획 기간	기획 단가	기획비	기획 활동수	기획 기간	기획 단가	기획비
한국연구재단	150	7.8	6.4	7375	164	8.7	5.4	78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6	7.9	11.4	1561	154	7.77	12.2	15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6	6.07	1086	3650	59	6.27	11.27	399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	9.89	1895	3242	19	11.68	1481	323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10.25	9.6	786	15	10.4	9.4	10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1	7.8	9.9	2584	31	7.8	9.9	258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2	7.4	796	9	12	7.4	79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	4.46	2.9	229	11	4.09	4.0	19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6	17.5	105	1	6	17.5	105
한국콘텐츠진흥원	9	7.67	1826	1,162	9	5.56	21.52	1,05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	6	8.3	100	2	6	8.3	100
한국임업진흥원	10	6	14.5	868	7	6	20.7	86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8	5.86	7.15	4600	90	6.57	6.02	46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3	6	13.18	3399	37	6	14.62	3,2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5	8.27	8.13	5041	77	8.23	5.50	3,48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9	6.44	6.6	400
합계	49,568				49,447			

주: 1) 기획기간과 기획단가는 기관별 평균값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기획비 예산 편성 현황을 기획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분야나 대상, 규모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 기획 활동에 가장 많은 기획비가 편성되었다(142억 2,600만원). 다음으로는 로드맵의 수립이나 시장조사 등 중장기 전략기획에 투입되는 비용이 133억 8,300만원으로 많았다.

[기획유형에 따른 기획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중장기 전략기획	사업기획 (예타)	사업기획 (비예타)	과제기획	사업개선 기획	중장기 전략기획	사업기획 (예타)	사업기획 (비예타)	과제기획	사업개선 기획
한국연구 재단	3,650	569	711	1,453	992	3,418	1,252	642	1,803	742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5,823	1,595	1,297	6,681	235	4,853	1,364	1,523	6,182	2,001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967	1,181	446	390	666	1,109	1,306	504	389	684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1,918	205	310	-	809	1,082	1,196	240	-	720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50	250	180	-	206	-	600	310	-	100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609	455	760	260	500	609	455	760	260	500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217	216	151	212	-	149	284	151	212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125	-	-	104	-	110	-	-	86	-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	-	105	-	-	-	-	105	-	-
한국콘텐츠 진흥원	287	175	150	500	50	100	-	200	752	-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	-	50	50	-	-	-	50	50	-
한국임업 진흥원	80	200	508	-	80	200	300	368	-	-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910	750	1,137	1,623	180	800	750	1,126	1,868	55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80	357	371	1,880	511	350	276	333	1,815	470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449	1,534	715	1,473	556	672	859	309	820	282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	-	-	-	-	80	120	100	50	50
합계	15,248	7,488	6,956	14,565	4,997	13,383	8,627	6,854	14,226	5,816

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2) 평가비

평가비란, 과제공모·선정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등 사업과 과제의 평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평가비의 유형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종료평가, 기타평가로 나뉘며, 이는 통상 사업에서 과제 선정, 중단 단계, 최종 단계를 거치는 것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과제가 3개이고, 각 과제별로 단계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단계평가에서의 과제당 단가가 100만원인 경우, 단계평가에서의 평가비는 $3 \times 3 \times 100\text{만원} = 900\text{만원}$ 이 된다.

[평가의 유형과 개념]

기획유형	의미
선정평가	신규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의 신규 과제 등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평가	선정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성과 평정을 위한 평가
종료평가	종료(종료 예정) 사업 또는 과제의 최종 성과 평정을 위한 평가
기타평가	사업 또는 과제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연차평가 등 평가

자료: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

2022년 및 2023년도 예산(안)의 전문기관 평가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의 관리대상 사업 수는 2022년 983개, 2023년도 예산안은 1,066개이며 관리 과제 수는 각각 5만 1,257개, 5만 4,720개이다. 전문기관들이 기획·평가·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관리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2022년 15조 9,588억 4,4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16조 5,853억 4,200만원에 이른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평가비가 편성된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으로, 135억 5,600만원의 평가비가 산정되어 있다.

[전문기관별 평가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				2023			
	관리대상 사업 수	관리 과제 수	관리 대상사업비	평가비	관리대상 사업 수	관리 과제 수	관리 대상사업비	평가비
한국연구재단	202	30,577	5,137,501	13,241	220	35,618	5,270,513	13,55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6	2,310	279,594	7,928	142	2,897	308,479	8,05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5	11,906	1,612,568	9,449	42	9,943	1,700,220	9,26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7	428	606,321	1,026	129	285	579,768	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4	689	712,114	1,511	70	700	689,410	1,73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4	349	493,061	838	102	399	541,494	91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3	462	224,075	1,212	19	454	210,175	1,2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0	357	301,765	1,371	37	316	296,346	1,57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9	63	27,081	64	8	55	28,368	51
한국콘텐츠진흥원	12	118	118,262	878	12	139	119,379	8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6	196	57,963	112	7	179	52,216	133
한국임업진흥원	12	187	52,733	200	11	157	50,986	16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96	1,392	1,332,000	3,075	103	1,241	1,392,196	3,27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2	1,472	1,411,520	4,546	61	1,371	1,360,493	4,6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5	751	1,076,186	1,967	87	748	1,098,696	1,40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16	218	160,293	760
합계	983	51,257	15,988,444	47,418	1,066	54,720	16,853,422	48,564

주: 1) 일부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평가유형에 따른 평가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에서의 신규 과제 선정에 투입되는 비용(선정평가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1억 6,100만원).

[평가유형에 따른 평가비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선정	단계	종료	기타	선정	단계	종료	기타
한국연구재단	10,429	458	926	1,428	10,182	587	963	1,8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950	1,104	1,546	2,328	2,673	763	1,595	3,0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433	-	774	242	8,194	-	677	39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3	163	295	375	559	156	95	1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73	25	274	539	795	42	339	56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36	30	164	308	307	88	130	38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94	487	247	84	729	152	265	6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15	311	85	360	452	170	296	65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8	6	12	8	25	6	12	8
한국콘텐츠진흥원	484	163	106	125	519	126	106	11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3	5	21	63	28	80	17	8
한국임업진흥원	90	-	35	75	95	-	55	1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491	645	795	144	1,611	579	825	2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54	224	887	1,481	2,213	280	1,096	1,05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53	28	344	642	559	33	210	599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220	144	240	156
합계	29,056	3,649	6,511	8,202	29,161	3,206	6,921	9,276

주: 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3) 관리비

관리비란,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성과조사 등 과제 종료 후의 성과확산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관리의 유형은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관리, 별도조직운영의 4개로 분류되고 있으며, 통합 기평비에서의 관리비 역시 이러한 유형에 맞추어 내역을 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제비의 정산에 필요한 회계 위탁 비용이나 성과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특허분석에 들어가는 비용, 시스템의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한 비용, 연구개발사업단 등 별도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관리비 또는 기획평가관리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된다.

[관리의 유형과 개념]

관리유형	의미
일반관리	○ R&D사업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진도관리’, ‘과제정산’, ‘법률자문’, ‘기타 일반관리’ 등으로 세부구분 - 사업진도관리: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소모품 등), 마일스톤관리, 실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 과제정산: 회계위탁 등 과제정산에 소요되는 예산 - 법률자문: 사업·과제의 수행 및 운영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예산 - 기타: 일반관리 내 세부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내역 (예: 시설장비 도입 심의비)
성과관리	○ R&D사업의 성과확산 및 성과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며, ‘성과확산 목적의 행사개최’, ‘성과확산을 위한 특허분석’, ‘기술료 징수’, ‘종료사업 사후관리’, ‘기타 성과관리’ 등으로 세부구분
시스템관리	○ R&D 관리사업 및 사업군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시스템구매’, ‘시스템유지’, ‘시스템관리보수비’로 세부유형 구분 - 시스템구매: 기관의 자산이 되는 시스템·프로그램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 - 시스템유지관리: 프로그램, 장비의 수리·개선 및 임차에 대한 소요예산 ※ 평가회의장, 콜센터 운영 등은 고정된 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유형에 해당
별도조직 운영비	○ 기획평가관리비(360-06비목) 중 사업단 등 R&D 사업의 별도관리 목적 예산으로 전문기관과 별도조직의 사업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을 구분 - 별도조직 관리비: 사업단 등 별도의 R&D사업 관리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집행하는 예산 - 별도조직 기평비: R&D사업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평비 목적으로 별도조직이 집행하는 예산

자료: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

2022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의 전문기관 평가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전문기관의 관리비 예산은 2022년 834억 6,7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는 797억 6,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기관의 관리비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스템 관리비로, 2022년 예산의 경우 250억 5,4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23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문기관별 관리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					2023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관리	별도조직 운영비	소계 (관리비)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관리	별도조직 운영비	소계 (관리비)
한국연구재단	2,902	928	413	-	4,253	3,129	768	340	-	4,23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60	4,663	6,604	1,765	15,192	1,580	3,924	7,957	1,731	15,19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874	3,413	5,630	10,195	24,112	4,552	3,483	5,202	10,856	24,09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391	900	2,458	-	4,749	950	1,026	1,346	-	3,3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85	744	714	-	2,043	555	790	714	-	2,05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269	1,655	1,480	-	4,404	1,377	1,796	1,606	-	4,77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64	1,676	600	950	3,890	664	1,456	600	1,120	3,84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11	1,199	1,017	69	3,096	811	915	455	-	2,18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1	102	555	-	708	51	102	46	-	199
한국콘텐츠진흥원	780	210	600	-	1,590	595	445	400	-	1,440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39	230	199	-	568	64	293	157	-	514
한국임업진흥원	67	318	229	-	614	91	403	145	-	63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499	2,897	1,767	-	6,163	1,600	2,946	1,767	-	6,3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11	3,956	485	420	7,672	2,365	3,658	434	509	6,96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64	1,163	2,303	383	4,413	253	498	2,311	-	3,06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299	180	170	280	929
합계	20,567	24,054	25,054	13,782	83,467	18,936	22,683	23,650	14,496	79,765

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4) 인건비

인건비란,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 기평비에서의 인건비는 전문기관에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외부 인건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⁰⁾. 예를 들어 기획·평가·관리에 투입되는 전문기관의

10) 전문기관이 기관 전체 인건비를 모두 기평비를 통하여 보전받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전문기관은 기관운영출연금을 별도로 받고, 해당 출연금에는 인건비, 경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정부

직원은 직급에 따라 인건비가 편성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ject Manager), 개방형 계약직 등은 외부 인건비로 분류되어 인건비가 편성된다.

또한, 여기서의 인건비는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뜻하고, 그 외에 기획·평가·관리의 지원 또는 관리를 위한 간접 수행 인력에 대한 비용은 후술하는 간접비로 편성하고 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인건비 유형]

인력유형		의미
고용 형태	내부인력	기관에서 관리하는 고용형태가 정규직, 무기직, 공무원 등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인력
	외부인력	기관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 인력

자료: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에서 재작성

2022년 및 2023년도 예산(안)의 전문기관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은 2022년 1,587억 2,200만원(내부인건비 1,232억 3,800만원+외부인건비 121억 4,700만원)의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는 1,457억 6,800만원(내부인건비 1,290억 2,600만원+외부인건비 16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전문기관별 인건비 2022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예산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계 (인건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소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소계	
한국연구재단	265	70.7	18,728	60	77	4,610	23,3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53	549.08	24,916	22	360	3,960	28,87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5	58.7	10,273	49	71.6	3,506	13,77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5	99	8,322	12	78	843	9,1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3	72.3	6,830	5	87.5	280	7,1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7	559.7	5,831	-	-	-	5,83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	14	36.1	506	5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0	657.3	3,982	-	-	-	3,98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6	67.6	373	-	-	-	373

수탁과제 등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기관도 있다.

전문기관명	2022예산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계 (인건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소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소계	
한국콘텐츠진흥원	17	213	769	4	369	712	1,48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	-	-	-	-	-
한국임업진흥원	2	55.5	111	-	-	-	11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57	510.57	15,034	-	-	-	15,0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3	76.93	14,078	-	-	-	14,07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86	75.22	13,992	33	70.90	2,340	16,33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2,181
합계			123,238			12,147	158,722

[전문기관별 인건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3예산안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계 (인건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소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소계	
한국연구재단	265	71.9	19,046	60	77.8	4,657	23,70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63	533.25	25,227	23	360	4,140	29,36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5	59.7	10,447	41	78.0	3,196	13,64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5	100	8,925	12	100	896	9,8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3	72.3	7,159	6	100.3	406	7,56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7	569.2	5,930	-	-	-	5,93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	14	36.8	515	5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0	667.3	4,050	-	-	-	4,05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6	67.6	373	-	-	-	373
한국콘텐츠진흥원	23	175	925	5	246	390	1,31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	-	-	-	-	-
한국임업진흥원	2	30	60	1	1	51	11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57.2	519.24	15,289	-	-	-	15,28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1	80.95	13,843	-	-	-	13,84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88	82.41	15,494	33	75.48	2,491	17,984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0	75.25	2,258	-	-	-	2,258
합계			129,026			16,743	145,768

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5) 간접비

간접비란 사업관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운용지원,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 각종 용역사업 등에 활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간접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다. 동법 제13조제3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¹¹⁾하고 있으며,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정산 방법 및 절차, 계상 기준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고 있다.

간접비의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통합 기평비에서의 간접비 항목 역시 이와 같이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2022년 및 2023년도 예산(안)의 전문기관 평가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은 2022년 예산으로 415억 6,0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4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전문기관별 간접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예산	2023예산안
한국연구재단	6,610	6,24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796	10,79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73	1,17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465	2,4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88	92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064	2,61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84	88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67	67
한국콘텐츠진흥원	-	4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30
한국임업진흥원	80	8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807	3,80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586	7,5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140	4,32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736
합계	41,560	42,120

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마. 분석 의견

(1)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제도 적용 대상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검토 필요

현재 통합 기평비 제도를 적용받는 전문기관은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6개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데도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비로 기평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들 수 있다. 동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¹²⁾에 따라 설립되었다. 연구개발특구란 같은 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¹³⁾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러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사업, 제도지원, 특구의 개발 및 관리, 인프라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세부사업으로부터 기평비를 보전받고 있다. 동 기관의 기평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의 경우 3개 세부사업에서 23억 9,4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4개 세부사업에서 37억 4,800만원의 연구개발 기평비를 편성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사업비	기평비	사업비	기평비
연구개발특구육성	136,839	1,890	128,309	3,03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2,758	400	17,491	400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11,601	104	15,654	154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	-	7,656	156
합계	171,198	2,394	169,110	3,748

주. 기평비는 연구개발 기평비(360-06목)만을 의미하고, 사업은 해당 기평비가 편성된 사업만 기재하였음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와 같이 R&D 과제의 기획, 공모·선정, 관리 등 타 전문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통합 기평비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른 전문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통합 기평비는 7억 7,700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통합 기평비는 7억 9,500만원이어서 연구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13) 1970년대부터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개발 중점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광주특구·대구특구(2011), 부산특구(2012), 전북특구(2015)가 추가되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시작되어 2012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발특구진흥재단보다 더 적은 규모의 기평비를 받는 전문기관도 통합 기평비 적용 기관인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전문기관명	2022예산			2023예산안		
	기평비	관리 연구개발비	비중	기평비	관리 연구개발비	비중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317	27,081	4.9	795	28,368	2.8
한국콘텐츠진흥원	5,111	121,259	4.2	5,133	122,359	4.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780	58,005	1.3	777	52,216	1.5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5,083	163,023	3.1

주: 1) 비중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표의 전문기관은 비교를 위하여 16개 전문기관 중 통합 기평비 규모가 작은 4개 기관을 선별하여 표기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에도 2023년도 예산안 개별 R&D 사업에서 연구개발 기평비를 수령하는 기관으로서 통합 기평비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¹⁴⁾ 산하 민군협력진흥원¹⁵⁾이 있다. 동 기관의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여러 R&D 사업으로부터 기획평가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14) 방위사업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15) 민군협력진흥원은 그동안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전담 수행해 온 민군기술협력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국방기술사업부가 통합되어 2014년 1월 설립된 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기관이다.

[민군협력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사업비	기평비	사업비	기평비
민군기술협력(과기부)	-	-	2,926	92
민군기술협력(산자부)	18,298	400	16,954	307
IoT기반함정 정비통합관제 플랫폼 개발(산자부)	832	32	1,248	48

주. 기평비는 연구개발 기평비(360-06목)만을 의미하고, 사업은 해당 기평비가 편성된 사업만 기재하였음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 기평비(360-06목)를 수령하는 모든 기관을 전부 통합 기평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통합 기평비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통합 기평비 제도를 2022년 처음 시행한 만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¹⁶⁾

(2) 인건비 산출 시 기평비 재원비중의 결정 기준 명확화 필요

통합 기평비의 내역인 인건비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는 참여 인력의 수(명)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곱한 후, 여기에 기평비 재원비중(%)를 곱하여 산정된다. 기평비 재원비중이란, 해당 인력이 기획평가관리비로부터 인건비를 보전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건비 산출 방식]

$$\text{유형별 인건비(백만원)} = \text{참여인력(명)} \times \text{평균인건비(백만원/명)} \times \text{기평비재원비중(\%)}$$

자료: 기획평가관리비 요구서 작성요령

16)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2년 통합 기평비 적용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12개와 기평비 총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평비 재원비중’은 해당 인력이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에 기여하는 정도로서의 참여율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체 인건비 지출한도에서, 어느 정도를 기평비로 보전받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즉, ‘기평비 재원비중’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의 예산안 편성보다는 한도에 맞춰 이루어지는(top-down) 예산안 편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기평비에서의 인건비는 기획·평가·관리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어야 하므로 참여율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실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예상) 전체 인건비에서 다른 재원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액에 맞추어 기평비에서의 인건비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서 기평비로 보전받는 인건비를 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2급, 3급 등 직급에 따라 기평비 재원 비중은 5%, 20.1% 등으로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 각 비율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직원이 정해진 비율(%) 한도에서만 R&D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각 직급에서의 직원은 해당 기평비 재원 비중에 따른 비율만큼을 기평비로부터 보전받을 뿐이다.¹⁷⁾ 각 직급에서의 기평비 재원 비중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2023년도 기평비(인건비) 세부 산출 내역은 2022년 예산과 완전히 동일하다.

17)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통합 기평비 외에 2023년도 예산안에서 기관운영출연금(84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획평가관리비(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직급	2022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기평비 재원 비중	소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기평비 재원 비중	소계
2급	1	100	5	5	1	100	5	5
3급	2	92	20.1	37	2	92	20.1	37
4급	2	60	30	36	2	60	30	36
5급	3	50	50	75	3	50	50	75
6급	8	36	76.4	220	8	36	76.4	220
합계	16	-	-	373	16	-	-	373

주: 1) 소계는 각 직급에서의 참여인력×평균인건비×기평비 재원 비중의 결과값임. 또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외부 인건비를 별도로 통합 기평비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음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2022년 예산에서는 책임급, 선임급 등 각 직급에 따라 기평비 재원 비중을 각 63%로 산정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68%, 69.4%, 63% 등으로 다르게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평비 재원 비중의 변경에 따라 동 기관의 기평비(인건비)는 2022년 91억 6,500만원에서 2023년도 예산안 98억 2,1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총 인건비 예상 소요와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52억 400만원), 2022년 인건비 상승률(약 1.4%) 등을 고려하여 기평비(인건비)를 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직급	2022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기평비 재원 비중	소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기평비 재원 비중	소계
책임급	17	147	63	1,861	17	149	68	2,031
선임급	37	87	63	2,300	37	88	68	2,518
원급	49	63	63	1,945	49	64	69.4	2,176
책임급*	8	147	63	838	8	149	63	854
선임급*	19	87	63	1,228	19	88	63	1,236
원급*	25	63	63	992	25	64	63	1,008
합계	155	-	-	9,165	155	-	-	9,821

주: 1) 소계는 각 직급에서의 참여인력×평균인건비×기평비 재원 비중의 결과값임. 또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직급 항목에서 * 항목은 교특회계 통합 기평비로 편성된 인건비를 의미함. 그 외 직급은 일반 회계로 편성된 인건비임

3) 표에 제시된 항목은 기평비(인건비) 중 내부인건비만 기재하였으며, 외부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역시 기평비 재원 비중이 직급에 따라 상이하거나, 전년도에 비하여 변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2022년 기평비(인건비)에서는 내부 직원 175명¹⁸⁾의 인건비 중 77%, 12.6%, 10.4%를 각각 일반회계, 소특회계, 균특회계에서 나누어 배치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해당 비율이 79.1%, 10.2%, 10.7%로 변경되었다. 각 직급별 인건비 단가나 참여인력 수는 일반회계, 소특회계, 균특회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8) 1급 3명, 2급 9명, 3급 46명, 4급 72명, 무기계약직 44명, 별도직군 1명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재원	2022년 인건비			2023년도 예산안		
	기평비 재원 비중	인건비 (계)	참여 인력 수	기평비 재원 비중	인건비 (계)	참여 인력 수
일반회계	77.0	7,908	175	79.1	8,260	175
소특회계	12.6	1,293		10.2	1,067	
균특회계	10.4	1,072		10.7	1,120	
계	100	10,273		100	10,447	

주: 1) 표에 제시된 항목은 기평비(인건비) 중 내부인건비만 기재하였으며, 외부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2022년 기평비(인건비)에서는 1급 전임급 2명에 대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2급 전임급 2명, 전문계약직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전임급 2명에 대해서는 기평비 재원비중을 75%로 산정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산림청의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일반회계 1542-300) 사업에 2023년도 예산안 249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내역사업은 157억 3,200만원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직급	2022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기평비 재원 비중	소계	참여 인력	평균 인건비	기평비 재원 비중	소계
전임급(1급)	2	55.5	100	111	-	-	-	-
전임급(2급)	-	-	-	-	2	39.9	75	59.8
전문계약직	-	-	-	-	1	51.2	100	51.2
합계	2	-	-	111	3	-	-	111

주: 1) 소계는 각 직급에서의 참여인력×평균인건비×기평비 재원 비중의 결과값임. 또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문계약직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었음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전문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 전체의 인건비를 통합 기평비에서 보전받지 못하고 차년도 인건비의 100%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소관 부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한도를 기준으로 인건비 세부 내역을 조정하게 된다. 인건비의 산출식에서 참여 인력의 수와 평균 인건비(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사실상 기평비 재원 비중이 인건비의 한도를 맞출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평비 재원 비중이 이처럼 활용될 경우, 전문기관이 받을 인건비 규모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의 지출 한도나 부처-재정당국 간 협의와 같은 내용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평비 재원 비중의 산정이 실질적인 직원의 참여율이 아니라 기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기평비 재원 비중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인건비 보전이라는 기능과 기획·평가·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적정한 산정이라는 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⁹⁾

(3) 별도조직 운영비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통합 기평비에서는 관리비의 세부내역으로 별도조직 운영비를 두고 있는데, 일부 전문기관의 경우 별도조직에 대하여 통합 기평비로 편성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별도조직 운영비의 편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 기평비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R&D사업에 내역으로 별도 편성된 연구개발 기평비(360-06)를 통합 기평비 대상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하나는 통합 기평비 대상 전문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이 기평비를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이며, ②다른 하나는 통합 기평비 대상 전문기관에서 설치한 별도의 조직인 사업단 등에서 기평비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통합 기평비 적용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

19)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통합 기평비에서의 인건비는 고용형태 및 직급 유형에 따른 인건비 중 기획평가관리비 재원 지원 비중(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참여인력 및 기평비재원비중 산정 시 전체 기획/평가물량, 건당 필요인력 및 인당 투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예산안에서 기평비가 사업비의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²⁰⁾ 다만, ②의 경우는 통합 기평비 중 ‘관리비’ 항목으로 별도조직 운영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조직 운영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업단 등 별도의 조직에 대한 관리, 운영 및 기획·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통합 기평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도조직 운영비’를 편성한 전문기관은 총 5개이며, 총 144억 9,600만원이다.

[전문기관별 관리비 내 별도조직 운영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2022					2023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관리	별도조직 운영비	소계 (관리비)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관리	별도조직 운영비	소계 (관리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60	4,663	6,604	1,765	15,192	1,580	3,924	7,957	1,731	15,19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874	3,413	5,630	10,195	24,112	4,552	3,483	5,202	10,856	24,09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64	1,676	600	950	3,890	664	1,456	600	1,120	3,8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11	3,956	485	420	7,672	2,365	3,658	434	509	6,966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299	180	170	280	929
합계	10,509	13,708	13,319	13,330	50,866	9,460	12,701	14,363	14,496	51,020

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 통합 기평비 편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2023년도 예산안에 별도조직 운영비를 편성한 5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별도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총 5개 전문기관에서 14개 기관에 대해 별도조직 운영비를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20) 다만, 해당 기관이 통합 기평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선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5개 전문기관의 별도조직 운영(안)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별도조직명	관련 사업명	23년도 기평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항공기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등	591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710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소재부품기술개발	430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활용상용화기술개발	200
	한국산학연합회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 ²¹⁾	1,16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6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059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59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996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지역특화산업육성	3,8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33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개발	1,120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역협력혁신성장	509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한국연구산업협회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	180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

그런데 ‘별도조직’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별도조직 운영비의 편성 기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설치하는 사업단 외에도 이미 민간에 존재하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에도 별도조직 운영비를 일부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조직 운영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평가관리비(360-06비목) 중 사업단 등 R&D 사업의 별도관리 목적 예산으로 전문기관과 별도조직의 사업관리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별도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별도조직 관리비)과

21) 한국산학연합회의 경우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외에도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조직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별도조직이 집행하는 비용(별도조직 기평비)으로 나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분류 외에 세부적인 기준은 없어 혼선이 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사례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예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테크브릿지활용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플랫폼 ‘테크브릿지’를 이용해서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를 연결해 주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단은 아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플랫폼을 사용하고, 기술사업화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시 사업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단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에서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통합 기평비를 편성받는 전문기관이지만 통합 기평비 내 별도조직 운영비로서 ‘다른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 일부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한 비용을 편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별도조직 운영비 편성 사유]

기관명	사업명	주요역할
한국엔젤 투자협회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 위탁사유: 투자자 관리 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① (운영사 관리)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등 ② (창업팀 관리) 발굴추천,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점검 등
지역 평가단	지역특화 산업R&D	■ 위탁사유: 지역 기반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R&D 기획평가관리 업무 수행 ■ 위탁업무: 지역특화산업R&D사업 기획, 평가, 관리
산학연 협회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 위탁사유: 대학·연구기관 등 관리 및 사업수행 전문성 보유 (‘07~’14)전문기관, (‘18~’21)관리기관) ■ 위탁업무 ①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관리: 사업신청기관 대상 자격검토 등을 통해 수행기관으로의 선정 및 현장밀착형

기관명	사업명	주요역할
		사업 지원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바우처 활용 관리: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바우처 구매·이용·환불 등 행정업무 수행 ③ 연구시설·장비 및 인프라 관리: 대학·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장비 및 인프라 서비스 관련 ZEUS 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관리 수행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 위탁사유: 산·학·연 간 네트워크 활용 및 관리 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① 수요처 적합성 검토: 참여기관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자격검토 ② 컨소시엄 운영·관리 내실화: 보급·확산위원회 분기별 실적 점검, 기술교류 및 소통 활성화 도모 ③ 과제개발 진척도 관리: 공동수요 R&D 진도점검 및 교육, 개발점검표 관리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수요처)	■ 위탁사유: 산·학·연 간 네트워크 및 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국내 수요처 관리, 사업홍보, 과제 발굴, 수요처 적격성 검토 등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위탁사유: 산·학·연 간 네트워크 및 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대학-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산학연 연구인력양성 사업 관리
대중소 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투자기업)	■ 위탁사유: 투자기업 협력기금 관리 등 기관 고유 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공동투자형 과제 발굴·관리, 투자기업 적격성검토, 투자기업 협력기금 관리 구매실적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국방기술 진흥 연구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국내수요처)	■ 위탁사유: 국방분야 기술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국방분야 과제발굴관리,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 민·군기술협력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8호

기관명	사업명	주요역할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위탁사유: 민간투자 연계에 대한 전문성 보유 ■ 위탁업무: 시장확대형과제 중 민간투자연계과제 신청기업의 민간 투자 적격 여부 확인 및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세미나, 상담회 등), 후속 투자유치 지원 및 지원기업 사후관리 등
기술 보증기금	Tech-Bridge 활용상용화 기술개발	■ 위탁사유: 기술이전 플랫폼 및 기술사업화 평가 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기술이전 공급·수요 매칭 과제 발굴·관리, 기업·기술사업화 가능성 평가(KTRS평가)·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자금 보증 프로그램 지원 등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위탁사유: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활용 ■ 위탁업무: 해외수요처 과제발굴 및 관리, 글로벌기업 대상 수요 과제 발굴 등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R&D) 사업(일반회계 4602-308)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비 204억 500만원의 내역으로 연구개발 기평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시행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통합 기평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4,700만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 해당 금액은 사업 중 기술애로해결 부문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평비로 사용할 계획이다.²²⁾

[연구산업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사업비	기평비	사업비	기평비
연구산업육성(R&D)	22,520	862	20,405	47

주. 기평비는 연구개발 기평비(360-06목)만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의 2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전문기관이 R&D사업에서의 기획·평가·관리 업무

22) 참고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지원'(4602-409) 사업에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360-06) 4억 1,400만원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어떤 사례에서는 이를 통합 기평비 내 별도조직 운영비로 편성하고, 어떤 사례에서는 R&D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평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별도조직 운영비의 경우 여러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별도조직의 개념과 별도조직 운영비의 예산편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4)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일부 미통합된 기획평가관리비(360-06)의 이관 필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일부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360-06)가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으로 통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가 있어, 관련 예산의 이관이 필요하다.

통합 기평비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에서의 기평비(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60-06)는 관련 전문기관의 통합 기평비 세부사업으로 흡수되어, 개별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기평비는 2023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로 편성되는 예산 중 기평비가 존재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목은 통합 기평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통합 기평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²³⁾은 국토교통부 소관 R&D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2022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별도로 기평비를 편성받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²⁴⁾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평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연구개발 기평비 46억 9,500만원은 통합 기평비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²⁵⁾

한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전문기관이며, 역시 같은 부처의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이다. 동 기관의 경우 2022년 예산부

23)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4) 코드: 일반회계 4153-301

25)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p.182 참조

터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3개 재원으로부터 통합 기평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²⁶⁾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비 498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서 내역사업으로 추진단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기평비 3억 5,000만원을 산정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단과 같은 별도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지 않고, 추후 계약직 인력 등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내·외부 직원을 활용하여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2년 예산에서는 기평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통합 기평비에서 사용하였음에도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기평비를 따로 편성하였다.²⁷⁾

[2023년도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안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본예산	수정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 원천기술개발	37,125	37,125	-	37,125	37,125	49,850
AI학습능력개선기술개 발(360-05)	15,000	15,000	-	15,000	15,000	20,000
AI활용성개선기술개발 (360-05)	22,125	22,125	-	22,125	22,125	29,500
추진단운영(360-06)	-	-	-	-	-	35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예산안 3억 5,000만원의 경우 추진단의 직접비(계약직원 인건비, 신규과제 기획비, 과제 평가관리비, 행사비 등)와 간접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26) 코드: 일반회계 2601-312

27)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는 사업 2차년도부터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복수형·병렬형 과제 대상 기술협력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서 기평비를 따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 사업비에 편성된 기평비는 통합 기평비 세부사업으로 이관조정하기보다 사업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별도 편성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대형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	세부내역	금액	내용
직 접 비	인건비	계약직원 인건비 78백만원×2명 ×10/12개월	13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직원 인건비 수준 준용 *채용절차(약 2개월) 소요기간 고려
	연구 활동비	신규과제 기획비	20	'24년 신규과제 기획위원회 운영 등 소요비용
		수행과제 평가관리비	86	진도점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소요비용
		워크숍 등 행사비	94	기술협력 워크숍, 대외 성과 홍보 등 소요비용
	직접비 소계		330	
간접비	기관 운영비		20	기관 경비
합계			35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위에 열거된 사업들은 R&D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비 역시 연구개발 예산인 연구 개발활동비(360-05)와 기획평가관리비(360-06) 비목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비에 편성된 기평비는 전문기관이 사용하는 통합 기평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통합 기평비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5) 비R&D 사업에서의 기획평가관리비 미편성 사례 점검 필요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제도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고 비R&D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비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 기평비 제도는 주요 R&D 예산의 증가에 따른 전문기관 운영의 효율화 필요성, 복잡한 기평비 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현재로서는 주요 R&D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대부분의 주요 R&D 사업에서의 기평비는 관련 전문기관의 기평비로 통합된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부 전문기관의 경우, R&D 사업이 아닌 사업(비R&D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이러한 비R&D 사업에서 기평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시스템반도체IPBank 플랫폼 구축사업,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사업,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 등 3개의 비R&D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들의 경우 2022년까지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평비가 각각 1억 1,600만원, 1억 9,500만원, 1억 7,000만원이 편성(총 4억 8,100만원)되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사업 내 기평비가 편성되지 아니하였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사업출연금(350-02) 등 비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

[2023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안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 현액	집행액	기평비	
	당초	수정					
시스템반도체IPBank 플랫폼구축사업 (3171-315)	3,320	3,320	-	3,320	3,320	116	5,022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 환경조성사업 (3171-304)	5,605	5,605	-	5,605	5,605	195	5,955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3171-372)	4,500	4,500	-	4,500	4,500	170	7,550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면, 유사하게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면서도 비R&D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비R&D 사업에 별도로 내역사업으로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1톤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사업,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다수 비R&D 사업에서 기평비가 별도의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획평가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된 비R&D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22.7월말)					2023 계획안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당초	수정				
1톤미만화물전기차모듈및차량사업화지원(350-02)	2,200	2,200	-	2,200	2,200	8,272
1톤미만화물전기차모듈및차량사업화지원	2,140	2,140	-	2,140	2,140	8,032
기획평가관리비	60	60	-	60	60	240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 기업지원플랫폼구축(350-02)	-	-	-	-	-	1,000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 기업지원플랫폼구축	-	-	-	-	-	970
기획평가관리비	-	-	-	-	-	3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 기획평가관리비 제도에서 일반 출연금 사업에서의 기획평가관리비까지 모두 통합하려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상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비 R&D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평가관리비를 사업비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통합 기평비 세부사업과 위 3개 사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기획평가관리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99-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157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